2003 심포지엄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8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시 2003년 6월 10일~11일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 주최 (재)서울여성 | 후원 서울특별시, 여성부, 중앙일보 |

2003 심포지엄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재단법인 서울여성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심포지엄

· 일시 : 2003년 6월 10일~11일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 6월 10일(화) ◇

| | | | |
|---|---|---|---|
| 10:30~11:00 | 등 록 | - 참가자 등록, 방배정 | 1층 국제회의장 |
| 11:00~11:40 | 개 회 식 | - 국민의례<br>- 환영사 : 변 도 윤 대표<br>- 축 사 : 정 두 언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br>임 진 출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br>- 비디오 상영 | 1층 국제회의장 |
| 11:40~13:00 | 점심식사 | | 3층 대식당 |
| 13:00~15:00 | **제1부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주진 의의와 집행 전략**<br>사회 : 김 선 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br>- **분권과 여성정책**<br>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br>-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br>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br>- **1부 토론**<br>권 용 현 (여성부 정책총괄과장)<br>민 경 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br>윤 정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 1층 국제회의장 |
| 15:00~15:15 | 휴 식 | | |
| 15:15~17:30 | **제2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br>사회 : 이 은 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br>-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br>신 면 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 과장)<br>-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br>정 숙 영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 | 1층 국제회의장 |

-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 영 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 2부 토론
  박 영 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박 재 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정책개발팀장)
  이 갑 숙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이 경 숙 (경상북도 칠곡군청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

| | | |
|---|---|---|
| 18:00~19:30 | 저녁식사 | 3층 대식당 |

◇ 6월 11일(수) ◇

| | | |
|---|---|---|
| 07:30~08:30 | 아침식사 | 3층 대식당 |
| 08:30~09:00 | 휴 식 | |
| 09:00~11:00 | **분과별 워크샵** | |
| | **제1분과 정치 · 정책결정참여**<br>사회 : 김 은 경 (세종리더십연구원 원장)<br>사례발표 1 김 연 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대표)<br>사례발표 2 황 성 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기지부 대표) | 2층 소모임실 |
| | **제2분과 고용 · 인력개발**<br>사회 : 고 선 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장)<br>사례발표 1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br>사례발표 2 한 난 영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팀장) | 2층 회의실 |
| | **제3분과 여성복지서비스**<br>사회 : 박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br>사례발표 1 장 혜 순 (서울시 여성정책과 늘푸른여성팀)<br>사례발표 2 김 문 숙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 5층 강의실2 |
| | **제4분과 가정 · 직장양립지원**<br>사회 : 황 윤 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br>사례발표 1 남 미 영 (새터어린이집 원장)<br>사례발표 2 정 재 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담당) | 5층 강의실3 |
| 11:00~12:30 | **종합토론 및 폐회**<br>사회 : 박 진 수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류지원부 부장) | 2층 회의실 |
| 12:30~14:00 | 점심식사 | 3층 대식당 |

# 목 차


## 제1부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추진 의의와 집행 전략

기조발제1 **분권과 여성정책** ..... 3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기조발제2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 29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부토론

권 용 현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61
민 경 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 65
윤 정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69

## 제2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기조발제1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75
신 면 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 과장)

기조발제2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 99
정 숙 영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기조발제3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117
정 영 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2부토론

박 영 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131
박 재 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정책개발팀장) ..... 133
이 갑 숙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157
이 경 숙 (경상북도 칠곡군청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 ..... 161

## 분과별 워크샵


**제1분과 정치 · 정책결정참여** ..... 171

사회 : **김 은 경** (세종리더십연구원 원장)

사례발표 1 **김 연 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대표)

사례발표 2 **황 성 욱**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기지부 대표)

**제2분과 고용 · 인력개발** ..... 181

사회 : **고 선 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장)

사례발표 1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사례발표 2 **한 난 영**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팀장)

**제3분과 여성복지서비스** ..... 189

사회 : **박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사례발표 1 **장 혜 순** (서울시 여성정책과 늘푸른여성팀)

사례발표 2 **김 문 숙**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제4분과 가정 · 직장양립지원** ..... 205

사회 : **황 윤 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사례발표 1 **남 미 영** (새터어린이집 원장)

사례발표 2 **정 재 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담당)

제1부

#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추진 의의와 집행 전략

사회 : 김 선 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기조발제 1

# 분권과 여성정책

## - 분권시대 지방여성정책의 과제 -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분권과 여성정책

## - 분권시대 지방여성정책의 과제 -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화 시대, 지식사회, 문화의 세기
여성 : <20: 80>을 <80: 20>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80: 20>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 Ⅰ. 분권/지방분권/성(性)분권

### 1. 권력의 속성과 분권의 의미

1) 권력

Pascal: 인간은 천사도 야수도 아니다.
천사의 흉내를 내는 자가 야수의 흉내를 내고는 하는 불행.
→중간자가 되도록 하는 힘의 작용 필요
* 남녀평등의 추구는 힘의 균형을 위한 또 다른 시도

권력: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개념
어떤 사회관계에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Weber)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MacIver)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Russell)

정치에서의 권력: 목적이 아니라 수단

-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목적으로 출현, Wilson -

2) 권력의 속성

권력관계: 결정작성에의 참여

권력관계의 전제: 사회의 여러 가치(Value)-부, 안녕, 건강, 존경, 애정 등

zero-sum: 권력은 희소가치-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합.

non zero-sum: 권력자와 복종자 사이의 이익추구를 위한 인간 공동행위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의 시정: 정치/통치/지배

3) government/governance

정부government: 권력의 제도(institutions of power, Lasswell)

정치체제: 권력 · 지배 또는 권위를 토대로 인간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의 연속적 모형(R. Dahl)

governance: 정부(권력) · 시장(이윤추구) · NGO(사명)-networking을 통한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의 반영, 조정, 통합---단순한 참여의 개념을 넘어서.

4) 분권과 분산

기능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

분권의 목적 가치적 개념과 수단 가치적 개념

5) 분권과 균형

분권이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경쟁을 통한 영향력의 균점

6)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바탕

지방분권: local governance의 구축

여성참여: 민주주의의 근본전제-권한과 책임의 확보/자기결정성의 증진

7) 분권과 여성/평등권의 확보

지방분권과 성(性)분권

여성정책의 분권화???

## 2. 지방분권

1) 분권화의 논리

지방분권은 논자에 따라 지방고유권한의 회복으로 보기도 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보기도 하나 우리 나라와 같이 자치의 전통이 없는 나라는 지방권한의 회복이라는 시각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분권화: 사회가치의 균형배분을 위한 시도, 그러나 분권화 자체만으로 균형배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선결조건의 해결을 필요로.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자치: 단체자치(top-down)와 주민자치(bottom-up)

자치권: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한/창조물

지방분권의 가치: **민주성/효율성/형평성**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 어느 가치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3) 한국의 지방분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1991년 총리 훈령: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 · 운영

'91년부터 '98년까지 총 3,700여건 심의, 2,008건을 지방이양 확정. 현재 84% 이양 완료, 195건은 관련부처에서 이양검토 중, 125건은 재심사 요청 중.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의의: 중앙부처 주도하의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시도.

① 이양사무의 내용보다는 건수 위주의 단편적 접근(이양효과 미미)

② 지방의 시각보다는 중앙의 시각에서의 일방적인 배분

③ 인력·재정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아 사무이양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되었다는 등의 지적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중앙부처 위주의 활동으로 종합적인 지방이양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

「지방이양촉진법」의 제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능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마련

국민의 정부:

① 대통령의 지방자치 조기정착 강조

②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채택

③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본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실무단, 행 · 재정지원반 현재 2기 활동 중. 2003년 8월 31일 임기 만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운영시스템 개혁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 자치사무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하여 사무를 이양.

② 관련기능의 총체적 이양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일치 도모,

③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가급적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④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요하거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자치사무화 추진

기존의 소극적 이양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양 추진

→ 「中央權限의 地方移讓促進등에 관한 法律」(1999. 8. 30) 제정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이양의 추진

***여성정책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아직은 자치사무로 하기보다는 국가 사무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집권과 분권의 균형, 균형발전 보다는 경쟁발전, 참여를 통한 분권을 축으로

--그러나 내용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채택」

①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자치경찰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자치입법 · 조직 · 인사권 등 사전규제적 기능 대폭 이양, 교육훈련 · 인적자원교류,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도입-주민직접참정권 확대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지방의견수렴 및 환류체제구축,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②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③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④ 신행정수도 건설

시민사회의 분권운동

분권운동추진본부, 행정개혁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 3. 지방분권과 성(性)분권=남녀평등?

지방분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즉, 지방의 참여와 영향력 확보

성(性)분권: 사회가치의 성(性)간 균형배분; 남녀평등

지방분권과 성(性)분권:

국가체제 내의 성(性)분권과 지방자치하의 성(性)분권 동시추구

성(性)분권=남녀평등을 위한 노력 '90-2000년대:

① agenda setting-세추위: 여성사회참여촉진 10대 과제에서 본격화

② institution-여성발전기본법, 여성정책기본계획

③ organizing-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과제

① 제도

② 의식

③ 노력(능력)

분권시대 여성정책의 과제

①②③ + networking(또 다른 governance)

## Ⅱ. 여성정책과 지방분권

### 1. 여성정책 agenda와 지방분권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지방분권」?

「여성정책=성 분권」 이라는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번 심포지엄 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여성정책」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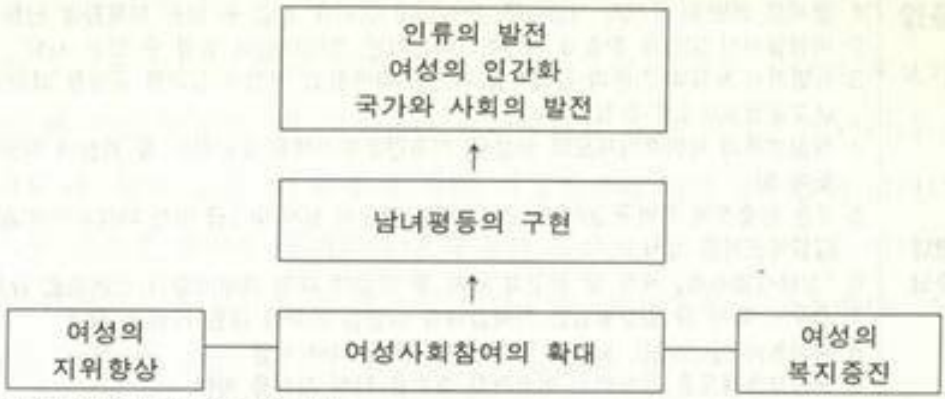
지방분권시대의 여성정책은 별도의 이슈를 지니고 있는가?

여성정책에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영역을 어떻게 분권화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국정 agenda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시도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1)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은 정책의 대상이 여성인 정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능적 관점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性)분권을 지향하는 정책 역시 여성정책이 된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성 평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여러 하위목표로 구성되는데, 오늘 날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의 하위목표를 체계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여성정책의 목표체계




지위향상: 법 · 제도의 개선-환경
참여확대: 자기혁신
복지증진: 보호

2) 여성정책 agenda-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이슈/공약분석

여성정책은 그간 국회, 행정부 및 여성단체들이 이슈 제기와 이의 실천을 노력에 힘입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이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경험이 있다.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분석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이슈를 점검하고, 현 정부의 정책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슈의 agenda화 정도를 살펴본다.

〈표 1〉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여성정책 공약[1]

| 정당 | 정책공약 |
|---|---|
| 한나라당 | 1. 100만개의 여성일자리 창출<br>2. 여성 직업훈련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br>3. 여성의 채용, 임용,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함<br>4.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함<br>5. 보육, 마음좋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짐<br>6.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강화<br>7. 종합적인 가족정책 추진 및 여성의 재산권과 법적 권리 보장<br>8. 고령여성과 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복지대책 마련<br>9. 여성들의 정보화능력 및 문화생산능력 높임<br>10.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확산<br>11. 여성 농어업인을 보호, 육성<br>12.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br>13.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를 확대 |

(계 속)

1)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발췌. 국민통합 21은 선거 종반에 후보를 사퇴하였기 때문에 최종공약분석에서는 제외.

| 정당 | 정책공약 |
|---|---|
| 새천년 민주당 | 1.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듦<br>2.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과 여성취업촉진기반 조성/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br>3.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과 간접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남녀고용평등제도를 정착<br>4. 직장보육과 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정과 직장이 양립되도록 함<br>5.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할당제 실시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를 위한 임용목표제를 실시<br>6.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친고죄 폐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 강화<br>7.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br>8. 여성농어민, 장애인,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br>9.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br>10. 교육·문화·미디어의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br>11. 여성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 및 안정적 연구기반 토대 마련<br>12.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br>13. 여성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과 정책을 만듦 |
| 하나로 국민연합 | 1. 여성 주류화에 따른 직제개편과 양성평등가족정책 실현<br>2.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br>3. 여성의 인권 보호 강화<br>4.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보장<br>5. 취약 여성의 복지 증진 |
| 민주 노동당 | 1. 여성노동의 차별철폐와 고용확대<br>1) 비정규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br>2) 모성의 사회화 강화<br>2. 노동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모성보호 확대 실시<br>3. 여성의 정책결정권 강화<br>4. 여성인권보장<br>1) 호주제 폐지와 일인일적제 실시<br>2) 가사노동의 사회평가제 실시 및 GDP반영<br>3)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br>5.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근절<br>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확대와 처벌요건 강화<br>2) 여성학 및 성평등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화<br>3) 미디어 분야의 여성 참여율 및 의사결정권 확대<br>6.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br>1) 농민에 대한 지원 강화<br>2) 저소득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확대<br>3) 여성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br>4) 성매매 방지와 피해여성의 보호 |
| 사회당 | 1. 가부장적 위계질서 해체<br>2. 가부장제 자본주의 생산질서 전복<br>3. 모성기금조성, 모든 여성의 모성권 보장<br>4. 성별억압과 성적억압의 근절<br>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사회복지 강화<br>6. 성평등 교육 실시<br>7. 여성의 정치세력화 |
| 무소속 (장세동) | 1. 각료의 50%를 여성으로 임명하여 위로부터의 여성지위향상을 실현<br>2. 호주제와 호적법을 폐지<br>3. 여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개편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은 나름대로 차별화 된 여성정책공약을 준비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 정당의 여성정책공약은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와 여성들의 요구를 정당과 후보가 수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별다른 이념이나 준비가 없이 시작한 후 학계, 언론, 단체 등을 통해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나자 이를 바탕으로 뒤늦게 공약을 준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비교적 선거초기에 실시한 한 언론의 인터뷰가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표 5>).

<표 2>는 쟁점이 되는 공약을 정당별로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호주제, 할당제, 차별철폐 및 보육의 문제에서 각 당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내고 있으며, 다만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타의 정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 2〉 정당별 쟁점공약비교

| | 호주제 | 정치참여 | 여성 일자리 | 여성차별철폐 | 보육 |
|---|---|---|---|---|---|
| 한나라당 | 폐지목표 | 고위임명직 30%까지 여성관리자승진임용목표제 | 100만개 창출 | 채용 · 승진 차별금지 | 국가차원보육 책임 |
| 민주당 | 폐지 |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임용목표제 | 50만개 창출 | 간접차별기준마련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 | 직장보육 · 육아휴직 현실화 |
| 민주 노동당 | 즉각폐지 | 공무원과 공기업의 교용 · 승진 · 공직대표자선출에서 30-50% 여성할당제 | - | 여성노동차별철폐 | 공보육시설 증설 |
| 하나로 국민연합 | 폐지 · 여성호주제 | 지역공천 시 여성할당제, 여성고위직 임용 시 30% 목표 | - | 채용 · 배치 · 승진 · 교육 · 임금 등 성차별개선 | 국공립보육시설확대 (50%) |
| 사회당 | 폐지 | 지역여성정책담당관, 장 · 차관 50% 여성임명, 승진목표제 · 공공기관 여성할당제 |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국가에 의한 무상보육 |
| 장세동 | 호주제 · 호적법폐지 | 각료의 50%를 여성으로 | - | - | - |

〈표 3〉 여성문제에 대한 공통관심사

| | |
|---|---|
| 여성지위 | 1. 호주제 폐지<br>2. 친양자제도의 도입<br>3. 가사노동의 가치 법제화<br>4. 여성차별 대책방안<br>5. 양성평등의식 정착을 위한 방안 |
| 여성참여 | 1.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역할과 기능<br>2. 정치 행정분야 여성 할당제<br>3. 여성인력 활용 방안-일자리 창출<br>4.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보육<br>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 |
| 여성복지 | 1. 공창제의 필요성 유무<br>2. 성폭력 대책방안<br>3. 가정폭력방지법 · 성폭력특별법 보완여부<br>4. 장애여성/노인여성 지원책 |

<표 3>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쟁점이슈들이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며, <표 4>는 선거초반의 여성정책공약에 대한 각 정당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선거초반의 정당별 여성정책 공약[2)]

| | 한나라 | 민주 | 국민통합 21 |
|---|---|---|---|
| 호주제 | 궁극적 폐지<br>/단기적 친양자제,<br>연장자순위 호주승계 | 사회적 합의과정 후 폐지<br>가족별 호적편제 | 사회적 합의과정 후 폐지<br>가족별 호적편제 |
| 친양자제 | 도입찬성/<br>아동연령제한 미정 | 호주제폐지의 과도기에 친양자제 필요<br>연령제한폐지 | 연령제한 없이 찬성 |
| 부부별산제보완<br>/부부공동재산제<br>/부부재산계약제 | 부부별산제보완 | 1. 연금, 보험, 사회보장, 인적재산 등 여성의 재산권 폭넓게 인정<br>2. 단기-부부별산제보완/장기-부부공동재산제 | 혼인 중 재산: 부부공동소유로 간주<br>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
| 가사노동가치 | 전업주부권리보장차원: 보험보상 · 손해배상 · 재산분할 시 가사노동기여도 인정방안 모색 중 | 가사노동 화폐가치 전환 방법론 개발-사회보장제도나 보험 및 기타보상에서 현실화 유도 | 주부 가사노동 수행 불가능 시 시장서비스나 물자로 대체함으로써 드는 비용으로 산정가능 |
| 공창제 | 절대 반대 | 반대 | 반대 |

(계 속)

2) 우먼타임즈 제84호(10/26)

| | 한나라 | 민주 | 국민통합 21 |
|---|---|---|---|
| 성매수자처벌 | 신상공개이상의 처벌 아직 논의 않음 | 더 강한 처벌 필요 | 취업제한, 경고판 부착, 인터넷 얼굴공개 등 더 강력처벌 필요 |
|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법 보완 | 개정 모색 중<br>가: 가해자 교정교육<br>성: 친고죄 폐지 | 친고죄폐지, 수사과정 중 부부격리 | 가: 폭력범을 구치소 등에 강제유치 규정 추가<br>성: 영상물 녹화 증거자료 채택 |
| 낙태결정권 | 기본적으로 반대<br>그러나 모체생명위협,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 낙태권 부인 곤란 | 여성 인권과 건강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방향이어야 | 원칙적으로 반대<br>최종결정권은 당사자 여성에게 |
| 1직장 1탁아소 | 현실성 없음-이동과정 문제<br>지역 내 연계 연합탁아소<br>아파트단지 탁아소설치 의무화 | 거리 등 육아수요자 요구에 맞게 수요파악 선행 | 찬성. 6세 미만 자녀 둔 여 종업원 20인 이상 직장 탁아소 설치 의무화 |
| 비정규직 여성 | 기업체 인센티브:<br>정규직 전환 유도, 근로감독강화 | 사회보험 확대, 근로감독 강화, 근기법, 고평법, 모성보호법 등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 노조법, 노동관계조정법, 근기법, 고평법 등 4대 보험법 비정규직에 단계적 확대 적용 검토 중 |
| 여성취업률 | 고학력여성: 전문직 육성 초점, 기업위탁 맞춤교육 지속적 실시로 인프라 구축<br>저소득여성: 보육, 노인·환자도우미 등의 공공사업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 여성 인적자원개발 교육, 채용목표율을 공기업까지 확대, 민간기업의 시행도 유도 | 연령차별 철폐법 도입으로 기혼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채용목표제 민간기업 도입, 대졸여성취업율 60%까지.<br>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여성고용지수 포함 |
| 여성노인 | 남녀 노년정책을 하나로 봄 | 노인 50만개 일자리 창출<br>경로연금 대상·액수 확대, 치매·중풍노인 보호시설과 요양병원 확대, 여가·교육·문화 기회 확대 | 균등 고용기회-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사회보장제수급 충분인정-노후 경제적 안정 도모 |
| 할당제 | 총선 국회 비례 여성 30% 할당, 지방 70% 할당 | 지역구·전국구 여성할당 30% | 국회: 비례-50%, 지역 30%<br>광역: 비례-70% |
| 부단체장 | 가급적 | 찬성 | 희선 |
| 의회 진출방안 | 예비정치인 육성 | 중대선거구제도입, 30%할당 의무화<br>여성정치지도자육성지원프로 활성화 | 당내 여성후보심의기구 상설화, 지구당 복수추천 받아 중앙당에서 여성후보추천 의무화 |
| 선거구 | 여성만을 위해 선거구제 바꾸는 것은 무리 |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 선거구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 |
| 여성각료/총리 | 총리탄생 가능<br>각료 40%는 되어야? |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적재적소, 각료30%, 총리 가능 | 총리가능, 현 정부보다는 많이 |
| 여성부 | 업무적극개발, 위상제고, 역할확대 | 기능강화-정책조정회의,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입 | 소외여성문제 다루도록 기능 강화 |
| 여성정책 담당관제 | 당연히 전 부처로 확대<br>여성정책 수석비서관제 고려 | 필요하다면 확대 | 통일·정통·문광·산자·기획·과기·국방·외통 등으로 확대 |

<표 5>는 비교적 선거 초반에 제시한 특이한 사례를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3)]

〈표 5〉 대선 후보 역점공약: 신문기사

| | |
|---|---|
| 이회창 |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방안:<br>① 투자환경개선, 기술, 환경, 문화, 복지 등 4대 서비스산업 적극육성,<br>② **계층별 맞춤형 고용정책**-뉴스타트 정책 제시. |
| | 집권 시 여성총리 임명 및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임명직 30% 여성기용**<br>국·공립대 교수 채용 때 여성할당제<br>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
| 노무현 |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5대 차별시정대상'**:<br>'사회적 차별금지·시정 특별법'제정, 대통령직속 **'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 |
| 정몽준 | **초대총리**를 여성으로 |
| | 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의 30%,<br>교육행정직과 전문직, 국립대 교수의 30%,<br>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50%, 70%를 여성으로** |
| | 조직책선정에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여성 없음 |
| | 호주제폐지, 국공립시설 보육아동 분담율%로 확대<br>3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의 무상보육 |

3) 분권의 차원에서 본 여성정책 agenda

지난 대통령선거를 한 사례로 정책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여성정책의 경우 특별히 지방화를 강조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공약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분야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공약이 중앙정부차원의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이나 여타분야의 경우는 각 분야별 공약에서도 지방분권 내지 자치를 염두에 둔 공약이 나오고 있었기에 여성정책의 경우는 특이한 사례가 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서 분권과 여성은 같은 차원에서 검토할 아젠다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여성정책의 분권화는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분권화의 의제 중 소홀하게 취급되기 때문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 2002. 11. 1 동아.

## 2.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은 '1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여성부의 정책과제'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국정과제(사회통합과 양성평등)

지난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후보는 여성을 차별시정대상으로 보고 적극적 차별철폐조치를 취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을 채택하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여성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시적 AA도입 추진과 정치관계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반영하고 공공부문 여성채용을 확대하는 등이 여성참여를 촉진하는 조치로 보이나 아직은 과거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표 6〉 참여정부의 여성정책과제[4]

| | |
|---|---|
| 5대 차별해소 | ○ 한시적 AA 도입추진(할당제/채용목표제의 실효성 의심)<br>- 민간부문 채용/정부 입찰에 우선권과 인센티브 제공<br>(비정규직과 외국인 제외?-별도조치)<br>○ 차별금지법 제정/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 양성평등사회 구현 | ○ 정치관계법에 여성참여확대방안 반영/공공부문 여성채용 확대<br>○ 호주제폐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폐지 이후 대안 신중 검토<br>○ 성인지적 가족지표 개발 및 가족정책기본법 제정<br>○ 성매매 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사업, 현장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 방지 대책기구 설치) |
| 보육 | ○ 보육료의 50% 국가지원/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br>- 참여복지항목에 |
| 일자리 창출 | ○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 창출<br>-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 항목에 |

### 2) 여성부의 2003년도 중점 정책

여성부는 200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정책목표를 「여성이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노무현대통령의 여성관련공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금년도의 중점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4) 12대 국정과제 중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에서 발췌

〈표 7〉 2003년도 여성부의 중점정책과제

| 당면 현안 과제 | 쟁점 과제 | 핵심 전략 과제 |
|---|---|---|
| 1. 보육업무의 이관<br>2. 성매매방지대책<br>3. 호주제 폐지 | 1. 여성부의 기능보강<br>2.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 평가 | 1.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br>2. 국제적 수준으로 여성지위 향상 |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 1)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주요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시하는 사업 가운데 밑줄을 친 경우가 특별히 '평등'사회를 염두에 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모든 사업이 굳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색」을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

〈표 8〉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주요사업

| 지역 | 주요사업 |
|---|---|
| 서울 | ㅇ 주요시책사업의 성인지적(性認知的) 평가<br>- 시책분야별 **성인지적 종합평가 모델개발 및 평가**시행<br>ㅇ 유해환경에 취약한 10대 청소녀를 대상으로 성교육장 운영<br>- 늘푸른여성 정보센터 내(마포구 서교동 소재) |
| 부산 | ㅇ 부산발전연구원(BDI) 산하 여성정책연구센터 설치 · 운영<br>- 각종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br>ㅇ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br>-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
| 대구 | ㅇ 여성 IT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br>- 정보통신교육원 영남본부에 위탁교육(교육기간 6개월)<br>ㅇ New-Life 회복교육/ -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들에 대한 심화단계의 치료프로그램** 운영 |
| 인천 | ㅇ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남녀평등도시 인천>**실현을위한 정책추진<br>- 인천여성정책5개년 계획('03-07) 추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 운영 등 |
| 광주 | ㅇ **여대생 민간 국제활동 지원**사업<br>-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여대생들에게 해외연수기회제공<br>ㅇ 여성취업 · 창업박람회 개최/ - 최신 취업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취업전략 수립지원 |

(계 속)

| 지역 | 주요사업 |
|---|---|
| 대전 | ㅇ 대전 <양성평등헌장> 제정/ -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을 통한 헌장 공포 예정<br>ㅇ 여성신직업 페스티벌 개최<br>- 지방학생의 직업, 진로지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격차 해소 |
| 울산 | ㅇ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문화센터 개관<br>ㅇ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br>- 2003년도에 119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 경기 | ㅇ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사업<br>- 능력있는 여성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제공<br>ㅇ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구축을 위한 '경기 여성통계 조사연구' 추진<br>- 경기도 **성별통계**의 체계적 구축으로 정책담당자와 시민에게 정보제공 |
| 강원 | ㅇ 농어촌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br>-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효과분석<br>ㅇ 남녀평등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br>-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남녀평등의식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충북 | ㅇ 충청북도 여성정책협의회에 여성계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확대운영<br>-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마련<br>ㅇ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br>- 유관기관, 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교류 및 상호지원 도모 |
| 충남 | ㅇ 여성정책주류화를 위한 여건조성<br>- **<충남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강화<br>-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프로그램 운영<br>- **<여성정책자문교수단>** 운영 |
| 전북 | ㅇ 양성평등 역할 극을 통한 평등의식 구현<br>- 양성평등 역할 극 경연대회 개최<br>ㅇ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홍보<br>- 도내 기관·사업체 대상 |
| 전남 |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역할 강화<br>- 민박경영 여성에 대한 IT교육 실시, 여성에 대한 경제마인드 교육실시<br>ㅇ 여성지도력 양성교육<br>- 능력있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력 교육실시 |
| 경북 | ㅇ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br>-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br>ㅇ 여성지도자 능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br>- 여성지도자 정보화 교육,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 |
| 경남 | ㅇ 여성지도자 양성 대학위탁 교육<br>- 젊고 참신한 여성인재 발굴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br>ㅇ 보육사업 5개년 계획('02-'06) 추진<br>ㅇ **여성이장** 확대계획 추진으로 여성비율 **30%** 목표 |
| 제주 | ㅇ 제주 여성역사전시관 조성<br>- 제주 여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br>ㅇ 제주 여성 천년사 체계적 정립/ - 고려~조선시대 여성사 발굴·편찬 |

2) 2003년 대구시의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참고로 2003년도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표 9>에 제시한다.

〈표 9〉 대구시의 2003년도 여성정책 중점과제

| 중점추진과제 |
|---|
| ○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br>○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br>○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br>○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 보호와 복지서비스 확대<br>○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능력 배양<br>○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건전육성 |
| **세부추진계획 예(참여부문)** |
| 1. 實質的 兩性平等文化의 定着을 爲한 基盤造成<br>가.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개발<br>나.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br>○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 30%이상 (2007년까지 40%)<br>○ 임기만료, 정원부족, 결원보충시 여성위원 위촉 적극 확대<br>○ 여성전문인력 취약 위원회는 자격기준 완화<br>○ 대구지역전문여성인명록 발간(DB화) 정보교환<br>다. 정책과 제도에 양성평등관점 통합<br>**○ 주요정책수립시 여성참여,지위 평등에 미치는 영향 사전분석 반영**<br>○ 재·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차별사례 사전검토체제 강화<br>○ 여성정책·양성평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개설(공무원교육원)<br>○ 각종 통계생산 시 성별항목 등 신설로 여성정책에 활용<br>라. 여성의 공직진출확대 및 근무환경개선<br>○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추진<br>**- 5급 이상 관리자 비율 2006년까지 10%이상 임용**<br>- 1기관 1국·과장 이상(여성공무원) 확보<br>○ 공개경쟁임용 시 공무원양성평등목표제 시행(30%)<br>○ 여성공무원 보직 및 승진관리 : 핵심부서배치, 근평우대<br>○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배치(심적부담 해소) |

## Ⅲ. 여성정책의 현실과 여성정책의 과제/참여부문사례

### 1. 여성참여촉진 정책

* 여성참여는 대표성확보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핵심
* 법 · 제도/의식/능력

1) 정치참여

정치: 선거, 피선거 -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장

선거: 투표율 남녀동등

피선거: 대통령 0%(16:0), 국회의원 6%, 지방의원 2%

2000. 2. 정당법(개정): 여성공천할당제

국회 및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

→ 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성의원 5.9%(15대 3.7%)

* UN권고: 30%, 세계평균 13.8%
* 여성권한척도 66개국 중 61위, 여성국회의원 비율 150개국 중 102위

〈표 10〉 국회 여성의원

| 구 분 | | 지역구 | 전국구 | 전체 | 비 고 |
|---|---|---|---|---|---|
| 1992년(14대) | 전체 | 237명 | 62명 | 299명 | ( )안의 내용은 보궐선거로 인한 변동사항 |
| | 여성 | 0(1)명 | 4(5)명 | 4(6)명 | |
| | 여성비율 | 0(0.4%) | 6.5(8.1%) | 1.3(2.0%) | |
| 1996년(15대) | 전체 | 253명 | 46명 | 299명 | |
| | 여성 | 2(3)명 | 7(9)명 | 9(12)명 | |
| | 여성비율 | 0.8(1.3%) | 11.3(19.6%) | 3.0(4.0%) | |
| 2000년(16대) | 전체 | 227명 | 46명 | 273명 | |
| | 여성 | 5(5)명 | 11(12)명 | 16(17)명 | |
| | 여성비율 | 2.2(2.2%) | 24(26%) | 5.9(6.2%) | |

지방여성

2002년 3월 정당법(개정): 지방선거 할당제

시도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이상 추천, 후보자 추천 시 매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하게: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효력부여(위반 시 선관위 접수 거부)

→ 2002년 6월 제3차 동시지방선거: 시 · 도 비례대표 중 여성의원 67.1%(73명 중 49명, 1998년 36.4%)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공천 30%는 권고조항에 그쳐(2.3%, 609명 중 14명).

〈표 11〉 지방의회 여성의원

| 구 분 | 합계 | 광역의원 | | | 기초의원 |
|---|---|---|---|---|---|
| | | 소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
| 1995.6.27선거 | 127명(2.2%) | 56명(5.8%) | 13명(1.5%) | 43명(43.3%) | 71명(1.6%) |
| 1998.6.4선거 | 97명(2.3%) | 41명(5.9%) | 14명(2.3%) | 27명(36.4%) | 56명(1.6%) |
| 2002.6.13선거 | 140명(3.4%) | 63명(9.2%) | 14명(2.3%) | 49명(67.1%) | 77명(2.2%) |

대구는 광역 3명(선출2, 비례1), 기초 2명(남, 달서)

비례대표증가: 정당공천 50% 작전 효과?

2) 위원회의 여성참여

① ~1995: 국무총리 지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1985: 국무총리 지시: 2000년까지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15%

1995: 2005년까지 30%

② 1995. 12. 여설발전기본법: 법률에 명시,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지시(1998, 1999)

목표율 30% 달성시기를 2005년에서 2002년으로

* 2002. 12 현재 30.1%

(중앙 26.2, 지방 31.5, 대구 27.7%-2001년 19.5)

→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3) 공직참여

공무원: 32.8%, 5급 이상: 4.8%

남녀차별모집철폐('90), 여성채용목표제('96년), 군가산점 위헌결정('99년), 적극

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등 정부의 정책노력으로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그러나 고급공무원 비율은 낮음

① 남녀차별모집철폐('89-90): 종전의 「10% 이내 여성모집」 규정 철폐

② 여성채용목표제('96년-2002): 20%, 1999: 2차에서 최고 30%까지

1995. 12. 22 공무원임용시험령 11-3, 여성의 합격

1996. 3. 23. 지방공무원임용령 51-2, 여성의 합격

여성채용목표제실시지침(국가공무원, 행자부예규, 1999. 4. 21)

여성채용목표제운영요령(지방공무원, 1999. 8. 31)

→ 여성합격율 높아짐

1996. 26.5%, 2002. 42.8%(목표제 적용 합격자수: 1996. 19명, 2002. 83명)

시험종류별 합격: 위의 표 참조

* 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법시험에도 영향: 24.0% 합격

③ 군가산점 위헌결정('99년): 5% 가산점 폐지

④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 12. 2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2003-2007

* 공무원임용시험령 11-3을 근거로 함-과거 이는 역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었음.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5명 이상 모집 단위 적용)

⑤ 관리직여성공무원 육성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중앙행정기관 「1기관 국·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 지자체 국·과장급 1인 이상배치 및 부단체장 적극임용---권고사항일 뿐.

* 2002말 현재 16개 광역 4급 이상 모두 있으며, 8개 시도는 3급 이상, 그러나 별정·계약포함 여성부서 보직 한정, 부단체장 2명.

⑥ 기타: 승진기회확대, 보직관리강화 인사교류 등: 권고사항에 불과.

〈표 1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전체인원 | 888,217 | 865,650 | 849,152 | 859,329 |
| 여 성 | 263,853<br>(-1,309) | 258,347<br>(-5,506) | 267,647<br>(+9,300) | 282,028<br>(+14,381) |
| 점유율<br>(%) | 29.7<br>(+1.0) | 29.8<br>(+0.1) | 31.5<br>(+1.7) | 32.8<br>(+1.3) |

※ 자료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년도

*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목표 연장, 비율 상향

〈표 13〉 연도별여성채용목표비율

| 구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5급 | 10% | 13% | 15% | 20% | 20% | 20% | 20% |
| 6·7급 | | | | | | 23% | 25% |
| 8·9급 | - | - | - | | | 25% | 30% |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이하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표 14〉 연도별 여성공무원 합격자 현황

| 시험명 | 1998년 | 1999년 | 1999년 | 2000년 | 2002년 |
|---|---|---|---|---|---|
| | 여성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자 비율 | 여성합격자 비율 |
| 계 | 19.9% | 13.7% | 32.2% | 33.4% | 42.7% |
| 행정고시 | 23.1% | 17% | 25.1% | 25.3% | 28.4% |
| 외무고시 | 16.7% | 30% | 20% | 36.7% | 45.7% |
| 기술고시 | 2.1% | 2.5% | 6.4% | 12.2% | 5.2% |
| 지방고시 | 4.7% | 14.8% | - | 3.7% | 3.9% |
| 7급공채 | 16.8% | 6.1% | 16.6% | 16.0% | 26.5% |
| 9급공채 | 21.3% | 16% | 37% | 38.2% | 48.6% |

〈표 15〉 연도별 여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자 현황

| 구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합격자(명) | 20 | 14 | 40 | 86 | 59 | 83 |
| 비 율(%) 추가합격 | 0.6 | 9.0 | 1.9 | 2.3 | 1.5 | 2.1 |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2006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 목표

〈표 16〉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연도별 목표율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중앙 | 4.8% | 5.5% | 6.5% | 7.5% | 8.7% | 10.0% |
| 지방 | 5.3% | 5.5% | 6.4% | 6.9% | 7.8% | 10.4% |

* 「1기관 국 · 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 「1과(課) 1여성제」 및 「동등한 보직」, 「전통적인 남성보직분야에 여성공무원 적극 배치」 등 병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효과 미미.
* 경찰, 군 등의 여성진출(경찰서장 2, 장군 1)(경찰학과 여 교수 2)
* 2002년 국 · 공립학교 여교장 : 7.3%, 여교감 : 11%

4)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스웨덴 75.5%) 임금은 60% 수준

* 기업 여성인력 비율은 평균 26%, 임원이 있는 기업 16%(인크루트, 2003 조사)

〈표 17〉 기업의 여성인력

| 평균 | 교육출판 | 제조업 | 유통 · 무역 | 외식 · 식음료 | 금융 | 전자 · 정보통신 |
|---|---|---|---|---|---|---|
| 26% | 45% | 37% | 33% | 26% | 26% | 23% |

* 대기업 직원 중 여성: 12.7%(리크루트, 2002년 300대 성장기업 중 60곳 조사)
대리급 이상 간부 중 여성은 3.8%(화장품업계의 여성간부: 1.4%????)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 그러나 아직은 법과 현실의 괴리 여전
ex. 비정규직의 문제

5) 교육

특정직(교육공무원)공무원의 여성비율은 57%이나 여교수 비율은 10% 수준
* 사립대: 16%, 국공립대: 8.8%(서울대: 7.7%)

## 2. 정책의 효과/과제

1) 효과

법률적 조치의 효과 있음
권고사항일 때는 실효성 의문
지방의 경우는 대응속도 늦음

2) 과제

**양/질 모두 아직은 과제**
강제조치의 강화
지방의 실천의지 및 전략 필요

# Ⅳ. 지방분권/성 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 1.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분권과 평등의 전략

1) 정책결정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참석에서 참여로***
참여와 참석의 혼동: ex. 위원회 참여: 참석에 불과한 경우 허다.
공직・의회활동도 예외는 아님

참여는 networking의 과정. 요구와 배분의 실질적 효과 있어야.

지금은 참석에서 참여로 가는 과정

능력의 배양을 위한 노력 필요

발굴/학습/운동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

2) 지방분권과 성 분권: 전략과 방법

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ex. 대구여성권한척도: 조사와 평가, 그리고 높이기

② 목표와 활동의 분담 및 network 형성

연구자

단체활동가/사업가

공무원/의원

ex. 성인지 agenda setting, 성인지 예산편성, 성인지 정책평가 등을 통한 여성 참여 및 지위향상: 연구자는 분석 틀 개발, 공무원/의원은 자료제공, 현장활동가는 현장조사 등 공조

ex. 정치참여

③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강화와 또 다른 governance의 모색

정책전담기구가 위축되는 현실의 개선이 급선무

지방의 연대필요: 연구 · 교육 · 운동 등에서 지방과 지방간의 networking이 힘을 배가시킨다.

## 2.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또 다른 과제

여성정책의 지방분권화?

지방분권의 여성정책화?

여성정책의 주류화, 성 관점의 정책형성 · 집행 · 평가 등 성 평등을 지향하는 각종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힘은 많이 부족하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별 자치단체별로 여성정

책을 추진하는 경우 단체간의 특색은 반영할 수 있으나 추진력은 떨어진다.

여성정책추진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의 분리적 접근보다는 중앙/지방, 지방/지방의 networking이 필요한 때이다.

## V. 맺음말

-여성: 천사의 길목-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여성의 손으로 번영을-

| |
|---|
| 여성으로 태어남이 축복이 되고<br>여성으로 살아감이 환희가 되는 세상을 위하여 |

기조발제 2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Ⅰ. 들어가는 글-지방화와 여성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지방화는 기존의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권력구조와 사회운영의 메카니즘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자결권과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화 과정은 한국사회가 세계화 흐름 속에 편입되면서 지역을 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분권과 자치의 시스템을 확립해 가는 것에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한 시민들이 공적영역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가하고 책임을 지는 주민자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생활에 투여하고 있는 지역 여성들은, 생활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가능성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지방정부들은 양성평등과 성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처럼 여성의 관점에서 지방화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 동안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발전과정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여성은 사회발전의 중심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주변적인 존재로 살

아왔다. 따라서 지방화 과정에서 성주류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지역여성들은 2중의 소외과정을 겪을 수 밖게 없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중앙에 대한 자치와 정체성의 확립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성주류화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영자, 1998).

이 글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현단계를 진단해 보고, 지방정부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장애요소들을 추려보고, 공론의 장에서 함께 대안모색을 하기 위한 것이다.

## Ⅱ. 여성정책의 이념과 전략으로서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정부와 여성운동 모두 성주류화라는 정책언어로 수렴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은 UN의 여성정책(혹은 발전)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Miller and Razavi, 1998).

다음에서는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UN의 여성발전과 여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특수주의에서 양성평등주의로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며 그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표방하고 있다. 성주류화는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양성평등이란 사회의 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수적인 면에서 참여가 동등해야 하고 참여의 결과가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de jure) 평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실질적인(de facto) 평등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편견없이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은 똑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것은 계층, 정치적 지향, 종교, 민족, 인종과 같은 특성들과 결합하여 차이를 설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양성평등은 남녀간 권력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사회구조를 바꾸고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시혜적이거나 특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반조치와 과정은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기원이 부녀행정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적용대상과 사업범위가 무척 좁았다.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여성문제를 정책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부녀라는 용어가 비로소 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의 영향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의 신장 과정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이 경험해 온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시행,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제 설치 및 2001년 여성부의 신설 등은 정부가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좁은 범위의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과정으로 변화해 온 배경은 UN의 여성정책(혹은 발전)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Miller and Razavi, 1998).

UN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여성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을 채택하였고, 이는 1980년대 말에 와서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된 정책 접근법이 되었다.

WID 접근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여성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다. WID 접근의 구체적인 실현은 개발도상국의 보건, 영양, 가족계획, 소득창출과 같은 여성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발전 프로젝트에 초점이 두

어졌다. 또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류에 참여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태도의 개혁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WID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이 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WID 접근은 성역할 분업구조의 재편의 중요성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1985년 나이로비 UN 3차 여성대회에서는 그간의 여성발전 사업을 평가하면서, WID 접근이 여성의 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이하 GAD)관점의 분석틀을 발전시켜 왔다(김경희, 2001a).

GAD 접근에서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은 여성들이 발전과정에 통합되지 못했다거나 훈련, 교육, 신용부족이 아니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남성주도의 권력 분배와 통제방식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문제 및 정책에 대한 GAD 접근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을 발전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Miller and Razavi, 1998).

GAD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과 세력화를 통해 가사과 양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정책에 있어서 WID 접근과 GAD 접근이 공존하지만,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GAD 접근에 수용적이 되어 가는 추세이다.

우선 GAD 접근은 성중립적이라고 보이는 일반적인 정책 설계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는 성별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 정책과정에 포함된 성별편견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수행해 온 3중 역할에 주목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여성의 재생산 역할은 실질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활동은 수도, 보건, 교육, 여성 등 지역사회수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활동이다. 자유로운 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무급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GAD 접근은 이처럼 정책형성이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경험과 이로 인한 차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3중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흐름이 GAD적 접근에서 말하는 여성의 발전과정에의 통합과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주도력을 강화하면서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논지에 부응하면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사실 이 개념은 1995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1970년대의 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키자는 요구에서 발생한 시각이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성(gender) 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에 수용하였다. 행동강령에서 성주류화란 "체계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비정부기구 모두가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성주류화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성관점의 주류화: 모든 정책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여성의 주류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한다.
3) 주류의 변화: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부부처, 과학기술영역, 직업세계 등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이 되어왔던 분야에서 성관점과 여성들의 양적 질적 참여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성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성별화된 통계의 마련, 성평등 인식고양과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성인지적 예산의 확립, 정책의 성분석(gender analysis), 그리고 법, 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와 같은 도구들이 사용된다.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의 하나로 성분석(gender analysis)을 들 수 있다. 성분석은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는 정책, 프로그램, 법률의 효율성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조건과 이해의 다

양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정책 계획의 수립과 분석, 평가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성인지적 정책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이란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성별영향)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의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남·녀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은 기존의 성역할을 수용하면서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하려는 접근에서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추구하고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양성평등주의로 정착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995년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전략인 성주류화 개념을 수용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80년대의 여성정책에서 진일보한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평등사회의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여성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하고,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관점들과 여성발전기본법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

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2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매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실적과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1차와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
|---|---|---|---|
| | |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br>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
|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 개선<br>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참여 확대<br>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br>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br>4. 여성고용촉진<br>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br>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br>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br>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br>3-4. 여성정보화 촉진<br>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
|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br>8. 여성전문인력양성<br>9. 여성평생교육지원 | 4. 남녀고용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br>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br>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br>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br>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br>4-6. 보육서비스의 강화 |
|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br>17.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지원<br>18. 여성단체활동 지원 | 5. 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br>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br>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 |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br>20. 통일에의 기여 |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br>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br>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
|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br>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br>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 및 권익신장<br>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br>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br>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 7-1.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br>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br>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br>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 | |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br>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br>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
| | |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br>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
| | |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br>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br>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

## Ⅲ.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정책의 추진주체만 달라질 뿐, 앞서 정의한 여성정책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시도 및 시군구의 여성정책관련 조례로 정한 규칙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형성은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의 설립 뿐 아니라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지방정부마다 여성정책을 수용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역량이나 제도적 환경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주류화 노력은 사실 누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의 여성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주류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전략 추진에 있어서 장애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시론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의 저대표성과 낮은 위상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형성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설립 뿐 아니라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95년 이후에 부녀복지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던 여성관련 담당부서들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명칭으로 바뀌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집행 체계는 다양한 수준의 여성정책 담당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표 2>[1)]

---

1) 광역자치단체는 국수준, 보건복지 관련 국 내의 과수준으로, 참모기관형, 정책실과 과수준의 혼합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여성, 복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 내에서 여성복지계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복규, 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와 2001년 여성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업무 표준화를 위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2〉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

| 지역 | 국 | 과 | 지역 | 국 | 과 |
|---|---|---|---|---|---|
| 서울 | 복지여성보좌관(1급)<br>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경기 | 본청 여성정책국<br>제2청사 여성국 | 여성정책과<br>가정복지과<br>여성복지과<br>가정청소년과 |
| 부산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강원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 대구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충북 | 여성정책관 | - |
| 인천 | 여성복지보건국 | 여성정책과 | 충남 | 여성정책관 | - |
| 광주 | 시민복지국 | 여성정책과 | 전북 | 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br>가정복지과 |
| 대전 | 보건복지여성국 | 양성평등과 | 경북 | 사회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 울산 | 보건복지국 | 여성정책과 | 경남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복지과 |
| | | | 경북 | 사회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 | | | 경남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아동과 |
| | | | 제주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몇 몇 지역의 사례를 보면, 광역단체인 서울시는 2003년 초까지 참모기관형인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능과 인력면에서 가장 강화된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나 최근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복지여성보좌관과 복지여성국으로 재편하였다. 인천시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계선기관형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있다. 그 외의 시와 구에서는 여성복지계나 가정복지계 내에서 여성담당 수준에서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여성정책관련 조례나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조례는 예산의 집행 및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 조례와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은 그 지역의 여성정책 이행의 의지, 수행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중앙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몇 몇 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여성정책기본조례(1999),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1999.12.30), 도봉구 여성발전조례(2001)가 제정되어 있고, 인천시, 원주시, 춘천시, 진주시, 양천구는 현재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인 조례가 부재하다는 것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며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김소연, 2000).

길어야 불과 5-6년인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온 지역이 많으며, 실제 정책형성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작업의 결과로 지역의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여성백서, 각종 용역연구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개발의 노력들이 실제 지방 행정조직 내에서 실무로 여겨지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김소연, 2000). 또한 지역여성정책의 제반사무가 업무분장과 별다른 차이없이 추상화되고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여성정책의 주요업무가 여성정책의 홍보,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애령, 2000).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복지업무와 여성정책 업무가 별도로 집행되거나, 정책과 집행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은 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기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분야에서의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01년 현재 22.1%이며, 시, 도는 12%, 시, 군, 구는 24.8%, 읍면동은 28.4%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5.11%에 불과하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2000. 12. 31 현재

| 합계 | | | 시 · 도 | | | 시 · 군 · 구 | | | 읍 · 면 · 동 | | |
|---|---|---|---|---|---|---|---|---|---|---|---|
| 전체 | 여성 | % | 전체 | 여성 | % | 전체 | 여성 | % | 전체 | 여성 | % |
| 248,515 | 55,002 | 22.1 | 65,337 | 7,811 | 12.0 | 133,083 | 32,948 | 24.8 | 50,095 | 14,243 | 28.4 |

자료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2001

〈표 4〉 지방자치단체(16) 5급이상 여성공무원

2001. 7. 31 현재

| 기 관 명 | 5급 이상 총정원 | 5급 이상 여성현원 | 비율(%) |
|---|---|---|---|
| 서 울 특 별 시 | 2,391 | 282 | 11.79 |
| 대 구 광 역 시 | 660 | 39 | 5.91 |
| 경 기 도 | 2,059 | 119 | 5.78 |
| 광 주 광 역 시 | 476 | 24 | 5.04 |
| 대 전 광 역 시 | 504 | 24 | 4.76 |
| 부 산 광 역 시 | 1,038 | 49 | 4.72 |
| 울 산 광 역 시 | 376 | 17 | 4.52 |
| 인 천 광 역 시 | 742 | 33 | 4.45 |
| 전 라 북 도 | 926 | 37 | 4.0 |
| 제 주 도 | 351 | 14 | 3.98 |
| 강 원 도 | 902 | 26 | 2.88 |
| 경 상 남 도 | 1,187 | 34 | 2.86 |
| 경 상 북 도 | 1,291 | 36 | 2.79 |
| 전 라 남 도 | 1,167 | 32 | 2.74 |
| 충 청 북 도 | 722 | 19 | 2.63 |
| 충 청 남 도 | 930 | 18 | 1.94 |
| 총 계 | 15,722 | 803 | 5.11 |

여성의제를 지방의회에 가져가고 정책화할 수 있는 여성의원의 수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표 5〉 여성 지방의원

단위 : 명, %(전체대비 여성비율)

| 구 분 | 합 계 | 여성합계 | 광 역 의 원 | | | 기초의원 | |
|---|---|---|---|---|---|---|---|
| | | | 단체장 | 지역구 | 비례대표 | 기초의원 | 단체장 |
| 1995. 6. 27선거 | 5,758 | 127(2.2) | 0(0) | 13(1.5) | 42(43.2) | 71(1.6) | 1(0.4) |
| 1998. 6. 4선거 | 4,428 | 97(2.3) | 0(0) | 14(2.3) | 27(36.4) | 56(1.6) | 0(0) |
| 2002.6.13 | 4,419 | 142(3.2) | 0(0) | 14(2.29) | 49(67) | 77(2.2) | 2(0.8) |

앞서 살펴본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낮은 위상과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의 미약함은 성인지적 지방정부로의 변환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여성관련 공약이나 의제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지역대중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이임이나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는가에 따라 여성의제는 수시로 변동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설된 여성부를 비롯하여 여성 NGOs는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 저대표성의 문제는 여성의 주류화로 가기에는 멀고 먼 길이 놓여 있다. 따라서 아직 여성정책은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관점의 주류화와 주류의 변환 과정은 사회의 도처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 로 남성들로 이루어진 정책결정기관의 변환은 성인지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때로 주류의 정부기관들이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지위변화의 의제들을 제도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주류의 조직들과 그 구성원이 자신들의 이해를 잠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김애령, 2000).

## 2. 구상과 실행의 괴리-양성평등과 요보호여성 복지 중심의 여성정책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7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예산집행이 되었던 세부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여성정책의 이념과 실현의 괴리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6대 전략목표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대 과제와 전략목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지원이나 요보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라는 전략목표에 상응하는 예산이 사례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정책총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은 보육시설지원과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금이 포함된다. 양천구는 94.86%, 원주 83%, 춘천 8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50-60%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서비스 확충이 그 다음으로 여성정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여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사업

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서울 26.0%, 고양 25.5%, 인천 17.3%, 나머지 지역은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지원 및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물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녀평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상과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록 남녀평등의식 고양이나 여성들의 문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1-2% 정도의 저예산이거나 비예산 혹은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들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제협력이라는 전략목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정책의 기본전략 중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무척 중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비예산이거나 상징적인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목표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의 경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의 대상을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그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6〉 여성정책 목표별 예산 비중

(단위: %)

| 기 본 전 략 | 서울* | 인천 | 원주 | 춘천 | 진주 | 고양 | 양천 |
|---|---|---|---|---|---|---|---|
|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0.1 | 1.15 | 2.3 | 0.45 | 0.24 | 21.1 | 0.08 |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67.5 | 60.8 | 83 | 81 | 80.01 | 52.6 | 94.86 |
|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 20.2 | 5.8 | 9.05 | 16.6 | 0.03 | |
|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26.0 | 17.3 | 7.1 | 8.9 | 1.85 | 25.5 | 3.6 |
|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 | 0.6 | 1.1 | 0.65 | 1.26 | 0.77 | 1.45 |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0 | 0 | 0.7 | 0 | 0 | 0 | 0 |
| 여성정책 예산 총액 | 100% |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어, 여성정책기본계획 기본전략의 분류형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제고,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능력개발과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과 여성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확립과 상응한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은 여성발전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사례지역에서 여성관련 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가보조사업에는 국가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일부 시도비가 책정되고 있다. 국가보조 사업은 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보호시설 설치·운영·지도,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지도, 여성1366 지원, 편부모가정 지원시책마련,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아동보호시설 설치·운영·지도,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푸드뱅크나 재활용 관련 사업이 여성업무로 책정되어 예산이 쓰이는 사례가 있다. 자체사업은 주로 여성발전기금 관련 사업, 여성교양교육, 여성지도자 수련회, 딸들의 캠프,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등의 일회성이거나 행사 위주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사업비 구성에서 국가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예산과 인프라가 약한 지방정부의 여성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잔여적인 정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표 7〉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전략목표에 따른 사업내용

| 기 본 전 략 | 서울* | 인천 | 원주 |
|---|---|---|---|
|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주간, 여성백서, 정부위원회 및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율 확대, 서울여성 홈페이지 및 여성플라자 개원 여성정보 교류, 여야 출생 기념식수, 여성학 강좌, 여성신문 배포, 여성공무원 고충처리, 평등부부상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공무원 표창, 여성공무원 리더쉽 교육,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대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여성정책발전계획 수립, 청소년성교육교안개발 |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여성발전센터 내 취업프로그램,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여성기업제품 구매지원,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보육지원, 아동보육비 지원 | 여성근로자 교양교육 강사, 평등의 전화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보육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 보육시설 운영, 불우계층자녀 방과후 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농가도우미, 농촌여성일감 갖기 |
|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여성의 광장 건립 | 여성회관운영, 여성지도자 및 여성폭력 상담원 위탁교육 |
|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임산부 보건교육, 남아선호사상 완화 홍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시설 확충, 치매노인보호 사업, 고령자 취업 알선,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동부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플라자 건립 , 늘푸른 정보센터 운영, 미혼모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윤락, 성매매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긴급전화 | 여성종합건강진단, 남아선호사상 완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 모자원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 모부자가정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신혼부부건강검진,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 |

(계 속)

| 기 본 전 략 | 서울* | 인천 | 원주 |
|---|---|---|---|
|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 여성발전센터 교양강좌, 여성단체 활동 지언,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 여성단체 지원 및 월드컵 자원봉사단 운영 | 여성단체지원 및 자원봉사단 운영 |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여성정치의식 고양 사업 지원, 시민대학에 여성정치의식 특강 개설 | - | 여성정책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 |

| 기 본 전 략 | 춘천 | 진주 | 고양 | 양천 |
|---|---|---|---|---|
|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부부문패달기 | 여성주간 표창, 여성정책발전토론회, 남녀평등 교육 위탁 | 여성발전위원회, 딸들의 캠프, 청소년성교육, 여성주간 시상, 부모교육반 | 여성위원회 운영 |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농촌여성일감갖기, 근로복지회관어린이집 증축, 보육시설지원, 모부자가정지원 | 시청내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전문개발, 여성정보화사업, 농가도우미, 임산부 건강진단, 보육시설 지원, 여성교양강좌, 모자가정지원 | 근로자복지센터, 보육시설지원, 여성인력소개센터,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 보육사업, 편부모가정지원, |
|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여성시민대학, 외국인주부교양교육, 여성농업인 정보화, 여성회관운영 | - | 여성사회교육강사비 | 여성교양대학, 야간여성교실, 여성어학 |
|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임산부 영휴아 건강관리, 농가도우미,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 가출부녀자여비 | 유방아,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 여성피임지원, 여성농인모임지원<br>여성회관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소녀보호의 집,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사업, 가출소녀예방선도 | 일근위안부지원, 여성복지회관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 임신진단시약 및 영양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여성농업인능력개발,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 가족계획, 모자보건, 출생축하카드, 부인과적세포검사, 장애인 여성교실, 성적피해예방교육, 청소년성교육 |
|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한 기반 구축 |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 여성단체활동비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여성지도자교육 | 동부녀회장 간담회, 여성지도자교육, 여자축구단, 여성체육교실, 어머니배구단 운영 | 주부교실 및 어머니배구, 축구, 합창단, 권투, 검도, 여성단체간담회, 주부환경순찰단 |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 | - | - | - |

또한 사례지역들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몇 몇 사업내용들은 기존의 성역할의 변화보다는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달성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이들 사업은 목표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의 세부사업 내용들이다. 성인지적이지 못한 사업사례인 한마음 부부상의 경우, 수상대상자의 대부분이 종가에 맏며느리에 고생하며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식을 잘 키운 사람(현모양처)들에게 주어졌다. 사임당 상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의 효과는 오히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망하는 수상기준과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8〉 성인지성을 결여한 정책사례

| 사업명 | 문 제 점 |
|---|---|
| 여성지도자교육<br>(위탁, 양성교육) | 현대 · 전통예절과 건전가정의례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여고생<br>예비숙녀교실 | 공식적인 목적은 사회진출을 앞둔 여고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으로써 자질함양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임.교육내용은 특강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60분), 기본공통과정:올바른면접태도(90분),,피부관리(90분),이미지make-up(120분), 아름다운성(90분), 레크레이션(90분),선택과정:5개분야(다이어트,포토아트,생활요리,선물포장법,종이접기)-90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 한마음부부상 | 공식적인 목적은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등부부를 선발 · 시상함으로써 가정내에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민주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가정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임<br>도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결혼생활이 10년 이상된 부부로써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등을 공유하며 존중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를 선정한다는 취지<br>수상자의 수상이유는 종가 장손의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양가 동생들을 부양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슬하의 4형제를 훌륭히... 각자의 통장을 사용하며 존대어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음.. |
| 신사임당상 | 공식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표상이며, 겨레의 영원한 스승이신 신사임당의 높고 숭고한 부덕을 후손들에게 널리 선양함으로써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br>수상자는 남매의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 남편을 대학원장으로 아들 3남을 훌륭히 키워낸 장한 어머니에게 주어졌음. |

*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여러지역의 정책사례를 발췌하여 재구성

요약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내용과 대상은 다양한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행에 두어지고 있다. 비록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비예산이나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은 사회교육, 자원봉사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여성들의 지위와 현황을 반영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촉진이나 여성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정책은 지방정부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여성부서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업무가 중앙정부의 지방위임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지방사무, 그리고 처리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고유사무가 있다. 지방정부의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업무의 예산은 상당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비예산의 중앙의 지시업무인 지방위임 사무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정현주, 김원홍, 2001).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특성이 비단 여성정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정된 지방자치의 기본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중앙통치체제의 변형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조는 7개항의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제 9조는 6개의 영역에 걸쳐 57개 항의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전체업무 중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대략 40-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의한 위임사무이다(오재일, 2001).

이처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지역 여성정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지방정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3. 부족한 예산

정부예산은 정부가 집행하려고 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책정된 재정으로, 정치적, 경제적, 발전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 정책은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영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편성은 여성정책 및 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내용과 다양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그 동안의 여성정책 추진은 비예산 분야는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정책은 보육사업 이외에는 거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정현백, 2001).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 내의 사회보장비에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의 1% 대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관련 예산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제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정책을 위한 예산도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혜의 범위는 현재 분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이면서도, 그 동안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많은 연구와 작업들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이 비예산 사업에 집중되어 있거나, 요보호 여성이나 특정한 여성 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예산을 분석하기 위한 성별분리통계 자료나 도구들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에서도 여성관련 예산의 부족은 커다란 문제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이 미약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여성정책을 수립하거나 양성평등이라는 취지에 맞춘 사업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분석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9>.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책정된 예산의 전체대비 비율은 광역단체인 서울은 1.2%, 인천은 0.3%이며, 기초단체 대부분은 0.04-0.3%로 지극히 낮다. 재정자립도와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비율의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전체 예산 대비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구성비

(단위: 천원)

| | 2002년 예산 | | | | | | | |
|---|---|---|---|---|---|---|---|---|
| | 서울 | 인천 | 원주시 | 춘천시 | 진주시 | 고양시 | 양천구 | 도봉구 |
| 총예산 | 12,914,808,000 | 3,313,183,104 | 376,844,450 | 350,472,316 | 393,643,975 | 768,688,841 | 148,954,358 | 112,617,929 |
| 재정 자립도 | 95.4% | 76.3% | 37.5% | 35.2% | 36.23% | 77.9% | 56.99% | 37% |
| 여성정책 담당부서 | 155,596,891 | 9,104,648 | 967,530 | 5,518,552 (여성복지 계: 669,498) | 508,533 | 324,036 | 218,106 | 253,668 |
| 전체 대비비율 | 1.20% | 0.3% | 0.26% | 1.57 (여성복지 계 0.27)% | 0.13% | 0.04% | 0.15% | 0.23% |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중에서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빼면 그 부서의 예산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다음의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인천을 제외한 사례 지역들 모두에서 여성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 예산의 비율은 원주의 경우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의 20.41%에 달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아동복지 예산이 14.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양천구가 9.44%, 진주시가 5.15%, 그리고 고양시가 0.7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은 대부분 아동복지, 알뜰시장, 생활개선, 농촌일손돕기 등이다. 아동복지의 경우, 보호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은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비여성정책 예산 제외한 여성정책담당 부서 예산

(단위: 천원)

| | 여성정책담당부서 총예산 | 비여성정책예산 | 비여성정책 사업내용 |
|---|---|---|---|
| 서울 | 155,596,891 | 22,121,700 (14.22%) | 아동복지예산 |
| 인천 | 9,104,648 | 0 | |
| 원주 | 967,530 | 197,472 (20.41%) | 중국교포주부사업, 생활개선 , 향토음식연구회, 각종 행사지원 현수막, 농산물가공,농업테마마을, 환경친화형화장실 등 |
| 춘천 | 669,498 | - | 여성복지과 예산 5,518,552천원 가운데 여성복지계는 669,498천원, 아동복지 예산이 4,330,194천원 |
| 진주 | 508,533 | 26,173 (5.15%) | 농촌일손돕기, 부자가정지원, 합동결혼식, 건전가정의례교육, 영호남사랑나누기 등 |
| 고양 | 324,036 | 8,691 (26.8%) | 저소득부자가정지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
| 양천 | 218,106 | 20,586 (9.44%) | 구민알뜰장, 먹거리장터, 반환금, 우수단체인센티브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만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정책이 여성이라는 대상 중심의 정책이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모든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상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총예산 구성의 결과를 <표 11>에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높은 위상과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구비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정책 예산이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나머지는 타부서의 보육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다른 기초단체인 경우에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여성관련 예산이 원주시는 16.4%, 진주시 9.40%, 고양시 8.4%, 양천구 2.64%로 극히 미미하다. 이는 사실상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2002년 여성정책총예산 구성비

(단위: 천원)

| | 여성정책담당부서 여성정책 예산 | | 타부서 여성관련 예산 | | 여성정책총예산 | | 타부서의 여성관련 사업 |
|---|---|---|---|---|---|---|---|
|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
| 서울시 | 133,475,191 | 99.8 | 324,378 | 0.2 | 133,799,569 | 100% | 보건복지국의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임산부 검진, 산업경제국의 여성전문능력개발, 문화관광국의 여성영화제 및 어머니 합창단 |
| 인천시 | 9104648 | 48.7 | 9,611,760 | 51.3 | 18,716,408 | 100% | 사회복지과의 아동 및 보육사업 49.6%, 농정과의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정보화 사업 |
| 춘천시 | 4,252,187 | 96.1 | 172,802 | 3.9 | 4,424,989 | 100% | 보건소, 농어기술센터,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계의 어린이집 증축 |
| 원주 | 718461 | 16.4 | 3,649,311 | 83.6 | 43,67,772 | 100% | 사회복지과의보육사업, 보건소, 농촌지도과, 자치행정과의 여성지도자교육, 문화관광과의 여성생활체육 |
| 진주 | 472,360 | 9.40 | 4,550,210 | 90.6 | 5,022,570 | 100% | 아동청소년과의 보육 70.34% |
| 양천구 | 198069 | 2.64 | 7,298,955 | 97.4 | 7,497,024 | 100% | 가정복지(보육시설지원) 94.82% |
| 고양시 | 324036 | 8.4 | 3,549,596 | 91.6 | 3,873,632 | 100% | 가정복지과 보육계, 보건소, 생활체육계,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 여성복지회관,보육시설지원 |

## 4. 지방정부 내에서 여성의제의 배제와 성관점의 평가시스템 미비

최근에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시책의 집행성과를 평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광역자치단체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2001년 1월 18일에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 6347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관평가로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및 제9조).

광역자치 단체 평가는 총 8개부문, 18개영역, 50개 시책, 126개지표, 그리고 26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광역자치단체평가는 각 부처의 개별평가를 종합평가로 통합하면서 주요시책 평가, 추진역량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괄하는

기관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한표환, 2001).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도구를 검토해 보면, 지방정부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다.

참고로 주요시책 평가 지표 중 복지와 고용부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광역단체에서 복지시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적부조와 장애인 및 방문간호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의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에 시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는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록 여성복지 항목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 복지시책의 실천에 대한 성관점의 평가를 포함시킬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수혜대상의 성별 수혜율과 같은 지표 하나만을 포함시키더라도 그 평가가 가지는 함의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복지시책에 있어서 성별로 분리된 통계나 예산 및 교부금의 수혜에 대한 성별 통계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12〉 복지부문 세부평가지표

| 영역 | 시책 | 지표 | 세부지표 |
|---|---|---|---|
| 복지 향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확립 | 기반조성노력 | 사회복지전문요권 1인당 수급지수<br>생활보호대상 데이터 초기 입력률 |
| | | 자활지원성과 | 자활지원 네트워크 회의개최실적<br>기초생활보장기금 조건부수급자 대비 조성비율 |
| | 장애인복지 시책실천 | 기반조성노력 | 전체예산대비 장애인 복지예산비율<br>장애인관련 홍보실적 |
| | | 장애인복지증진성과 |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br>장애인 우선허가사업 허가율<br>장애인 생산품 구매율<br>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 | | 정신보건사업기반 조성노력 | 관련기관설치실적, 예산비율, 전문인력확보율, 편견해소 홍보실적 |
| | 정신보건 및 방문간화사업 관리 | 정신보건사업성과 | 활용, 추진, 직업재활지원 실적 |
| | | 방문간호사업 기반조성 | 방문간호 담당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수<br>전문교육실적<br>예산총대비 방문간호사업비 비율 |
| | | 방문간호사업성과 | 대상자별 방문간호서비스 수혜율 |

지역경제 진흥부문 중 고용촉진 시책에 관한 평가항목을 보면 복지부문과 비슷

한 한계를 가진다. 고용촉진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인력의 수급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여 촉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의 특성상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특성은 또한 다를 것이다. 고용촉진책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인지적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지역경제진흥부문 중 고용촉진

| 영역 | 시책 | 지표 | 세부지표 |
|---|---|---|---|
| 고용촉진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기반조성 | 지방비 의무부담액 확보율 |
| | | 목표달성도 | 홍보실적 |
| | | 훈련계획의 적절성 | 훈련기관 적정 지정현황<br>교육훈련 우선선정직종 지정비율 |
| | 고용촉진훈련 | 훈련성과 | 훈련수료비율, 자격취득률, 취업률 |
| | | 실업자DB 활용도제고 | 실업자 DB 입력비율<br>실업자 DB 담당자수 |
| | 주민밀착형고용 서비스제공 | 서비스지원 노력 | 중복수혜결과 활용 |
| | 신노사문화 정착실천 | 교육, 홍보 | 교육실적 |
| | | 신노사문화정착성과 |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운영실적 |

행정관리부문에서의 평가지표는 남녀평등인사관리를 하나의 시책으로 포함함으로써, 앞의 두 사례와는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혹은 성인지적 관료의 존재는 여성정책을 주류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14〉 행정관리부문 평가지표

| 영역 | 시책 | 지표 | 세부지표 |
|---|---|---|---|
| 조직, 인사운영 | 지방조직개편 | 정책관심도, 조직정비성과, 기증정비성과, 인력정비성과 | |
| | 남녀평등 인사관리 | 채용관리노력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 | | 보직관리노력 | 여성공무원 평균초과 배치과율<br>시도전입 여성공무원 비율 |
| | | 승진관리노력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br>인사관련위원회 여성공무원 비율 |
| | | 교육훈련노력 | 해외훈련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
| | 공무원 교육훈련 | 교육훈련의 적정성, 활성화, 방법의 적정성,<br>우수교수교원 확보노력 | |

다음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평가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무난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의 기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시행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약에 시행하고 있다면 정상추진, 그렇지 않으면 부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매우 단순해 보이며, 앞서 지적하였듯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취지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1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9년도 시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 구 분 | 총건수 | 추진상황 | | |
|---|---|---|---|---|
| | | 정상추진 | 부진 | 완료 |
| 서울특별시 | 25 | 24 | 1 | |
| 부산광역시 | 32 | 31 | | 1 |
| 대구광역시 | 33 | 31 | 2 | |
| 인천광역시 | 33 | 33 | | |
| 광주광역시 | 33 | 32 | 1 | |
| 대전광역시 | 29 | 28 | 1 | |
| 울산광역시 | 32 | 30 | 2 | |
| 경기도 | 25 | 24 | 1 | |
| 강원도 | 58 | 58 | | |
| 충청북도 | 34 | 34 | | |
| 충청남도 | 34 | 31 | 3 | |
| 전라북도 | 42 | 41 | 1 | |
| 전라남도 | 33 | 31 | | |
| 경상북도 | 32 | 32 | | |
| 경상남도 | 35 | 35 | | |
| 제주도 | 34 | 34 | | |
| 계 | 544 | 529 | 14 | 1 |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 지표들은 성중립적 혹은 성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성인지적 평가지표를 포함시키는 것과 별도로 성인지적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책과 그 평가방법이 성

맹적이라는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성중립적인 정책평가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인지적 평가틀의 마련은 그 내용과 함께 현재의 행정여건과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Ⅳ.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를 위한 대안 모색

### 1. 성주류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 정책도구의 개발과 성인지 교육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과 같은 여성정책의 청사진은 문서화된 내용을 액면그대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 양성평등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주류화, 성인지적 정책 등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도구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본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인 선진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도구와 역량이 아직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비록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성정책이라는 범주에도 명목상의 양성평등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정책의 경우에도 성인지성이라는 정책원리 혹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여성의 관점으로 구성된 정책지표와 방법이 정교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구상과 실행의 괴리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성주류화의 전략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저조하다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현실 적용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여성정책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앞서 GAD 접근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needs)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파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구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그 지역 여성의 요구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인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인지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성인지적 정책평가시스템의 마련, 여성정책 뿐 아니라 일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등 성주류화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고안할 수 있는 많은 정책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정책 추진의 주체인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2.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성대중 및 여성 NGOs의 정책능력 향상 노력

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민선자치는 중앙정치에만 적용되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지방정치에도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주민들의 일상사가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집합적 결정을 통한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전상인, 1997).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 지방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중앙정치 수준의 시민사회에 비하여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성경륭, 1997).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운동의 성장과 지방자치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민첩한 대응, 그리고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며, 지역여성들은 주민들의 의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단위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여성 대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 여성 NGOs는 그 동안 비정치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동안 제도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의사수렴의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NGOs들은 긴급구호활동과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정부의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하고, 이전에 비해 교육와 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의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최근의 여성 NGOs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지역 여성조직이 결합하여 여성들의 복지요구 및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제언 등 정책 전문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본다면, 1980년대 이후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는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물론 변화된 환경에서 여성이슈가 소외되기는 하지만 페미니스트 관료와 여성 NGOs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여성들의 선거권이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제기구의 조력과 함께 여성정책의 후퇴를 견제해왔던 경험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부가 신설되고, 페미니스트 관료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운동이 광범위한 지역 여성대중을 근거로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간다면, 여성정책의 후퇴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희, 2000).

여성 NGOs의 정책능력 향상이 필요한 이유는 의회 및 지방행정제도에서 성주류화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몰성적 정책운영에 대한 비판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NGOs가 현장에 기반한 지역 여성들의 요구파악과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지역여성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책능력 향상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의회의 예산편성과 정책형성에 반영하고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정치와 행정에서의 성주류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소연, 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희, 2000,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2000년 봄호
김경희, 2001,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김경희, 2001, "정부와 여성 NGO의 여성정책담론: 성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NGO 학회 학술대회.
김애령, 1999,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세력화" 한국여성연구소 세기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심포지움 자료.
성경륭, 1997, "지방자치와 국가세력"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오재일, 2001, "지방자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이영자, 1998, "지방화: 여성주체의 미래사회를 위하여" 지방화와 여성, 미래인력연구센터.
전상인, 200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이론과 역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정현백, 2001,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Carol Miller and Shahra Razavi, 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UNDP

## 1부 토론

**권 용 현**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민 경 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윤 정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권 용 현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1. 중앙과 지방의 업무연계에 관한 지자체의 인식(2001조사)

가. 중앙정부의 업무연계 저해 요인

○ 여성정책의 개발보급 부족, 예산지원 없는 업무협조 요청, 행사에 대한 인력동원 요청, 전문성 부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세부적인 업무지침 부족 등을 지적

나. 지자체의 업무연계 저해 요인

○ 인력부족, 예산부족, 여성업무 담당부서 조직구성의 부적절성,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

##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기구 재정비 필요

가. 2001년 중앙정부에 여성부가 발족된 것과 상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기구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필요

나. 지자체의 경우 1998년이후 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명칭과 업무내용이 매우 다양해져,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광역의 경우 상당수가 課단위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局단위에는 보건과 사회복지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명칭에 여성이 표기되지 않거나 참모기관형태인 여성정책관을 설치

→ 여성정책 전담국 신설, 인력확충 필요

○ 기초의 경우 상당수가 사회산업국(또는 생활복지국)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수행

→ 여성정책 전담 課 또는 전담 係 신설

## 3. 각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의 표준화 필요

가.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업무 및 업무수행방식 등을 표준화함이 필요

○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가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업무 표준화 수준에는 미흡

나. 또한 이 표준화에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하는 등의 다소 어려운 사무배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 이는 지자체의 여성정책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지자체간 균형있는 정책서비스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임.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가. 지자체의 여성업무중 상당수가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국고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이 필요.

**< 2003년도 여성부 국고보조사업현황(예시) >**

-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운영** : 국고보조 29억1천만원, 지방비 29억1천만원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국고보조 13억7천만원, 지방비 8천만원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 국고보조 4억6천만원, 지방비 4억6천만원
-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 : 국고보조 23억6천만원, 지방비 13억8천만원
-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 국고보조 11억6천만원, 지방비 11억6천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 국고보조 67억원

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지자체도 여성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배정을 우선하는 노력 필요

## 5. 그 외 중앙-지방 연계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가. 중앙정부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자체를 참여토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으면서도 명료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을 사전에 제거

나. 중앙부처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조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2003년부터 시행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국무총리) 및 여성정책책임관제(45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1인 지정)를 효율적으로 운영

다.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정책분석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법교육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기술적 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3설립)에서 동 교육기능을 담당해 나갈 계획임.

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하고, 이를 feedback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민 경 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 1. 여성정책의 지방화

지방화(localization)는 각 지방이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상대적 정치 경제적 자립과 자율적인 사회조직 및 지방문화의 창조 등 지역생활의 뿌리내림을 위한 지방의 자기 전개적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나남출판, 1994).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란 주민이 대표를 뽑아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체제이다.

지방화 시대의 재개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즉 지방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능에서 벗어나 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지방화 추세에 따라 여성문제의 해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다룰 문제가 되었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여성문제 해결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이제 지방정부는 지역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으며 '여성정책'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놓고 서로 비교 평가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방정부와 정보를 교환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여성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여성들에게 여성정책이 보다 가까워진 것이다.

## 2.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의 방향 및 집행전략

여성정책이 도, 시 · 군의 여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분권 시대라 하여 국가의 정책기조가 없을 수 없듯이 여성정책 역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있어야 한다. 여성정책의 지방화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보편적인 여성문제에 민감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특수한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 어업이 주 산업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단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 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여성문제 해결의 주요 전략인 정책에서의 성주류화가 국가 정책의 각 분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제 단위로(광역 및 기초)로 확산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은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 및 평가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의 여성부서의 업무는 내용에 있어서 예전 여성복지과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여성부서는 남성공무원들에 의해 기피되는 부서이고 타 부서에 비해 힘이 없는 부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지방화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에서의 성주류화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성정책담당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단체장이 수장이 되어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 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입안 및 평가업무를 직접 챙겨야 한다.

## 3. 여성정책의 지방화 조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성정책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입안·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리 정책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적어도 여성부서의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들이 이

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또 각종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훈련이 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시 '남성' (gender 의미의)공무원이 대체되어 여성정책 시행주체의 수준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여성정책은 파편화되고 체계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여성정책의 지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성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정책의 지방화는 지방 여성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즉, 지역여성들의 요구와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광역단위에는 지방정부 연구원이 하나씩 설립되어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분야는 아직도 국가차원의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관련 지방연구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는 행정자치부의 '1개 광역단위, 1개 연구소'원칙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규제가 풀려야 할 것이며. 아니면 지방정부 연구원에 반드시 여성분야를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어떤 지방정부는 '전문위원'이라 하여 민간연구원들을 여성정책 부서에서 직원화하여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구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예산의 문제이다. 몇 개의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아직 지방자치가 재정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여성문제의 제 분야에 걸쳐 시행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 등의 이슈가 아직은 '구호' '상징'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많은 지방에서 여성정책을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정책개발'에 대한 요구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돈 안드는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아직도 여성 업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예산을 지방차원에서 분배하는 복지 관련 사업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려면 예산의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넷째,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정책의 발전은 관계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단위가 작아질수록 관계자들의 성평등의식은 낮은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책임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실장, 여성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윤 정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1. 여성, 정치과정의 새로운 행위주체로 등장

1990년대 이후 지자체의 부활은 여성운동의 담론과 전략적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정치과정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은 비로소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여성, 정책결정의 주요 대상이며 주체로서 자신들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운동은 1) 지방선거의 유권자로 지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2) 제도정치의 진입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며, 3) 정책에 비판적인 개입을 하고 대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지방화시대에 '분권과 자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가장 다수인 소수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을 가시화, 세력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 되었다. 지방선거에 여성정책 요구안을 만들어 후보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여성후보를 발굴· 지원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만들어나갔다. 90년대 중반이후 '생활정치의 주역' '지역살림 여성의 손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의 세력화'라는 지역여성운동의 모토는 선언이자, 지역이 여성의 세력화 및 여성운동의 하나의 주요한 근거지이자, 정치적 주체됨의 진입점이라는 실천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 즉 시민참여, 권력분화, 자율과 평등, 네트워크형 조직, 자율과 자치, 다양성과 의사소통 등을 원리로 하는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김경희교수가 글에서 밝혔듯이 세계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GO/여성NGO의 전략이 되고, 90년 중반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의 기저로 자리잡은 성주류화 담론과 전략인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을 정치과정의 주요 행위 집단으로 세력화의 중요한 전략으로 성루류화를 화두로 하여, 공적·사적 영역에 걸친 주류 기존의 제도, 정책, 가치, 문화등을 '여성의 눈으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질문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은 중앙과 지역의 여성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개입, 비판, 참

여의 주체적 행위집단으로, 또한 파트너로쉽으로 세력화하고 있다. 여기서 2차 여성발전계획(2003-2007년)의 10대 중점과제중 첫 번째로 설정된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과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과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은 지역정치의 여성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여성운동이 정책개입의 방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 2. '젠더' 질문과 여성정책 전과정의 재조직화

사회적 · 역사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관점으로 여성정책을 보는 것은, 여성운동이 정책에 대한 분석과 실천방식 모두에 새로운 전환점을 준다. 그간 여성운동은 여성정책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보는 '여성특수주의'적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전 과정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통합해 본다는 것으로서의 성주류화는 '존재하는 구조들이 성중립적'이라는 통념과 상식에 대한 질문을 해온 여성들에게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개입이 보다 구체적· 전문적이어야 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과 효율성 대한 문제제기-> 분석방법의 개발->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실천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분배, 즉 예산의 성별분석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은 여성운동의 정책개입의 영향력의 향상과 함께 정책담당공무원과 여성정책 자체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정책과 예산분석을 통해 발견한 구체적 내용은 김교수의 글에 잘 분석되어 있다. 다른 측면에서, 최근 분석과 피드백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통해 정책현장에서 배운 점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여성정책과정의 재조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1) 여성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집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2) 성주류화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나 구체적, 효과적인 정책조치는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주류화의 개념은 서로 달리 이해되었고, 따라서 여성특수주적 관점이 여전하다.
3) 여성정책은 지자체 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큰 차이와 변화가 있는데, 아직 그 의지는 성과주의적· 과시적 형태로 나타난다.
4) 이로써 '정치적 의지'의 '제도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5) 여성정책기구는 지방행정 구조내 주변화된 조직이고, 담당공무원의 역시 여성정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파트너쉽의 과정과 형태'에 대한 지자체와 여성단체간의 이해가 부족했으며, 그 관계설정을 과정중에 있다.

7) 정책과 예산분석이 구체적, 대안적일 경우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높다.

8) 중앙과 지역간의 정책적 연계와 파트너쉽/ 지역의 다양한 여성자원간의 파트너쉽과 네트워킹은 더욱 공공해져야 한다.

9) 지방의회는 성주류화 및 여성정책의 변화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10) 정책분석의 피드백은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지역의 여성들 역시 그 대상이어야 한다.

## 3. 여성정책의 파트너쉽의 조건: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공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방정부의 책무사항이기도 하므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또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지역 여성단체들 또한 자신들의 주요활동의 하나로 정책의 분석 및 제안으로 잡고 있다. 최근 들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을 분석해온 여성단체들은 분석과정에서 '멀리서 숲을 보다가 현미경 들이대고' 활동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중요성과 실체를 비로소 실감하며, '자신감과 뿌듯함' 그리고 자신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역의 큰 주체'임을 체험했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생활정치와 지역자치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며, 여성단체가 선언적 정책 요구에서 대안적 정책수립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올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20여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변화의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여성단체의 이러한 분석결과에 처음의 방어적 태도에서 수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해당 여성단체들 역시 담당공무원과의 소통이 수월해졌고, 피드백 효과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성주류화와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과 상호 배움이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지역여성단체의 정책개입을 통한 소통과 정책변화를 만들게 된 한 여성정책담당 공무원은 '우리 지역에 그런 여성단체가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선진문

물을 배운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김복규 교수의 지적대로 정책에서 여성의 힘은 부족하고, 아직은 참여보다는 '참석'의 형태, 즉 토크니즘 방식이 여전하며, 파트너쉽의 대상도 일정한 여성단체에 국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오늘과 같이 여성정책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인 여성정책집행자(공무원), 정책의 분석과 제안자(여성단체), 그리고 학자와 연구자들의 공유와 소통의 자리는 정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사회 : 이 은 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조발제 1

#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 면 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 과장)

#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 면 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 과장)

## Ⅰ. 머리말

여성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들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에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에서도 여성부문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제4차 북경여성 회의(1995년)이후 1995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발전 10대과제를 발표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말 제정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법적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이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적 도구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1. 서울시 여성정책의 추진연혁

서울시 역시 여성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60년대부터 도시화 · 산업화에 따라 가출여성과 저소득 근로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직업보도사업 전개, 부녀상담

소·시립부녀사업관·시립부녀보호소 설치 등 피해여성보호차원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핵가족화 및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생활방식이 급변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교육수요와 생활문화교육이 증가하였으며, 시립여자기술원과 구로부녀복지관을 개관하였고, 부녀교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적 관심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부녀복지관을 대폭 정비하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시 가정복지국과 각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개편을 계기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인력 활용,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2년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책자문을 위해 보육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민선1기에는 여성정책보좌관이 신설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위해 시장의 정책자문기관으로 서울여성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시기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90년대말 소위 IMF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여성들의 고용기반과 최근의 사회고위층·대기업등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 고용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성희롱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보화사회, 남북화해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디지털 기회의 확대를 통한 계층간·지역간·남녀간 불평등 해소, 그리고 남북한 문화연대를 통한 남북한 문화동질화 등이 2000년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2. 지방자치제후 시기별 여성정책의 중점사항

민선1기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민선2기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등사회를 목표로 성차별개선, 여성복지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기였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관심과 법적·제도적 토대위에서 민선3기는 성주류화와 파트너쉽을 시책의 추진전략으로 하여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지방자치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선1기에는 첫째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여성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고, 둘째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였으며, 셋째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추진하였다.

나) 민선2기는 첫째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많은 여성이 공직에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여성기업인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노인의 복지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넷째는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여성 및 무의탁여성 등에 대한 보호·상담·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4가지 방향을 설정 추진하였다.

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첫째 보육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 민간보육시설 지원강화 등 공보육 기반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사회교육기관특화 및 책임경영 강화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시켜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확대하며, 셋째 여성NGO 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 및 여성

발전기금 조성확대, 양성평등홍보 · 교육 · 제도개선 등 차별적 관행 개선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를 조성하고, 넷째 한부모 · 위기가정 지원, 가출청소녀 선도 및 성매매종사여성 등 소외여성의 복지 증진과 재활 자립기반을 지원하며, 생활주변의 안전환경개선으로 어린이 안전보호로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로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Ⅱ. 서울여성정책 4개년계획

### 1. 개요

서울시 여성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구현」이라는 목표로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을 ①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②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③ 여성 · 가족의 복지증진 ④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⑤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 등 5개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사업지원자금조성운영, 민간보육시설 지원강화 등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영아 · 장애아 ·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을 다양하게 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한 사회교육기관의 특화, 여성창업지원, 여성CEO 육성 등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NGO 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지원하고 양성평등 홍보 · 교육강화 등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소외받는 여성 ·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부모 및 위기가정 지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개발, 가출청소녀 선도 및 재활 자립기반 제공과 소년소녀가정의 보호시스템 확대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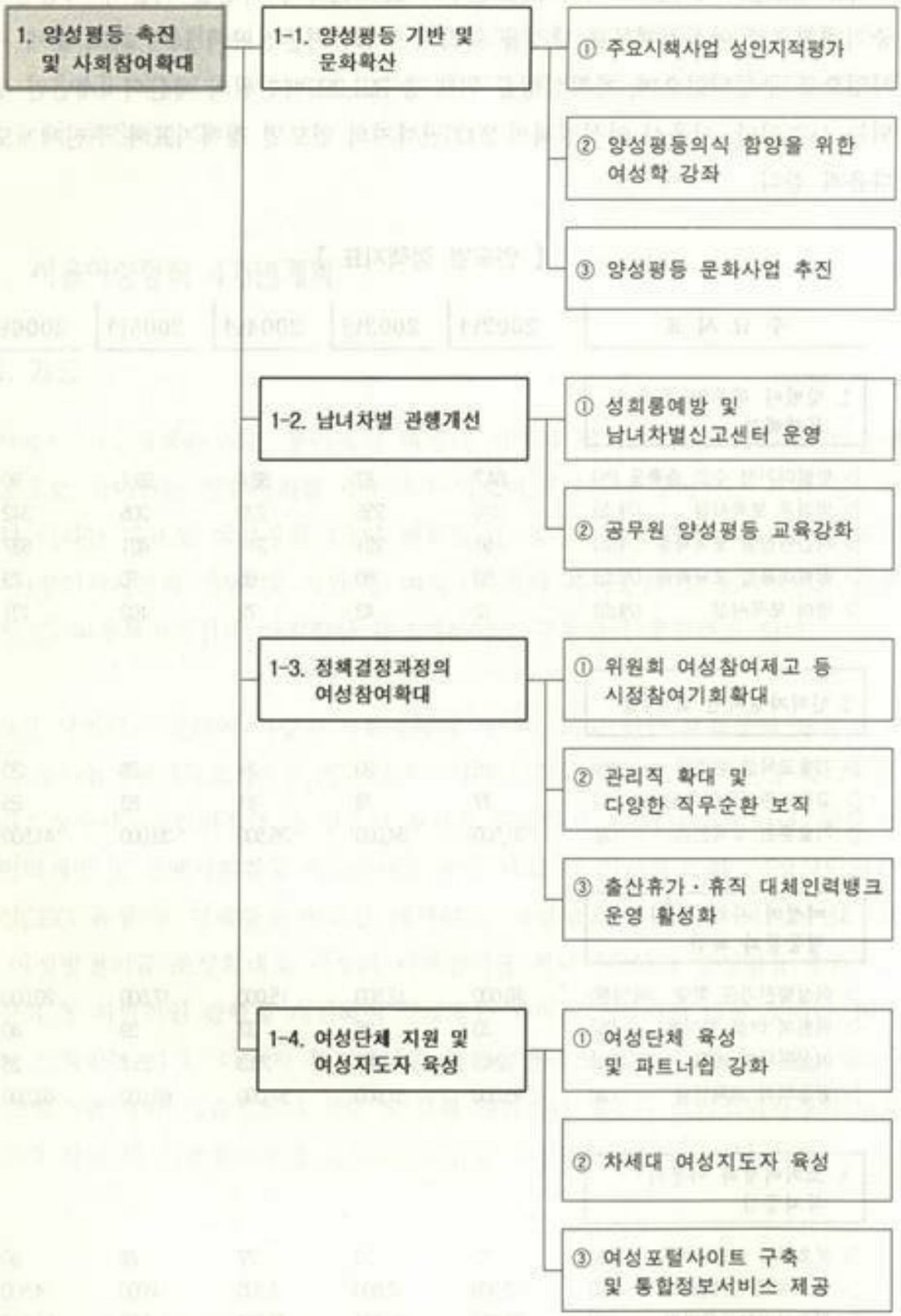
서울여성정책 4개년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서울시 여성정책의 중기계획으로 여성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5개의 기본전략에 14개 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계획실행을 위해 총 321,259백만원의 예산이 4개년간 투입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여성정책의 2006년까지의 연도별 정책지표와 추진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정책지표 】

| 주 요 지 표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1.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해결** | | | | | |
| ▷ 맞벌이가정 수요 충족율 (%) | 84.7 | 87 | 88.4 | 89.7 | 90 |
| ▷ 방과후 보육시설 (개소) | 210 | 235 | 270 | 305 | 342 |
| ▷ 시간연장형 보육확충 (개소) | 91 | 201 | 311 | 421 | 537 |
| ▷ 장애아통합 보육확충 (개소) | 53 | 60 | 65 | 70 | 73 |
| ▷ 영아 보육시설 (개소) | 12 | 42 | 72 | 102 | 131 |
| **2. 인적자원지원 및 개발** | | | | | |
| ▷ 기술교육생 취업율 (%) | 16 | 20 | 24 | 28 | 30 |
| ▷ 교육기관이용만족도 (%) | 77 | 79 | 81 | 83 | 85 |
| ▷ 기술훈련 교육인원 (명) | 31,500 | 34,000 | 36,500 | 39,000 | 41,500 |
| **3.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문화 확산** | | | | | |
| ▷ 여성발전기금 확대 (백만원) | 10,000 | 12,500 | 15,000 | 17,500 | 20,000 |
| ▷ 위원회 여성 참여율 (%) | 33 | 35 | 37 | 39 | 40 |
| ▷ 여성공무원 비율 (%) | 24.5 | 24.9 | 25.3 | 25.7 | 26 |
| ▷ 평등의식 교육인원 (명) | 45,000 | 51,000 | 57,000 | 63,000 | 68,000 |
| **4. 소외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 | | | | |
| ▷ 보호시설 이용만족도 (%) | 75 | 76 | 77 | 78 | 80 |
| ▷ 청소년 전문재활교육 (명) | 2,500 | 3,000 | 3,500 | 4,000 | 4,500 |
| ▷ 어린이안전교육인원 (명) | 36,900 | 49,000 | 57,000 | 71,500 | 91,500 |

【 여성정책 4개년계획 추진체계도 】

◎ 5개 분야 14개 과제 40개 단위사업



-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 2-1. 여성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 ② 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 추진
    - ③ (재)서울여성 운영 활성화
    - ④ 여성CEO · 국제관계 · IT · 전문가 양성교육
    - ⑤ 실버계층 전문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립 지원
  - 2-2. 여성창업지원 기반구축
    - ①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 ② 여성기업박람회 개최 등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 **3. 여성 · 가족의 복지증진**
  - 3-1.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①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② 성매매예방 및 탈성매매 선도재활 지원
    - ③ 무의탁 여성보호시설 운영내실화
    - ④ 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 ⑤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 3-2. 10대 가출 · 성매매 선도재활사업
    - ① 심야 길거리상담 운영강화
    - ②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테마여행"
    - ③ 가출 · 성매매 청소년 예방 및 선도재활 강화

- 3-3.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 ① 성폭력 여성장애인 보호·상담시설 운영
  - ②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 ③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 3-4. 여성건강 의료 서비스 향상
  - ① 영유아 보호·출산여성 등 모자보건사업

- 4.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 4-1. 공보육 기반 구축
    - ① 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운용
    - ② 보육시설 확충 및 종교시설 보육참여 활성화
  - 4-2. 맞춤형 보육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 ① 영아·장애아 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의 확충
    - ②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 ③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5.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
  - 5-1. 아동복지의 증진
    - ①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 ② 민간단체참여의 결식아동지원 확대
    - ③ 학대아동 보호체계 확립
  - 5-2.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 및 환경개선
    - ① 어린이 안전의식확산 및 안전시설 개선
    - ②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 Ⅲ.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 사업

서울여성정책 4개년 계획의 40개 사업중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시정운영의 분야별 시책 성별영향 평가 모델 개발

우리나라에서 정책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과 지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2001년으로 현재 시작 단계이다. 정책전반에 걸쳐 성별분석과 성별영향 등을 할 수 있는 정책평가제도 개발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정 각분야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에 대한 평가모델을 시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연구용역 중에 있다.

여성을 고려한 시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각 분야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하는 사업을 분류·개발하고,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른 성별영향 반영정도를 평가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다.

시책분야별 성인지적 종합평가메뉴얼을 2003년에 작성하고 실·국별 추진사업의 성인지적 평가시행은 2004년에 분야별 시범 실시후 2005년 이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2. 여성학 강좌

서울시에서는 전통적인 여성관 및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해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성차별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차별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교육기관·자치구, 서울시내 고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여성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첫 해인 2000년에는 각계 각층의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은행을 구성하였으며, 86개 기관에 223강좌를 개설하여 14,856명을 2001년에는 149개 기관에 252개의 강좌를 개설 25,556명을, 2002년에는 118개 기관에 252 강좌를 개설하여 31,340

명이 교육을 받았다.

2003년에도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470개 교육기관(여성단체,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고등학교 등)에서 연300강좌 20,0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학강사D/B 구축활용 및 여성학강사 워크숍 실시로 활용을 극대할 계획이다.

### 3.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며 지역단위의 각종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79년 10월에 남부여성발전센터(금천구 시흥동)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86년 12월에 중부여성발전센터(마포구 용강동), 1989년 9월에는 북부여성발전센터(노원구 중계동)가 개원되었으며, 또 1997년 12월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양천구 신월동), 2002년 9월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광진구 노유동)가 개원되었다.

여성발전센터(5개소)는 2-4개월 과정으로 웹디자인, 인터넷정보검색사, 제과제빵,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80여개 과목을 교육하여 부업, 소규모창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의 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명실상부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활동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999년 7월부터 1개소(서부)는 민간위탁, 2개소(중부, 북부)는 전문가 영입운영, 1개소(남부)는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프로그램이용자수 증가 및 시민만족도에서 우수하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게 되었다.

2002년 9월에 개원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재)서울여성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2003년 상반기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를, 하반기에는 남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할 계획이다.

## 4. 서울여성플라자 및 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 운영

### 가.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및 역할

5백만 서울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내외 여성 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제 1기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서울여성플라자』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여성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며, 여성계 각 분야의 요구를 수렴하여 여성정책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의 역할을 구상하고 그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1996년 제1기 서울여성위원회에서 건립제안에 이어 1997년 1월에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계획 방침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규모 여성전용시설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출발되었다. 특히 여성만을 위한 시설건립에 대한 반대의견과 건립장소확보, 시설의 규모, 기능설정, 예산과다소요,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단체, 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후 수차례의 여성위원회 개최, 시민의견수렴, 건립보고회, 열린시정개최, 건립자문위원회의 심층 토의등을 통해 최종설계가 완성되었고, 1999년 11월에 착공하여 총 공사비 334억원을 전액시비를 투자하고 2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2년 6월 4일에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2,302㎡(1,966평) 규모로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아트컬리지(정보교육원), 자원활동센터, NGO센터, 여성사전시관, 각종 교육 · 문화 · 연수 · 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장(450석 규모), 음악, 연극 등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아트홀(300석 규모)과 총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380여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성 공동의 장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분야의 공동관심주제에 관한 활동을 주로 하는 여성단체를 위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 운영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인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할 기구로 설립되었다.

2002년 1월 출범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참여 확대, 건강한 여성문화창조 등을 통해 여성도 국가적 자원으로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사회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정관에 따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의 실질적인 운영 대표로서 서울시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1처 5부(사무처, 총괄운영부, 경영기획부, 교육사업부, 교류지원부, 시설관리부)로 구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며 총 3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전문여성인력 및 지도자 교육, 여성기업인 지원, 국내외 여성협력사업 등을 통해 여성관련 정책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료들을 생산하여, 여성관련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핵심역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5. 보육수준 서비스 향상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기를 거쳐 지난 1997년부터는 영아 · 장애아 보육, 야간보육 및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보육시설은 총 4,348개소, 172,619명으로 전년도 보다 268개 확충되었으며 10,865명의 보육아동이 증가되었다. 보육시설 종사자도 19,274명으로 전년도 보다 1,748명이 증원되어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다. 0세~ 5세의 보육대상아동을 67만 3천명으로 추정할 때 보육서비스 공급률은 25.6%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민선3기에 추진할 보육정책4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사업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특수보육, 교재교구 · 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둘째, 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동네공원 조성시 어린이집 설치를 민간참여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이와함께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의 설치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영아 · 장애아 전담, 야간 · 24시간 등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 등을 확충하여 보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넷째,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종사자의 후생복리 증진 및 보육장비의 프로그램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특화시켜 추진하고 있는 보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제고로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50억원씩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보육, 특수보육, 교재교구 · 기자재 현대화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2) 다양한 맞춤형 보육 확대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하여 결손가정 및 야간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야간 · 24시간 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와 특히 장애아의 보육시설을 넓히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또한 방과후교실을 확대하여 사교육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초등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기여하는 제반시책을 추진하고있다.

2002년에 추진한 보육시설 확충 현황을 보면 야간 · 24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8개소,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 5개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8개소, 방과후교실 28개소 등 49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70개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6. 성매매집결지역 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다시함께 프로젝트』)추진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종전에 단속위주로 추진되던 성매매 방지대책을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재활을 돕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여성정책의 중점과제로 선정 2003년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를 추진한다.

성매매 종사여성 집결지역 5개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추정 자료, 2002. 12월 현재)

| 구 분 | 계 | 용 산 구 (역전) | 동대문구 (역전) | 성 북 구 (월곡) | 영등포구 (역전) | 강 동 구 (천호4동) |
|---|---|---|---|---|---|---|
| 성매매종사여성 | 1,651 | 100 | 300 | 1,000 | 121 | 130 |
| 업 소 수 | 537 | 60 | 120 | 261 | 48 | 48 |

※ 전국적으로 69개 집결지역에 2천9백38개 업소, 종사 여성수는 9천92명으로 추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 결과
- 종사여성 33만명, 산업규모 24조원 추정

### 가. 추진방향

① 5개 성매매 밀집지역중 성매매종사자가 가장 많은 성북구 지역을 시범실시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기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며,

② 성매매 상담 · 활동가 양성, 성매매방지 시민운동,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하여 성매매방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③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활동지소, 쉼터 등 시설 구축과 법률 · 의료지원단 운영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나. 다시함께 프로젝트(Seoul Together Project) 세부 사업

① 성매매종사여성의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성매매방지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성매매안하기 백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성매매

예방활동참여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관련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탈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대책 심포지움』을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② 효과적인 아웃리치활동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현장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분야 종사자 및 성매매 경험자, 민간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 주관으로 50여명의 현장전문활동가(필드 워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복지상담소 담당자, 선도보호시설 상담원, 1366(여성긴급전화)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상담기법 등 전문 상담능력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종로, 강북 2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③ 성매매여성 『재활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와 성매매 밀집지역 인근에 『현장활동지소(현장지소)』및 『쉼터(보호시설)』를 설치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이다.

『지원센터』는 5개 성매매 밀집지역을 총괄적으로 상담을 비롯, 법률·의료 서비스 등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365일 24시간 운영), 주요 기능으로 일시보호, 현장활동가 관리, 법률·의료서비스지원체계 운영, 소집단교육을 통한 정보제공, 의식전환교육,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여성의 구조활동 전개법률, 의료 등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지소』는 5개 밀집지역별로 성매매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위기개입, 긴급보호, 홍보 등 현장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하며, 『쉼터』는 숙식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검정고시, 직업훈련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대 청소녀 전문보호센터인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④ 성매매여성의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초기에 중점지원이 필요한 심리안정과 정신과치료를 지원하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⑤ 새로운 일거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참여를 높이기 위해 훈련수당, 가계보조수당 등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가정복귀가 곤란한 여성을 위한 그룹홈 및 장기보호자를 위한 장기 쉼터 등을 마련,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⑥ 이러한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 여성부, 경찰청, 교육청, 해당자치구 및 경찰서, 민간단체,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7. 늘푸른여성정보센터(1318.seoul.go.kr)의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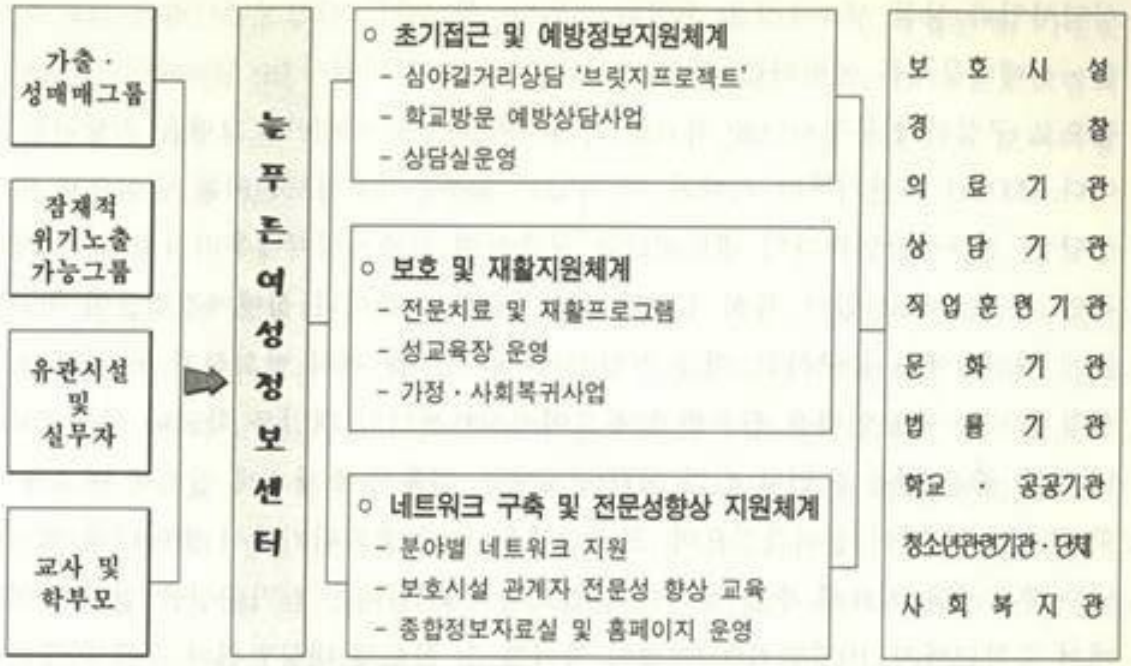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문제 등 유해환경 노출위험이 비교적 높은 10대 여성을 위해 2000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사회문제화되므로써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선도재활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여성위원회, 관련실무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10대 가출·성매매여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보호시설간의 연계,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계약직 4명 및 별정직 4명의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 가.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주요사업 및 특징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들은 10대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형성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10대 여성은 사회지원망이 취약한 계층으로 가정과 학교체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각종 유해환경의 위협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는 10대 여성 중에서도 가출이나 성매매의 문제에 이미 노출되었거나 잠재적인 노출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 유관시설 및 실무자, 교사, 학부모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은 크게 3가지 지원체계로 구성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체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4가지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야길거리상담사업 '브릿지 프로젝트(Bridge Project)'는 유해환경에 노출 위험이 높은 심야 길거리를 배회하는 10대 여성들을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길거리로 투입하여 다양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 YMCA청소년쉼터, 강남구청소년쉼터, 신림청소년쉼터 등의 민간기관에서 1997년부터 연 5회에서 20회 정도 간헐적, 소규모로 이뤄지던 것을 서울시의 지원으로 거리상담 전문인력들을 대거 투입하고 연간 상시운영 체제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심야거리상담 모델이 마련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째로 접어든 심야길거리상담사업은 전국 최초로 심야길거리상담의 정례화 및 상설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중 진행되는 정기거리상담 외에 계절에 따른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단기거리상담 등 10대 여성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02년도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18,280명의 청소년들이 상담서비스 및 성교육을 제공받았으며, 이중 44명이 귀가 및 보호시설로 연계되므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10대 여성의 가출·성매매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방문 가출·성매매 예방

상담사업과 상설 성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방문 예방상담사업은 학교를 가출·성매매문제를 예방하는 주요 거점으로 삼고, 심리검사자, 성교육강사,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단을 학교로 파견시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상담실, 전문상담인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출·성매매우려자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여고생들은 가출이나 성매매경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담실이 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개입은 학교나 학생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2년도에는 서울시 소재 6개 실업계 여고에 재학 중인 1,755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중퇴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거나 낙태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성과를 얻었으며, 2003년에는 참가대상을 실업계 여고에서 중학교까지, 10개교 6,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와 수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늘푸른여성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상설 성교육장은 전국 최초의 보호시설 10대 여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성지식 탐구, 성역할과 성심리를 통한 이성교제, 성매매관련 영상물 관람 후 역할극, 느낌 나누기 및 미래열기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8~1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탄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중순에 개소한 이후 2개월동안 보호시설 입소자 및 실업계 여고생 15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상담 및 보건교사, 보건소 실무자,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등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방문하는 등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성교육장의 운영방식과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10대 가출·성매매여성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테마여행'은 입소자들에게 숙식 및 보호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보호시설에 전문프로그램을 보급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보호시설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2002년에는 보호시설 입소자를 비롯하여 브릿지 프로젝트 및 학교예방상담사업을 통해 발견된 위기 상황의 10대 여성까지 포함하여 총 4,230명의 10대 가출·성매매 여성들이 치료 및 재활의 기반을 다졌다. 2003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해 단위사업 및 확대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복귀 준비를 강화시키기 위한 생활전환분야까지

추가하여 총 10개 문제유형별로(성매매, 성폭력, 학교부적응, 학업문제, 가정문제, 약물, 직업재활, 생활전환, 신체건강, 정신건강)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테마여행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넷째, 분야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전문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시설과 10대 가출·성매매 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 상담, 직업재활, 경찰, 문화, 거리상담 등 6개 분야의 네트워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네트워크의 경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및 지역별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10대 가출·성매매 여성들에게 무료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 및 위생문제에 취약해 왔던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학교, 법률기관 등 지속적인 민간자원의 발굴을 통해 10대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여 민·관의 체계적인 네트워킹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의의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10대 여성의 가출·성매매문제를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개입에만 의존해 왔던 기존의 미온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구이다. 특히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청소년보호정책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의 경험과 상황은 매우 다른데, 이는 10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부분에 있어서 10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후유증의 수준은 확연하게 다르다. 10대들은 가정과 학교체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사회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소외계층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여성은 성별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직

업의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며, 향락산업의 번창에 따른 10대 여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하에서 이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생활수단은 결국 성매매가 되는 것이다.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은 바로 이러한 10대 가출·성매매 여성의 특성문제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성폭력, 임신, 모자가정 등), 노동시장의 분절 및 향락사업에 의한 성매매 유입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은 10대라는 연령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화의 주요형성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내용과 수준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10대 가출·성매매 여성에 대한 개입은 극히 획일적으로, 보호자 인계나 훈방조치가 대부분이다. 작년에 성매매로 적발된 10대 여성 중 90%가 보호자 인계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중 절반만이 귀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또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또한, 귀가한 청소녀들의 경우도 해체되었거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 대부분이라 결국 가출과 성매매를 계속 반복,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는 10대 가출·성매매여성이 문제상황을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성인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발생의 원인, 과정,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은 10대 가출·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단 서울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연내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운영방식과 효과를 반영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대 여성의 가출·성매매문제에 대한 정책마련을 고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본 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늘푸른여성정보센터가 10대 여성정책을 위한 기수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Ⅳ. 발전과제

그 동안 급속한 환경변화속에 사회 각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평등의식 확산 등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져왔으나, 아직도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행태에 의해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직장과 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여성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남성들의 의식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성단체 등 여성관련 부문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정책의 영역을 남성사회로 확대하여 남성들이 고민하게 해야 한다. 가부장제도의 폐습과 남성지배구조의 역기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운용해 온 주류세력인 남성들이 우선 변하지 않고서는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논의는 주변적 존재로 규정되어 온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여성학 강좌를 여성들에게 뿐아니라 남성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여성 자신들의 의식변화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야 한다.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남아선호 등 남성의존적 사고의 틀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단편적이고 개별적 사례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이 여성권익 증진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들이

세력화된 집단의식을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적자원이 개발되고 국가의 부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 등으로 줄어들 노동력을 대체할 인적자원으로서의 여성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인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들이 확장되어야 하며, 국가경영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속에서 바람직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이슈화 및 정책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로 진입되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조발제 2

#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정 숙 영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정 숙 영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 Ⅰ. 경기도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 1. 경기 여성의 미래상

○ 세계 각국은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성 평등 관점의 통합을 강조하는 성 주류화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책의 대상도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됨

○ 즉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초점은 보호나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여성의 상태를 호전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여성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끌어올리는데 두어짐

○ 경기도는 그 동안 여성정책 기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경기여성의 "제도적 평등"은 물론 "결과적 평등을 실천할 것임

○ 2020년을 향한 경기도의 여성비전은 여성의 주류화, 성 평등 관점의 주류화, 사회의 주요 제도와 시스템이 여성 친화적이고 성 평등한 것으로 바뀌는 것임

○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 우먼파워 2020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인력을 적극 양성하며, 정치 · 경제 ·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성 친화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

## 2. 여성정책 목표(지표)

### ○ 경기여성 주요지표

| 분 야 | 지표항목 | 2000년 | | 목 표 | | 비 고 |
|---|---|---|---|---|---|---|
| | | 경기도 | 한 국 | 2010 | 2020 | |
| 정 치 및 행 정 | 여성의원 | 2.0 | 2.3 | 10 | 30 | 스웨덴 42.7%, 덴마크37.4%<br>노르웨이 36.4% |
| | 행정관리직 여성공무원 | 5.7 | 5.3 | 20 | 35 | 미국 44%, 캐나다 42%<br>이탈리아 54%, 스웨덴 28%<br>싱가포로 12%, 일본 9% 등 |
| | 위원회의 여성위원 | 34.7 | 25.8 | 40 | 50 | 유엔의 원칙 50/50 |
| 경 제 활 동 | 여 성 의 경제활동 | 47.4 | 49.5 | 58 | 65 | 스웨덴 74.5%, 캐나다 57.4%<br>일본 50.4%, 호주 53.7% |
| | 대졸 여성의 경 제 활 동 | 55.4 | 54 | 80 | 90 | 스웨덴 92%, 미국 82%<br>일본 68%<br>OECD국가 평균 83% |
| 여 성 예 산 | 여성정책 예 산 | 0.36 (2001) | 0.26 (2000) | 5 | 10 | |

### ○ 경기도 여성복지시설 확충 목표

| 시 설 | 2000년 | 지 원 금 | 2010년 | 2020년 |
|---|---|---|---|---|
| 가정폭력상담소 | 전체 21개소 중 12개소 지원 | 시설당 30백만원 (국 도 시군비) | 20개소 지원 | 31개소 |
| 성폭력상담소 | 22개소 중 10개소 지원 | 시설당 49백만원 (국 도 시군비) | 20개소 지원 | 25개소 |
| 피해자보호시설 | 2개소 | 142백만원 (국 도 시군비) | 6개소 지원 | 20개소 |
| 모자복지시설 | 전체 4개소 중 2개소 지원 | 121백만원 (국 도 시군비) | 5개소 지원 | 7개소 |
| 미혼모시설 | 1개소 | 180백만원 (국 도 시군비) | 2개소 지원 | 2개소 |
| 선도보호시설 | 1개소 | 72백만원 (국 도 시군비) | 1개소 지원 | 1개소 |
| 여성회관 | 20개소 | 20개소에 연간 총 12억~13억(도 시군비) | 31개소 지원 | 31개소 |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 4개소 | 시설당 40백만원 (도비50%+시군비50%) | 4개소 지원 | 4개소 |
| 인력개발센터 | 7개소 | 시설당 94백만원 (국비 100%) | 여성부 소관 | 여성부 소관 |

## Ⅱ.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

### 1. 여성발전 Infra 구축

1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 경기도 2020비전과 전략,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경기여성의 현실여건 진단 및 전망을 기초로 년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 발전의 기반마련

2 성인지적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

○ 변화하는 경기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여성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생산

○ 2000년도 발간한 「경기여성통계」 수정 · 보완

- 성별 분리통계 구축을 통한 여성정책수립 기반구축
- Ⅰ, Ⅱ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 추진
  - Ⅰ단계 (2003년) :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생산
  - Ⅱ단계 (2004년) : 경기여성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 경기여성통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성인지적 정책추진으로 여성발전 도모

3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 21세기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개발원 설립

○ 여성개발원 주요기능

- 여성정책개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 국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 국내외 여성정보 구축 및 홍보

• 교육연수 및 컨설팅

○ 추진상황

• 타 시·도 및 유사기관 실태조사

• 정책토론회를 통한 경기여성개발원설립에 따른 각계 의견수렴

•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용역

##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도자 양성

1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 현 황

o 광역의회 참여 :경기도 104명 (여성8명, 7.6%) -전국682명중(여성63명, 9.2%)

o 기초의회 참여 : 경기도 500명 ( 여성 17명, 3.4%) -전국3,485명중(여성77명, 2.2%)

• 수원2명, 성남4명, 용인3명, 평택1명, 광명1명, 하남1명, 과천1명, 고양4명

○ 여성정치 지도자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유도

o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98년) : 6주(주1회, 4시간), 20~40대 여성 38명 양성

o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work-shop('00년) : 1박 2일, 도 여성의원, 도 여성단체장, 도 여성부서과장 등 120명 참여

o 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운영 지원 ('00~'01년) : 여성이 만드는 삶의 정치

• 여성후보자 발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120명 참석

• 여성지도자 육성 기초교육 105명 참여

• 여성지도자 육성 심화교육 50명 참여

o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work-shop 운영지원('01년) : 120명 참여

o 여성 선거 자원봉사자 교육 양성지원

o 여성시민의식 교육 순회실시('01년)

o 여성정치 후보자 한마당 행사지원('02년)

o 일본 가나가와 네트웍 운동(여성의 정치참여) 및 현장체험 연수지원('02년) : 7박 8일, 16명

o 여성정치 지도자 육성전문교육('03년) : 1년과정 , 40명

2 여성의 공직참여확대

○ 경기도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

o 4급 5.9%, 5급 4.2%, 6급 12.2%, 7급 26.3%, 8급 47.7%, 9급 59.5%

○ 확대추진계획

o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시행

o 관리직 (5급이상) 여성공무원 육성지원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 2003년 7.6%, 2006년 10%, 2010년 20% 2020년 35%

• 과장급이상 고위직에 여성공무원 확대

- 여성 읍·면 동장 확대 및 시·군 1과장이상 확보

o 경쟁력 있는 여성공무원 육성

• 여성관리자 직무능력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 여성간부양성반 : 3개월 과정 40명

- 스피치 및 회의진행기법 훈련

• 다양한 국제훈련프로그램에 여성공무원 참여확대

o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 인사·기획·예산·감사 등 핵심보직분야에 적극배치

- 1과 1여성배치 도 62개 과 중 51개 과 배치 (경기도)

• 희망 보직제, 연고지 배치 적극추진

• 7급 공무원 도 전입시 결원의 50% 여성공무원 전입

o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여건 조성

• 출산휴가 90일, 3세미만 자녀 육아휴직 1년 이내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확보

※ 출산·육아휴직실시 현황 : 2002년 육아 9명, 출산 18명
2001년 육아 8명, 출산 22명

· 대체인력 18명, 소요예산 27,000천원 (경기도)

o 양성 평등 한 공직문화조성

•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1박 2일 인사부서, 여성부서의 근무여성공무원 (경기도)

•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5일) : 공무원 교육원 (경기도)

•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성인지력 통계 작성

- 각종 임용 상황 등에 대한 남녀 구분 통계 작성

○ 도 출연기관 여성취업할당제 실시

o 설립자본금 중 50%이상 도 출연 18개 기관

o 목표율 : 전체 임직원 중 여성 30%이상

o 관리 : 일반관리(7개 기관) : 현행 여성비율 30%이상

- 현 수준 유지

중점관리(11개 기관) : 여성임직원비율 30%미만

- 30%가 될 때까지 신규채용시 채용 예정 인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용

3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실적(2002. 6월말 현재) : 道 35.1%, 市·郡 평균 25.2%

○ 위원결원이나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30%이상 위촉

○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여성주의적 의식제고를 위하여 여성위원 Work-shop 개최

o 여성위원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성인지적 정책수행 능력 제고

4 여성지도자 육성

○ 경기여성 지도자과정 운영

o 기 간 : '03. 3~12월(주 1회, 1일 3시간)

o 인 원 : 215명(2개대학)

o 내 용 : 정치, 경제 등 리더쉽 훈련

○ 농촌여성 경영기술대학운영

o 기 간 : '03. 3~12월(주 1회, 1일 3시간)

o 인 원 : 100명(과수, 원예, 낙농분야)

o 내 용 : 과수, 원예, 낙농분야 기술 및 경영 등 전문교육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o 기 간 : '03. 7~8월(1박 2일)

o 인 원 : 180명(3개 대학)

o 내 용 : 여성의 사회참여 제약요인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시각 제고 및 리더쉽 향상

○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 운영

o 스웨덴 · 미국의 스터디 서클 및 일본의 자주 학습조직에 대한 제도를 여성회관 등 여성사회 교육기관에 도입

o 학습단계별 프로그램 교육

| 2001년 기초단계 | → | 2002년 심화단계 | → | 2003년 자율단계 |
|---|---|---|---|---|
| 학습동아리 개념 | | 학습동아리 회원 및 리더 | | 자율학습 및 기초 · 심화단계 불참자 대상교육 |

• 사업기간 : '03. 4~'03. 11월

• 교육내용 : 3천명(도, 시 · 군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생)

• 교육내용

- 학습동아리의 목적 및 취지 필요성에 대한 이론교육
- 개별학습의 어려움 해결방법, 심화학습요령,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방법교육
- 리더 역할과 지도력배양 및 리더에게 요구되는 대화의 기술습득

## 3. 양성평등 촉진

1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영역에서 남녀 평등 이념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도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남녀 차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 조사·발굴 정비

o 조사기준 : 명백한 차별, 기회의 차별, 결과의 차별, 왜곡된 여성관 등

o 조사대상 : 347건(조례 212, 규칙 135)

2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제고

○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의 저변확대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o 공모 주제 : 양성평등

o 초·중·고등학생 대상 : 표어 및 포스터 공모

o 대학생 대상 :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공모

o 교육청 및 도내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시행

3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정책을 입안·수행하는 도·시군 주요부서 관리직 공무원 및 여성부서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향상교육

o 기 간 : 1박 2일

o 인 원 : 3회, 220명

- 도, 시·군 인사부서 및 여성 읍·면·동장 70명
- 여성부서의 6급 여성공무원 70명
- 여성부서의 7급 여성공무원 80명

4 여성주간 운영

○ 여성주간 기념행사

o 남녀 평등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

o 평등, 봉사, 훌륭한 어머니, 예능, 신지식 등 경기도 여성상 시상

## 4. 여성단체 및 활동지원

1 여성자원활동 지원

○ 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 수급연계 및 인력 DB구축

○ 분야별 여성자원활동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30개소센터 1,914명

2 여성단체 활동 지원

○ 여성단체 역할정립 및 특색사업 발굴과 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o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 평소 연마한 숨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

※ 경진부문 : 8개 부문(시,수필,사진,회화,서예,사군자,꽃꽂이,컴퓨터)

- 부문별 입상자의 작품집을 제작·발간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동기 부여

o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단체장 선발·시상 및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모색
- 경기여성 한마당을 통하여 회원격려 및 결속력 강화

3 여성발전기금 지원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기금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여성단체, 도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원

o 기금 조성액 : 100억원

o 기금지원 규모 : 7억원

o 부문별 지원규모

- 일반공모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사업등 200백만원
- 기획공모사업 : 6개분야 280백만원

- 여성경제활동 100백만원
- 영역별여성지도자 육성 60
- 양성평등의식향상 30
- 여성인권증진사업 30
- 건강한가정지키기 30
- 여성인물재조명 30

• 자체사업 : 10개분야 253백만원

## 5.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1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여성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여성 적극 보호

○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 1366」 운영지원 : 145백만원

• 운영단체 : 안양 전진상복지관

•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 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23개소 1,048백만원

• 도내 성폭력상담소 25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5개소

• 향후 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운영 적극 권장

○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타 운영지원 : 1개소 101백만원

○ 성 · 가정폭력상담원 상담기법 향상을 위한교육 : 80명(1박 2일)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활동가 양성교육 : 50명(100시간)

2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 4개소

o 긴급피난, 종합상담,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 278백만원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권역별 1개소씩 설치

: 현재 4개소 → 2006년 9개소

o 장애여성 폭력피해자 전용보호시설 설치 방안 마련

○ 선도보호시설(가출소녀) 운영지원 : 1개소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 1개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성교육비 지원 : 44백만원

○ 「딸들의 캠프」 운영비 지원 : 158백만원

## 6.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개발 및 지원

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 운영지역 : 7개소(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시흥)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내실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참여기반 구축

o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문직업훈련기관 기능 역량강화

• 전문직업상담사 고정배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 알선

o 여성인력개발센터 공동네트워크 구축

• 여성직업훈련기관 관계자의 워크샵으로 프로그램개발능력 향상 및 공동네트워크장의 마련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전문기관 능력제고

o 경쟁력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강화

• 연간 개소당 운영비 지원 : 2002년 97,850천원 ⇒ 2003년 146,780천원

2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 운영지역 : 4개소 (부천, 안산, 의정부, 고양)

○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알선을 체계적 지원하여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지원

o 여성근로자 전문상담 및 교육 : 직업상담사 지원

o 운영비 상향지원으로 효율적인 교육기반 마련

: 2002년 50,000천원 ⇒ 2003년 60,000천원

o 고용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

○ HRD 종합계획의 연구완료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발전위원회 인력개발분과 35명 구성운영

o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경기전략산업부 문의

o 여성인력 양성 등 5개 정책분야 52개 정책과제

○ 경기 Vision 2020 및 경기여성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수립

4 IT/CT 전문인력 양성

○ 창조화 사회에 주역이 될 프로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기 간 : 과정별 2-8개월

○ 시 간 : 주 5일, 1일 3시간(오전 09:30 - 12:30 오후 14:00 - 17:00)

○ 대 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여성

○ 교육과정

o 장기교육 : 220명 (10개과정 11개반)

• 웹스페셜리스트, 디지털광고입문, e-biz프로그래밍, 모바일디자인 자바디프로그래머, 프로젝트개발(1-2), 플레쉬스크립트, 디렉터편집 게임컨텐츠개발, 서버구축 과정

o 단기교육 : 220명 (9개과정 11개반)

• 디자인기반(오전, 오후), 프로그래밍기반(오전, 오후), C언어 프리젠테이션, MFD국제인증, 정보처리기사, 3D MAX, AUTO CAD2000, 드림위버MX · ASP

○ 년도별 취업률 : '97~'98년 77%, '99년 71%, '00년 48%, '01년 72%, '02년 53%

5 여성비즈니스 종합지원 기반구축

○ 창업단계별로 특화된 원스톱 창업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 여성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로의 기반 구축

o 창업지원실 확대운영 : 12실 → 20실

o 지원서비스 : 경영지원컨설팅, 창업박람회 및 경진대회참가지원 경영정보메일링서비스, 보육담임제, 창업지원실 시설 및 장비

○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o 여성CEO연찬회, 정기간담회, 비즈카페(입주기업공동사이트)운영 홍보지원 등

○ 여성창업 및 비즈니스 교육

o 교육과정 : 여성창업전문교육, 문화컨텐츠, 비즈니스교육, 경영실무교육, 마케팅전략교육, 여성CEO리더쉽 등

○ 추진실적 (99~2002)

o 여성기업 31개 양성

• '99년 6개사, 00년 6개사, 01년 10개사, 02년 7개사

o 여성고용인력 창출 214명

• '99년 29명, 2000년 103명, 2001년 43명, 2002년 39명

o 매출실적 17억 6천만원

• '99년 5억 2천만원, 2000년 3억원, 2001년 3억 6천만원, 2002년 5억 8천만원

o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경진대회 3회 연속 참가 및 수상

• 2000년 경기지역 우수상 획득(아뜰리에, 퓨전테크)

• 2001년 중앙본선 장려상 획득(애니스)

• 2002년 중앙본선 우수상 수상(캘러리오체)

6 직업 및 기술교육

○ 교육훈련기간 : 5개월 과정(연2회 운영)

○ 창업 · 취업 교육과정 : 6개과정 300명

o 옷수선세탁, 반찬전문점, 홈패션커텐창업, 독서글쓰기지도 등

○ 자격증 취득과정 : 4개과정 630명

※ 조리사과정은 4개월 과정 3회 운영

• 한식 · 양식 · 중식조리사, 미용사 등

○ 수공예 및 생활기술교육 : 15개 과정 1,280명

o 전통한지공예 · 생활도예, 홈패션, 퀼트, 현대의상, 제과제빵, 가정헤어 등

7 여성의 정서함양 교육

○ 교육훈련기간 : 5개월 과정(연2회 운영)

○ 정보화 · 외국어교육 : 16개과정 980명

o 컴퓨터 기초,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 능력반, 일본어, 중국어 회화 등

○ 문화 취미 및 자녀지도교육 : 14개과정 1,110명

o 서양화, 한국화, 서예, 한국무용, 전통예절다도, 노래교실, 초등학교영어지도 등

○ 교양 및 특별교육 : 7개과정 850명(1회 운영)

o 자원봉사 의식교육, 환경의식교육, 여성지도력 향상교육, 한글교실(10개월) 직업설계 및 창업준비 교육 등

8 교육이수 학점은행제 및 인증제 도입 · 운영

○ 열린 교육,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게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도입 · 시행

o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은행제 운영 신청(2002. 12월)

o 대상과목 및 교육인원 : 8과목 400명(5개월과정 연2회운영)

• PC활용, 인터넷이해,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 실용영어회화,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o 학점은행제 시행여부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여성회관 현지실사 (2003. 1월중)

• 교육이수자에 대한 학점은행제 시행(2003. 3월)

○ 일정기간 출석 및 소정의 평가를 거쳐 일정수준의 자격이 도달한자에게 교육수료 인증서를 수여하여 여성사회교육 전문가로 양성

o 인증과목 : 독서글쓰기 지도, 컴퓨터지도, 사회교육강사 양성과정 등

## Ⅲ. 향후과제

○ 경기도는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높

여 나갈 것임

○ 이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의 제약요인인 성편견 및 성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남녀평등의식 확산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도내 여성교육기관 기능 전환 및 강화를 하고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임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부분은 NGO의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취약한 분야는 활동가를 길러내는 한편 NGO가 접근하여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 나갈 것임

○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는 도, 시·군의 조직과 인력, 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나 조직, 인사, 예산부서 및 기관장들의 인식부족으로 개선이 안되어 커다란 과제이나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NGO와의 네트워 구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임

기조발제 3

#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 영 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 영 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 Ⅰ.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참여확대는 우리사회 민주화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지표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여성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얼마 전 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경제 성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 · 기술 · 노동 기여도 중 노동, 특히 여성노동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고급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이야말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법 ·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여성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후진적인 상황이다. 흔히 인용되는 UNDP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척도는 세계 64개 국가 중 61위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 · 정책결정, 경제분야의 여성참여와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여성지방의원의 비율, IMF 이후 여성고용상황의 악화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지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 들어 국정과제의 하나로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이 강조되고 여성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 단체들이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여성정책의 범위와 폭도 광범위해지고, 정책의 대상도 요보호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문제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핵심문제로 다루어지고, 여성의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주류화, 성인지적 정책분석, 예산 수립, 평가 등도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여성정책의 방향과 여건

1. 여성정책주류화와 여성권익보장을 통한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ㅇ양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정책의 수립, 집행 중요
   - ㅇ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지도자 양성 및 참여확대 필요
2.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
   - ㅇ맞벌이 부부의 보육욕구 충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 ㅇ여성의 취업기회 및 훈련기회의 부족
3.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및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문제 적극 대응
   - ㅇ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
   - ㅇ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및 호주제로 인한 성차별적 가족문제 대응

### □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성인지적 정책 추진

< 정치·행정분야 여성참여율 제고 >

ㅇ충청북도 여성정책협의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여성참여율 목표 확대 : 30% ⇒ 40% (2007년)

ㅇ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 10% (2007년)

ㅇ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충북여성 아카데미」 등 여성지도자 양성 리더십 훈련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여대생 캠프 개최

ㅇ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지원

바른 정치문화정착 및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추진

ㅇ「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교육, 문화프로그램 수행

< 성인지적 정책평가 및 예산수립 추진 >

ㅇ정책목표 설정에 성별 영향 고려 및 평가 추진

정책과 예산의 성별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재원을 성평등과 인간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배분

ㅇ성별 분리통계 구축 및 성인지적 예산분석 단계적 실시

예산분석 도구 및 지침 개발

부서별로 시범사업 선정 분석

ㅇ정책담당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수립추진

< 폭력피해여성 보호 >

ㅇ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각종 지원 종합대책 마련

여성폭력 상담소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긴급피난처 확대운영

유사 상담관련기관 통합운영 ⇒ 상담의 one-stop 서비스 강화

폭력 피해여성 자활 직업교육훈련 및 법률 지원

ㅇ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폭력피해 및 여성복지시설 확충과 피해자 치료 보호

ㅇ성매매방지 관련법제정 추진에 따른 피해여성 권익침해 구제 및 지원

상담소 및 성매매방지 특별기구 설치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ㅇ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활성화

연중 24시간 보호망 완비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

ㅇ호주제 폐지를 위한 홍보 및 대안마련

ㅇ다양한 가족변화에 부응하는 가족지원정책 수립

한 부모 가족, 이혼·재혼가족 상담 및 평등가족문화 인식 제고

가족실태 조사 및 성인지적 가족지표 수립

ㅇ저출산, 가족해체 방지정책 수립

관련 전문가로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3. 보육의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 및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체계 구축 >

ㅇ보육재정 확충 및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현 360억원 → 1,400억원

균등지원 체계 →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ㅇ「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체계적인 보육정보시스템 구축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

ㅇ보육시설평가 인증제 도입 및 「충청북도 보육위원회」 구성 운영

학부모 및 보육관계자의 의견 적극수렴, 정책반영

ㅇ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시설 활성화

영아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등

ㅇ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 >

ㅇ여성 취업알선 및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여성유망직종 창업, 여고생진로탐색 설명회 개최

ㅇ여성의 직업훈련교육 확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스템 통합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추가 설립 추진 : 1개소(북부지역)

ㅇ창업자금 지원기준 개선

창업자금지원시 이자율과 보증, 담보제공 등 절차·기준 완화

Ⅱ.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특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여성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의 지역 여성정책현실과 방향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동소이할 것이나, 충청북도에서 여성참여확대에 기초한 효율적 여성정책수립을 위해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 □ 충북여성정책협의회

1.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충북여성발전계획 추진위원회 위원 : 14명) 참여하여 2001년 10월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3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은 5개분야 35과제 94개항목으로
   ㅇ정치행정분야의 여성주류화 정책 : 6개과제 15개항목
   ㅇ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평등고용 정책 : 5개과제 15개항목
   ㅇ여성의 교육·문화·자원활동 향상을 위한 정책 : 11개과제 23개항목
   ㅇ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 6개과제 21개항목
   ㅇ여성의 복지증진 정책 : 7개과제 20개항목이다.

2.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관련실과와의 원활한 협조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 16명(위원장:행정부지사)으로 『충청북도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의 평가·분석·보완 등의 사항을 협의·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 12월 『충청북도 여성정책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여성계 전문가 6명을 추가 영입, 22명으로 확대 구성·운영함으로써 관련실과 및 민·관의 협조체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충북여성포럼

1. 충북여성포럼은 충북지역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명 (운영위원 20명)의 회원들이 4개 분과(정치, 사회경제, 교육문화, 인권·복지)로 나뉘어 여성정책 및 도정에 관한 제안과 자문, 여성계의 유대증진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여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사업 추진상황

ㅇ충북여성의식조사결과발표 : '99. 7. 5

ㅇ여성경제인 육성과 창업지원 정책 토론회 : '99.10.26

ㅇ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00. 6. 8

ㅇ여성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00. 10.10

ㅇ지역여성운동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 '00.12.4

ㅇ일본 야마나시현 여성계와의 상호교류 : '01.9.26, '02.9.30

ㅇ6·13지방선거대비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01.11.14

⇒ 도의원 각당 비례대표 모두 여성으로 결정됨

ㅇ충북여성미술제 : '02.7.5~7.31

ㅇ제16대 대선후보 여성정책관련 비교평가 토론회 : '02.11.27

ㅇ충북여성포럼 소식지 발간 : 년2회/1,000부

ㅇ여성의 관점에서 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 : '03.5.2

## □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

1. 충청북도 여성취업지원협의회는 도내의 유관기관,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실업 및 취업, 직업훈련 대책을 여성취업 관련기관·단체간 상호 정보교환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 참여기관 >

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 경제과, 여성회관),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청주·충주 상공회의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청주지부, 청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여성민우회 실업극복 여성지원센터, 충북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2. 주요 활동상황

ㅇ협의회 개최 : 분기별

- 인터넷을 통한 여성취업 정보의 공유 및 교류 추진 강화
- 여성취업 관련 행사의 공동추진 및 상호지원
- 기타 여성취업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ㅇ여성취업 정보 제공

-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 여고생 진로탐색 설명회
- 여성취업 유망직종 작품 전시회
- 인터넷을 통해 여성취업정보 제공

ㅇ여성취업 강좌 실시

-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
- 여성취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 충북여성상담협의회

1. 충북여성상담협의회는 도내 여성폭력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분야별로 피해여성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구성되었다.

< 참여기관 >

1366,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경찰청, 청주의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5개 기관

2. 주요사업

ㅇ'여성상담'소식지 발간

ㅇ'여성을 위한 변호사모임' 구성

ㅇ성폭력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

ㅇ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및 행사 개최

ㅇ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ㅇ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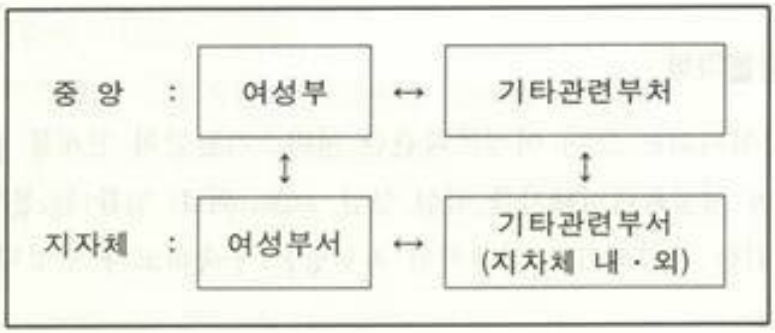
ㅇ시군상담도우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 가정 · 성폭력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역량 강화

Ⅲ.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상과 같은 지역여성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부처 간 협조체계의 강화 및 중앙과 지역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여성정책 주류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도입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정착과 함께 이 기구들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내 관련 지방청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부서별 업무평가에 여성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가 분권과 균형발전일 만큼 현재중앙과 지방과의 불균형,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의 균형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지역 간 · 집단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논리상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책의 주 수혜대상을 지역의 여성들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주로 국가보조사업 추진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지역여성정책이 지역여성인력의 양성이나 지역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시되고 있는 가족문제의 해결과 민주적 가족정책 수립을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성인지적 지역가족정책추진 조직체계를 확보하

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가족관련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부 토론

**박 영 미** (부산여상단체연합 대표)

**박 재 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정책개발팀장)

**이 갑 숙**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이 경 숙** (경상북도 칠곡군청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

박 영 미 (부산여상단체연합 대표)

# 전북도민의 여성정책평가 및 욕구조사

박 재 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정책개발팀장)

## 1. 조사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한국사회가 경험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이전의 변화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붕괴와 함께 민주화 조치가 사회 전역에 걸쳐 추진되면서 권위주의적 사회질서를 대신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와 함께 추진된 여성보호 관련 제도의 입법화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박재규, 2002).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기존의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여성부)의 노력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잘 나타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물론 여성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영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책내용 모두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이 과연 지역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어느 정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즉 전라북도 역시 민선 2기(1998-2002) 동안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이 지역 특수성

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고, 지역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작업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전문기관(예를 들면,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여성정책결과를 평가한바 있다. 전라북도 또한 민선3기(2002-2006)의 여성정책 방향을 정립할 목적에서 민선2기(1998-2002) 동안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에 평가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으로 평가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민선2기 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여성단체연합(1998, 2002)을 비롯한 일부 여성단체들이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민선2기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를 포함시켜 평가한바 있다(2002). 특히 후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평가작업은 평가작업을 위한 분석틀의 한계와 자료접근의 제약,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비교에 따른 자료구성의 제약 등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비교하려는 목적에 따라 양적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적 차원의 내용이 평가작업에서 도외시되는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1)]

본 조사연구는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연구는 1) 전라북도가 1998-200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 내용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지 및 주관적 만족 수준을 평가하며, 2) 전북도민의 여성정책 요구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3) 전북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좀더 효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민선3기의 전라북도 성인지적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 연구』는 양적 및 질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의 제1부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관점을 통해 여성정책을 평가하였고, 제2부에서는 전북도민의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 2. 조사의 내용과 분석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전달지침이나 혹은 정책사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성발전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의식전환과 여성차별 및 여성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사회질서 확립되면서 한국정부도 여성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율적인 여성정책을 강조하면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계획수립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실천과제 및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마련된 경우에도 실천보다 홍보나 전시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라북도의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1997) 또한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전라북도는 전북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전북도정에의 공동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세부정책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7년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라북도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에 비해 선구자적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섰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이다.[2] 그러나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은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만 언급하였을 뿐 전북여성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는 전라북도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은 여성발전을 위한 실천적 목적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업적(?) 및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외형적 차원에 머물러 결국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성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2)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199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하게 될 여성관련 전담기구인 행정부지사직속 여성정책담당관실(4명)을 설치하였고,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10명)을 정책연구와 조사업무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8개 군(제4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크기를 달리 하였다. 제1지역으로 규정한 전주에서 260명, 제2지역인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120명, 제3지역인 정읍, 김제, 남원에서 각각 100명, 그리고 8개 군 지역에서 각각 70명을 할당하여 전체 표본크기는 1,360명이었다.

전체 표본의 성별 비율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75 : 25 정도로 설정하였다.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전라북도의 민선2기(특히 1999-2001) 여성정책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여성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지만, 여성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남녀의 이해와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또한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성 표본의 크기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의적으로 조정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표본의 연령과 직업 변수 또한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 나. 조사수집 및 분석

본 조사에 앞서 전라북도내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고, 사전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전라북도 여성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지를 보완·수정하여 완성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모집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5일에 걸쳐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면접지침에 따라 응답자와의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수집은 표본설계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졌지만, 수집된 질문지 가운데 편집과 코딩과정에서 자료가치를 상실한 40여부의 질문지를 제외하시켰다. 본 조사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1,335부의 질문지는 코딩을 통해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4. 전라북도 여성정책 영역별 평가 : 정책인지와 만족도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3)]

- 생 략 -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 보고서 제2부를 참조.

나.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 인식 분석

### 1) 여성정책의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분석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북도민 대부분은 여성정책이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응답자 사이에도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성정책이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37.2%와 36.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73.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가운데 여성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여성이 42.2%로 남성의 23.8%에 비해 약 20% 많았지만, '중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 정도 많았다. 양자를 합하여도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보다 여성정책을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남성이 26.7%로서 여성의 21.5%보다 약간 많았다.

다른 한편, 여성정책이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단지 3.7%밖에 되지 않았고, 남녀응답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즉 여성정책이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남녀응답자는 각각 3.0%와 2.6%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남녀응답자 또한 각각 1.4%와 0.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전북도민의 다수는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여성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후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건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여성정책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정책이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및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균형발전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및 분배정책보다 양적인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가부장제적 유교문화 및 권위주의 사회질서를 이용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강화시켰다. 이런 상황은 결국 여성정책에 대한 소외를 지속시킨 반면 남녀차별을 제도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도민의 관심, 그리고 법적·정책적 지원이 각각 21.6%에서 24.8% 사이에서 비슷하게 지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도민의 관심, 그리고 여성정책의 제도화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데 전북도민은 이런 관련성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남녀 응답자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 제도마련, 그리고 도민의 관심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조건에는 여성정책 추진기구 및 담당자의 능력과 의식이 각각 14.5%와 10.6%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전라북도민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3%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지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비록 한국사회가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될 수도 있다. 더욱이 여성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지사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도지사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3) 전북지역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중요성 분석

전북지역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라북도의 역할만큼이나 여성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의 여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80% 정도가 여성단체의 역할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지역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여성 응답자는 42.4%로서 남성 응답자의 33.2%보다 10% 이상 많았다. 반면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남성이 41.9%로서 여성의 38.9%보다 약간 많았다. 그리고 지역여성문

제 해결에 여성단체의 역할이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7.2%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서 남성 응답자가 21.5%로서 여성 응답자의 15.4%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9%로 매우 적었고, 남녀 응답자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 4) 전북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중점사업 분석

끝으로 전북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중점적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에 근접하는 45.1%가 여성단체의 중점 사업으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의식개선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는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역할 수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평가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지역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여성차별 의식개선과 같은 홍보활동 사업이다.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는 여성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이 제도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성차별 의식개선에 대한 강조는 당연하고 시급하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여성 차별적인 제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어 '남성들에게 부여된 공식적 권리가 여성들에게도 거부되지 않고 있다'(박재규,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개선이 '권리의 수사학'에 그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Smart, 1985), 그 이유는 바로 의식전환이 뒤따르지 못해 아직도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중점 사업으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의식개선활동이 지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중점 사업으로 여성차별 극복을 위한 의식개선활동을 지적한 응답자 중에서 여성 응답자가 약 2% 가량 많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9.3%와 17.4%가 여성단체의 중점사업으로 '여성들을 위한 문화교양 활동 강화'와 '정부의 여성정책 실천과정에 대한 감시와 개선요구'를 지적하였다. 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의식개선활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을 위한 문화교양 활동강화는 결국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성에게 부연된 지위와 역할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적이며 억압적인가를

인식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김현희, 2001; Park, 1991). 반면에 후자는 여성차별에 관한 제도의 개선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그 실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는 기존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과 함께 제도와 현실간의 모순과 부조화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8.8%는 여성정치인 양성 활동을, 8.3%는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를 각각 여성단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남녀 응답자 사이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 다. 여성정책 영역별 정책인지 및 만족도 평가

#### 1) 행정 · 정치영역의 여성정책 인지 및 만족도 평가

전라북도가 추진한 행정 · 정치영역의 구체적인 여성정책 내용에 관해 응답자의 30-40%만이 알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여성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 응답자가 약간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정책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여성정책 사업을 긍정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들 가운데 약 45-50%는 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에 약 30%는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 2) 교육 · 세계화영역의 여성정책 인지 및 만족도 평가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는 전라북도의 교육 · 세계화영역의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알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0% 정도는 모르고 있었다. 행정 · 정치영역 평가와 비슷하게 여성정책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약 90% 정도로 많았다. 이들 가운데 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0-60%로 중립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30-50%보다 약간 많았다.

#### 3) 가족 · 문화영역의 여성정책 인지 및 만족도 평가

문화영역 중심의 여성정책 평가에서 응답자의 30%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70%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사업효과성 평가에 의하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 약 10-3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25-40%로 낮았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약 45%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의 응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 4) 경제 · 농업영역의 여성정책 인지 및 만족도 평가

경제영역의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50%로 높았지만, 농업 관련 여성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런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응답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 반면, 후자의 경우 특정 도민에 한정된 사업인 까닭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내용 평가에서는 경제영역과 농업영역의 구체적 사업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사업을 효과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 5) 인권 · 보건복지영역의 여성정책 인지 및 만족도 평가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영역별 인지와 만족도 평가에서 전북도민은 인권 및 보건복지영역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응답자의 40-45% 정도가 사업을 알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85-90% 정도가 사업효과를 긍정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북도민의 여성정책 영역별 인식 및 평가결과 비교

| 여성정책영역<br>평가영역 | 정치 및<br>행정 | 교육 및<br>세계화 | 가족 및<br>문화 | 경제 및<br>문화 | 인권 및<br>보건복지 |
|---|---|---|---|---|---|
| 정책인식 비율 | 30-40% | 30% | 30% | 20-50% | 40-45% |
| 긍정적 평가 비율 | 40-50% | 40-60% | 10-30% | 35-40% | 40-45% |
| 중립적 평가 비율 | 30% | 30-50% | 45% | 45% | 45% |
| 부정적 평가 비율 | 20-30% | 10% | 25-40% | 10%-15% | 10-15% |

## 5. 전북도민의 여성정책 욕구분석

### 가. 전북도민의 여성정책 영역별 요구분석

#### 1) 행정 · 정치영역의 여성정책 요구분석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 필요성 분석에 의하면, 응답자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주요 이유로는 업무수행과정 및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성차별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차별 의식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 강화, 가사노동 가치 인정,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고취, 그리고 호주제 폐지와 같은 성차별적 조례개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의식개혁과 함께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변화 및 여성정치인의 육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2) 교육 · 세계화영역의 여성정책 요구분석

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의 개정과 교육 및 교육행정가의 양성평등의식 강화가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되었고, 여기에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확대 및 정치인과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강화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평생교육 내용의 홍보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여성지도자 양성방안으로는 교육과정의 확대 개설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고, 여기에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과 학교교육과정에서 여학생의 정치적 지도력 양성교육이 제시되었다.

#### 3) 가족 · 문화영역의 여성정책 욕구분석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부장제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비롯하여 여성의 경제권 증대와 가사노동의 남녀 공동부담이 강조되었고,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증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안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상담교육 강화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가 제시되었다.

### 4) 경제 · 농업영역의 여성정책 요구분석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고, 다음으로 여성의 창업지원 및 여성기업인 지원과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 우대조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농업인 권익신장과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개선과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강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여성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이 제시되었다.

### 5) 인권 · 보건복지영역의 여성정책 요구분석

우리사회에서 여성 소외계층 범주가 매우 다양한데, 그것은 바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 소외계층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노인, 장애인 및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이들의 취업과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강조되었다.

〈표 3〉 전북도민의 여성정책 영역별 요구조사 결과 요약

| 정책 영역 | 정책 내용 | 평가 결과 | | | |
|---|---|---|---|---|---|
| | | 항 목 | 남성 | 여성 | 합계 |
| 정치, 행정 | 여성차별의식 개선 방안 | 학교에서 양성평등의식 교육강화 | 34.2 | 28.2 | 29.3 |
| | |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실질적 평가 | 20.8 | 25.4 | 24.1 |
| | |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고취 | 30.3 | 20.6 | 23.3 |
| | | 호주제 폐지 등 여성차별적 조례개정 | 12.3 | 25.2 | 21.6 |
|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자신의 의식개혁 | 44.5 | 39.3 | 40.7 |
| | |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 22.1 | 21.2 | 21.4 |
| | | 여성정치인 육성 | 15.0 | 18.3 | 17.4 |
| 교육, 세계화 | 교육에서 평등의식 강화• | 성차별적인 교육내용의 개정 | 28.7 | 35.6 | 33.9 |
| | |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평등의식 교육강화 | 31.1 | 33.5 | 32.9 |
| | | 공무원, 정치가의 양성평등의식 교육강화 | 15.6 | 16.4 | 16.2 |
| | 여성지도자 양성방안 |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개설 | 42.6 | 45.5 | 44.7 |
| | | 여성단체 임원의 지도자교육지원 | 22.7 | 23.9 | 23.6 |
| | | 학교교육에서 여학생의 정치지도력 교육강화 | 19.1 | 17.0 | 17.6 |

(계 속)

| 정책 영역 | 정책 내용 | 평가 결과 | | | |
|---|---|---|---|---|---|
| | | 항 목 | 남성 | 여성 | 합계 |
| 가족, 문화 | 화목한 가정생활 | 가부장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 | 34.4 | 30.9 | 31.8 |
| | | 여성의 경제권 강화(재산권, 취업) | 29.8 | 27.7 | 28.2 |
| | | 가사노동의 남녀공동부담 | 24.0 | 24.8 | 24.6 |
| |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 |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증가 | 42.1 | 36.0 | 37.7 |
| |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정책의 활성화 | 24.3 | 28.3 | 27.2 |
| | | 파트타임 등 노동형태의 다양화 | 18.6 | 18.8 | 18.7 |
| | | 보육비의 지원 | 14.2 | 16.1 | 15.6 |
| 경제, 농업 | 여성취업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확대 | 29.3 | 27.6 | 28.0 |
| | | 여성의 창업지원 및 여성기업인 지원 | 19.2 | 20.7 | 20.3 |
| | | 여성재고용 활성화 및 장려금 지급확대 | 14.2 | 17.1 | 16.3 |
| | | 공기업의 여성고용 우대조치 강화 | 13.2 | 16.2 | 15.4 |
| | 농촌여성 권익신장 | 생활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 33.6 | 29.8 | 30.9 |
| |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프로그램 개발 | 28.4 | 26.3 | 26.9 |
| | |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지원강화 | 18.9 | 19.0 | 19.0 |
| 인권, 복지 | 소외계층 지원 우선순위 | 저소득 모자가정 | 43.4 | 33.0 | 35.9 |
| | | 여성노인 | 16.9 | 25.0 | 22.8 |
| | | 장애인 여성 | 13.1 | 13.1 | 13.1 |
| | 소외계층 복지증진 방안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43.4 | 46.9 | 46.0 |
| | | 취업과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 27.0 | 27.0 | 27.0 |
| | | 소외계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 17.2 | 15.6 | 16.0 |

• 남성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남녀공학 확대(22.4%)

### 나. 전북도민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요구분석

위에서 분석한 여성정책 영역별 전북도민의 요구분석은 전라북도가 향후 추진할 각 영역의 여성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혹은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향후 다양한 여성정책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을 우선 혹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전라북도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결정할 일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발견한 전북도민의 요구분석 결과는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표 4>는 전북지역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가운데 전라북도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북도민의 평가를 분석한 것이다. 전북도민의 종합적인 요구평가는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에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 내용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환원시킨 결과이다.

우선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0.4%가 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완화를 위한 가정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을 지지하였다. 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전북도민들 가운데 여성이 21.0%로 남성의 18.3%보다 약간 많았다.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완화와 관련된 여성정책 내용들 또한 도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즉 응답자의 16.2%와 13.8%는 여성의 사회 및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여성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및 감독활동 강화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전북도민들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은 정책내용은 여성차별적 법이나 제도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보장정책이 12.9%,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재편하는 여성정책이 12.2%, 그리고 여성의 발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여성정책이 11.6%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민의 평가에 기초할 때 전라북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은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완화, 여성의 사회 및 문화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고용안정보장정책, 여성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개혁 및 여성의 대표성 보장,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재편, 그리고 여성의 발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체계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몇 가지 여성정책은 소수의 응답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지적되었다. 즉 응답자의 6.1%는 구체적인 여성정책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책을, 4.8%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를, 그리고 2.1%는 사회변화에 따른 남녀역할구조 재편정책을 각각 지지하였다. 비록 이들 여성정책내용이 극히 일부에 의해서 지지된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폐기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지 받지 못한 여성정책이 내일 지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표 4〉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 여성정책 내용 \ 성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
| 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가정복지서비스를 확대정책 | 18.3 | 21.0 | 20.3 |
| 여성의 사회활동과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지원강화 정책 | 16.0 | 16.3 | 16.2 |
| 여성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정부의 지원과 감독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 15.1 | 13.2 | 13.8 |
| 여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책 | 12.7 | 13.0 | 12.9 |
| 여성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재편하는 정책 | 14.1 | 11.6 | 12.2 |
| 여성의 발전과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사회체제 구축 정책 | 11.4 | 11.7 | 11.6 |
| 구체적인 여성정책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책 | 7.2 | 5.8 | 6.1 |
|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정책 | 3.5 | 5.2 | 4.8 |
| 사회변화에 따른 남녀역할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정책 | 1.7 | 2.2 | 2.1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 6. 조사결과 함의 : 정책적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본 조사연구가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제언이나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가 민선2기 동안 추진한 여성정책에 대한 전북도민의 평가에 의하면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도민의 인지수준은 매우 낮았다. 즉 여성정책 사업내용 가운데 여성취업 알선사업 및 여성인권 및 보건복지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30% 정도만이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가운데 여성정책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북도민은 약 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효과성 분석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업결과를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정책 방향은 전북도민에게 여성정책 사업내용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일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건분석에

서 드러났듯이, 여성정책에 대한 전북도민의 이해와 협력은 중앙정부의 지원 및 법적 정책적 지원강화와 함께 여성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에 대한 여성정책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완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유교문화 하에서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 및 양육책임자로 고착되었고,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역할분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혼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후자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방해하여 여성의 삶의 질과 권익증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녀 차별적인 역할모델을 수정하여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며, 자녀양육도 남녀가 분담하는 동시에 국가사회의 책임과 재정지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육아문제를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으로부터 국가사회라는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내 사회가 책임지는 새로운 인식 및 시범사업 전개가 요구된다.

셋째,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일 부서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의식 개선 및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안이나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취업훈련 강화정책 등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은 아니다. 이들 문제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교육 담당 부서 혹은 노동담당 부서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추진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적극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 실무자 및 여성문제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이 관련 공무원들간의 연합체 구성을 통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전북도민 대부분은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이유로서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차별적인 편견을 배제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더 확고한 남녀평등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평등 교육에 여성정책 실무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관심 및 재정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지보다 중앙정부 지원을 전북도민들은 더 선호하였다. 이런 사실은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미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거시적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함을 반증한 것이다. 그럼으로 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제적 정책 혹은 자발적인 유인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여성정책 기반구축과 함께 전라북도 또한 여성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실 민선2기 동안 전라북도 여성정책 내용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낙후성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지역경제발전'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정책기조 또한 양적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전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여성정책을 소원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계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도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여성정책 관련 공약사항이 실천되고 있는가 감시하고 점검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역여성 자신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여성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전북지역 여성단체 밖에 없다. 물론 여성단체의 현실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재정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여성의

자발적인 지지와 자원봉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여성단체의 어려움 극복은 전북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전북지역 여성 하나 하나를 후원자로 간주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라북도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재인 외 『전라북도 여성정책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김현희(2001),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21세기 한국여성의 투표형태의 전환 가능성", 『경제와사회』 52(겨울호) : 227-251.

박재규(2002), 『전북지역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연구』,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전북여성단체연합(1998), 『21세기를 여는 전북여성정책 토론회』(자료집).

_____(2002), 『민선2기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자료집).

여성부(200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실적 및 시행계획』 (각년도).

전라북도(1997),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

_____(2001), 『(2000~2002) 전북 여성정책 3개년(변경)계획』.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북 여성정책과(2002), 『민선자치도정 주요성과』.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개발원·대진대학교(2002), 『경기도 여성정책개발 연구 중간보고서』.

Park, Chaekyu(1991), 'Women in the Korean Society: Transition and Change', Unpublished Paper.

Smart, C(1989), Feminism and Power of Law, New York: Routledge.

## <부록 : 민선3기 전라북도 여성정책 추진방향 및 내용 소개>

### 1. 전라북도 여성정책 개관 : 추진체계 및 인력 현황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북도 민선2기 여성정책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선구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1996년 전국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1998년 여성정책관실을 확대 개편하였고, 2001년 여성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복지과를 통합하여 여성정책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여성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2002년 1월 행자부로부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또한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1998년 중등여성교육원을 설립하여 여성정책 실천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는 여성회관을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는 전북의 여성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 그리고 성인여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여성교육원이 있다. 전라북도에서 표면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인력으로는 여성정책과 및 중등여성교육원의 23명과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21명(연구원 7명 + 여성회관 업무 14명)으로 총 44명에 이르고 있다.

### 2. 전라북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 - 07) 수립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종료되고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또한 그에 맞추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여성정책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기획(2003-07)을 수립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의 10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각 과제마다 1-9개 정도의 개별사업이 포함되어 전체 37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주체로는 여성정책과를 비롯한 12개 실과가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의 숫자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 사업번호를 의미함).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1-2),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3-4)
3.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5-13)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14-18)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19-24)
6. 환경,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25-26)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27-30)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인권보호강화(31-35)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36)
10.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37)

## 3. 전라북도 2003년 여성정책 세부내용

〈부표 1〉 2003년 여성정책 사업내용 및 여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
|---|---|---|
|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 '03년 여성통계 및 여성인명DB 구축<br>-. 여성정책위원회 개최(2회)<br>-.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36%)<br>-.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1회) |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br>2-3.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
|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 -.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교육, 양육비, 모자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등에 23억 지원계획 | 9-36. 통합적 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
| 요보호여성 발생방지 및 선도 | -. 여성1366(1), 성매매현장상담센터(1), 일본위안부생활안정지원, 요보호여성 자활교육, 홍보물제작 - 25천만원지원 | 8-31~32. 성매매 예방 및 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
|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10), 치료비 가정폭력상담, 보호시설(7), 치료비 워크샵 및 상담원 양성교육 - 58천만원 | 8-33~34. 가정,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사회복귀 |
| 여성단체 활성 및 협력강화 | -. 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단체 간담회(2회), 여성주간 전북-가고시마 여성단체 교류 - 3억 | 5-19. 여성단체 지원, 협력강화<br>6-26. 여성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및 네트웍 구축 자원봉사자 교육, 대회, 우수사례 시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등 - 26천만원 | 5-20.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계 속)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
|---|---|---|
| 양성평등사회 구현 | -. 남녀차별 법령 발굴 및 개정,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예방교육 및 상담원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역할극(초등) |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br>8-35. 성희롱예방, 구제강화<br>10-37. 평등문화 확산, 정착 지원 |
| 여성지도자 교육 | -. 도, 시군별 여성지도자 교육 - 15백만원 | 5-19. 여성단체지원, 협력 |
| 중등여성교육원운영 | -. 중고등학교과정 6학급 300명(성인여성) | 전북도의 특별 사업 |
| 여성발전연구원 운영 | -. 전북도 출연 여성연구전문기관(7명) | 전북도의 특별 사업 |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직업교육 | -. 전북도 여성회관 취업, 취미, 교양교육 (여성발전연구원 위탁, 2002. 7-05. 6)<br>-. 여성인력개발센터(전주,군산)- 25천만원 | 3-12, 13. 여성 정보화 및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br>4-15. 여성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
| 근로여성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홍보 | -. 근로여성 모성보호관련법 홍보<br>-.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적극적인 홍보<br>-. 모성보호관련 이행 우수기관 선정 시상 | 4-14.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br>4-16~18. 보육서비스 강화 |

자료: 전라북도 홈페지의 여성정책과 『2003년 주요사업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 4. 전라북도지사 당선자의 6 · 13 지방선거 여성관련 정책공약 내용

<부표 2>는 2002년 6 · 1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당선된 강현욱 후보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전북도지사 당선자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은 낙선 후보의 그것에 비해 비교적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자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북지사 당선자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은 크게 1)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2) 여성의 근무환경 개선, 3) 실질적인 모성보호, 그리고 4) 여성수련원 건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록 강현욱 당선자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이 제한적이어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달성에는 부족할지라도, 공약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어떻게 입안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사행정의 형평성 제고 및 대우 보장 공약의 경우 그 동안 여성들이 인사 및 대우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근무와 승진과정에서 남녀간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지만 좀더 나아가 여성이 받았던 차별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공격적인 실천방법이 모색되어 추진된다면 성주류화

달성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모성보호공약의 경우도 모성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실천방안이 수반된다면 성주류화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개발 교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참여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참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규, 2002). 특히 여성의 지식기반산업직종에의 진출은 미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강현욱 민선3기 도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공약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아직 계획수립단계 머물고 있어 공약 실천을 이끌어 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부표 2〉 전라북도지사 당선자의 여성관련 정책공약 내용

| 공 약 명 | 세 부 내 용 | 2003년 여성정책 반영 |
|---|---|---|
| 1)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ㅇ장래유망직종인 지식기반 산업직종에 여성참여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ㅇ계획 수립 중 |
| 2)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및 인사행정의 형평성 제고 | ㅇ고용구조 개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br>ㅇ인사행정에 여성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 ㅇ부분적 수행<br>ㅇ계획 수립 중 |
|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지원 | ㅇ산전·후 휴가제도 정착 및 법적 보호장치 이행여부 지도 | ㅇ사업 추진 중 |
|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촉진 | ㅇ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br>ㅇ고용촉진훈련 실용화 | ㅇ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 센터 연중 운행 |
| 5) 육아 휴직제 및 보육시설 설치지원 | ㅇ육아 휴직제 홍보 및 보육시설 지원<br>ㅇ지원금 상향조정 | ㅇ홍보활동 강화<br>ㅇ사업 추진 중 |
| 6) 논개 여성수련원 건립 | ㅇ논개 여성수련원 건립(여성전용수련원) | ㅇ중앙부처 협의중 |

자료: 강현욱 도지사 후보의 10대 공약 정책자료집(2002).

## 5. 전라북도 여성정책 향후 과제 - <위의 6. 조사결과 함의 부분 참조>

# 대전시 여성정책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운영 사례

이 갑 숙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Ⅰ. 시작하며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국정의 10대 의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걸 맞는 국가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행정체계가 지방분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발전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Ⅱ.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현황

### 1. 확대배경

□ 여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함으로써 대전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여성활동전반에 대한 지원등을 전담할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증대 요구

□ 여성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개발원등 설립 추진시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시에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정책 규제가 있어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은 잠정 보류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와 집행기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여성, 아동, 노인분야 등 여성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하여 운영

2. 운영방법

□ 기능

①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②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④ 여성관련 각종 정보 자료 수집, 분석과 시민제공

⑤ 여성기관, 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조사 및 대안제시

⑥ 여성정책위원회 소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역할

○ 여성정책위원회

- 위원장(시장) : 정책의 최종 결정(2003. 1월 위원장 '시장'으로 격상)
- 위 원 : 정책자문(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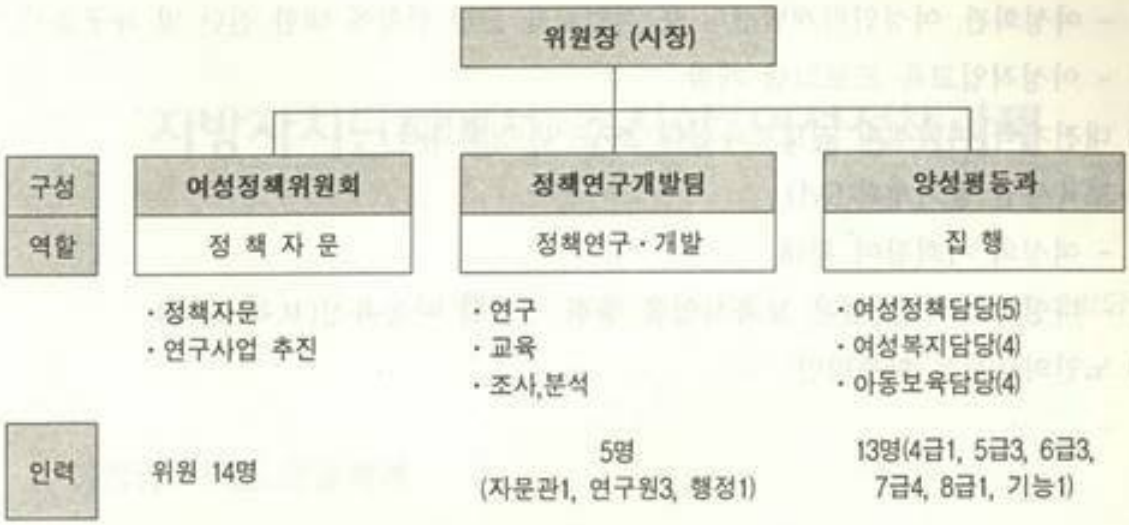
○ 여성정책개발팀(2003. 2. 설치)

- 자 문 관 : 여성정책 연구개발과 주요 집행기능 자문과 조정 역할
- 연구위원 : 정책개발에 따른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 양성평등과(2003. 1월 명칭변경)

- 사업예산 집행 및 업무 지원

□ 조직




3. 사업내용

① 대전양성평등헌장 제정

- 남녀의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주최 : 대전시

② 대전여성통계 연보 제작 발간 (최근 5년간 자료)

- 대전여성의 상태와 지위를 나타내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립과 분석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정보, 안전, 국제 비교

③ 대전여성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제작

- 대전여성의 생활모습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여성의 삶의 질 평가

④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워삽 및 릴레이 교육실시

- 양성평등문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Opinion Leader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새내기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 2003년 4월 - 2003년 12월까지

⑤ 여성정책세미나 개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 이슈화하여 사회적 관심 유도

- 지방분권과 여성아젠다

- 여성직업교육훈련

⑥ 여성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 및 욕구조사
-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 대전지역 여학생의 진로교육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⑧ 보육사업 중기계획(5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사업을 통한 건강한 아동육성(보육+교육)

⑨ 노인의료시설 확충방안

-

## Ⅲ. 나오며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을 전환시키고자 국가 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NOG간의 적절한 분담체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효율성제고와 여성의 삶의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분권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권한위임, 자율적 관리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리 주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여성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때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여성정책과제

이 경 숙 (경상북도 칠곡군청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

## 1. 여성정책추진 전달체계

### 1) 전문화된 여성정책 공무원의 필요성

○ 2001년 여성부의 발족아래 여성계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앞서가는 성주류화 여성정책이 지역에 사는 여성에게까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의 중요한 문제이다.

○ 중앙 정부와의 연계성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겸비한 여성정책의 개발이라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교육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여성학,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구축한 인적자원의 유연성 있는 영입이 시급하다.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의 실천현장인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정책부서와의 통합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제안 · 실천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2) 5급이상 여성공무원 목표제 강화

○ 공직에서의 여성에 대한 처우는 민간분야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함께 참여확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여성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는 여성이라고 볼 때 여성이 공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에 비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직과 정치계의 진출 수는 극소수이다.

○ 5급 여성공무원 목표제는 권고사항이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으므로 의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여성정책 추진과 함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고점으로 하는 등 강력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 농촌여성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수준의 열악으로 교육과 사회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NGO나 단체활동을 통한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여성 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부차적인 범주에 속해 농촌의 성비에 비해 예산이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 그러므로 지역일 경우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환경이 많으므로 농촌여성에 대한 여성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부에서 농촌여성에 대한 주된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야만 지역사회와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농촌여성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으리라 본다.

○ 「농가도우미제도」의 경우 출산에 한정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출산율은 아주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 농가도우미제도를 「노인 간병인」이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휴가」 부문 등 다양한 농촌복지 분야에서의 과제도 함께 개발되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우미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전문여성인력 양성

1) 여성직업훈련의 개선

○ 수도권 편향적인 직업훈련의 문제점

- 한 예로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전업주부 재취업 직업훈련』의 경우 2003년 34

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하여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교육비의 80%를 국비로 20%의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업주부에 대한 유망직종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나 전국의 51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중 25개소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정책의 지방화라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여성부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있는 여성회관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여성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여성교육협의체』의 구성

- 지역에서의 여성교육은 여성인적자원을 변화시킬 중심적 메카니즘이다. 특히 고학력화된 전업주부가 증가함으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을 동반할 수 있는 유망직종전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방 여성교육의 사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이를 통한 자격제도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 예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료·자격제도를 일원화 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자격취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시스템으로 어필되고 있다. 여성회관의 직업교육과정도 여성교육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여성부장관 명의의 자격제도 모듈화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체계적인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 여야 한다.

2) 여성경제활동 참가 확대

○ 여성 취업·창업 정보실의 확대

- 여성회관 위주로 1시군에 1개소씩 여성을 위한 효율성 있는 취업정보실의 설치가 시급하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여성을 위한 직업관련 기관인 「미래관」을 설립하여 명실공히 직업교육과 직업에 관련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곳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보책자와 함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알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현재에도 여성회관에서 교육과 병행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취업·창업 정보실의 공간을 갖추고 교양뿐 아니라 자격증이나 취업·창업에 관련된 도서를 구비하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화시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하여 교육훈련 진입단계부터 취업에 따른 사후단계에까지 이르는 교육훈련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의 원스탑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곳에서는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취업정보박람회, 소규모 창업 설명회,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 유도를 위한 세미나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업과 여성인력 연계를 통한 여성고용 창출과 여성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한다.

3)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강화

○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이 미래의 농촌사회 및 농업활동의 주 담당자가 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국제화와 개방화 경제 아래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능동적인 주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이에 칠곡군에서는 복지대상자와 함께 접하고 있는 필드에서의 필요성과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전국최초로 『칠곡여성농업인 대학』을 정책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칠곡여성농업인대학』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 학점인정제 + 자격증취득을 함께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영농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복지분야를 함께 커리큘럼화 하였으며 여성회관내의 농촌여성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칠곡여성농업인대학』을 소개하면

## 전국 최초 학점인정제 도입
# 〔칠곡여성농업인대학〕 운영

## ■ 목 적

여성농업인 훈련기관 부재
생산자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 위치

⇩

여성농업인대학

여성농업인으로
역할 증대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농업주체로서
전문인력화

## ■ 추진방향

〈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여성농업인 양성 〉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최초 대학체제 운영
▶ **국립대 경북대학교(평생교육원)와 관·학협동 체제 구축 학점인정제** 도입 (2년제 전문학사 취득과정)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여성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구성으로 교육운영 내실화

○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여성농업인과 신설**, 농한기 위주 **야간수업** 진행
▶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과목 선택으로 취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능력개발

## ■ 운영상황

○ **위탁교육기관** :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 **학　　과** : 여성농업인과 **※ 신규 개설**

○ 학 위 과 정 : 2년제 전문학사과정

○ 취 득 학 점 : 80학점

[ 최소 이수학점 ▷ 교양 15학점 · 전공 45학점 이상 ]

○ 모 집 대 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소지자

· 1순위 ▷ 칠곡군 거주 여성농업인

· 2순위 ▷ 칠곡군 거주 여성

※ 30% 범위내에서 남성농업인도 가능 (양성평등 실현)

○ 수강생모집 (여 37 · 남 4) ※ 평균연령 : 42세

| 계 | 1순위 (여성농업인) | 2순위 (일반여성) | 남성농업인 |
|---|---|---|---|
| 41명 | 30 | 7 | 4 |

○ 예 산 지 원 : 과목당 150천원

[ 군비 50 · 경북대 50 · 자부담 50 ]

○ 추진상황

· '03. 1. 28 칠곡군 ↔ 경북대학교 협약조인식 (칠곡군청)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위원장 - 군수, 19명)

[ 학계 5명 · 유관기관 6명 · 농업인단체 8명 ]

· '03. 3. 10 2003년도 1학기 입학식 (경북대학교)

· '03. 3. 31~4. 1 우수 영농단지 견학 및 운영활성화 현지연찬회 (포항 · 경주)

## ■ 기대효과

○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잠재능력 극대화

○ 농촌여성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직업능력 개발 공유

○ 여성농업인의 목소리 정책반영 및 실질적인 학력 상승효과로 삶의 만족도 제고

○ 여성농업인 교육분야의 획기적인 장르 개척으로 농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 3.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의 세력화

### 1) 여성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여성 주체 형성

○ 지역여성문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토대로 지역문제를 토의 해결 하기 위한 구심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토착화된 여성문화 개발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방향제시와 능동적인 자원재정은 지역여성문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칠곡군 사례>

- 칠곡군에서 육성하는 여성동아리는 한사랑회(풍물패), 아사모(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모임), 글마루(독서지도자), 우리 음식연구회(전통요리), 토화회(도자기), 색모아(천연염색) 등 11개회 250명이다.
- 여성회관에서는 동아리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재정등 모든 운영은 자율에 맡겨 회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 7월 여성주간에 맞추어 동아리 전시회를 개최하고 11월에 동아리가 주축이 된 『여성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동아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동아리 축제의 장을 열어 지역사회내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지역의 각종축제(아카시아축제, 낙동강평화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문화봉사활동을 실시 시설의 무료공연과 함께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여성동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강화는 관주도의 역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해갈 단체 및 조직, 그리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개발 및 지도자 연수 등 간접적인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여성들의 자발성을 학습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여성동아리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 교육, 여성문제 해결에 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건전한 지역문화 및 신뢰와 유대의 구축으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내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여성부에서는 지역여성동아리 육성을 위하여 동아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여성 NGO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들의 활동

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제도』나 시간을 적립해주는 『보상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지역여성친화적 공간 마련과 성주류화 정책

○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회관에서의 여성친화적인 공간과 성주류화 정책은 지역여성에게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예로 캐나다에서는 여성훈련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육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가정 밖의 가정(home away from home)』을 지향한다고 한다.

<칠곡군 사례>

- 여성전문도서실 운영
  : 여성학 관련 서적 1,000여권을 비치하고 지역여성을 문화도우미로 활용하여 참여동기를 부여
- 여성수요영화제
  : 매월 수요일 여성주의 영화를 선정 상영하고 패널을 초청, 토론으로 양성평등문화로의 인식의 지평 확대
- 여성학 과목 중심의 『여성대학』과 『여성지도자개발대학원』
  : 도비로 운영하는 여성대학의 교육을 여성학 중심으로 편성하여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여성대학 수료생 위주로 여성지도자개발대학원을 개설 연대감 있는 여성역량을 결집

# 분과별 워크샵

제 1 분과

# 정치 · 정책결정참여

사회 : **김 은 경** (세종리더십연구원 원장)

사례발표 1 **김 연 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대표)

사례발표 2 **황 성 욱**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기지부 대표)

# 2002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지방의회 선거 참여 사례

김 연 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3.4 지역자치위원회에서 추경숙을 민우회와 환경연합 공동후보로 선정. 지역자치위원회는 선거 종료까지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해 활동하기로 결정함.

3.13~5.22 1차 추경숙 선거대책회의 시작으로 10차례에 걸친 정기회의

5.23~6.13 선거운동기간 임박해서는 매일 수시 점검회의로 진행함.

## 1. 지역 홍보 및 이벤트

**1)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

기간 - 3월 ~ 4월중순

**2) 여성학강좌 [동북여성민우회 창립10주년 기념강좌]**

기간 - 4.10~ 5.1 (총 4회)

홍보 - 현수막, 전단(아파트단지 우편함, 장터시 배포), 언론홍보.

**3) 건강강좌 " 최민희 건강강좌**

일시 - 5.10 장소 - 세심천 노인정

홍보 - 전단, 현수막

**4) 여성정치참여 축제 [ 원뎅이골 음악회 ]**

일시 - 5.25(토) 오후 7시 장소 - 세심천 배드민튼장

홍보 - 전단, 현수막. 언론홍보

참석인원 - 200여명

내용 - 아쿠아렐플루트 앙상블, 소리울클라리넷, 장수철 기타 독주, 크루너, 장재남, 솔바람(환경연합노래패), 김애영 출연

- 클래식, 가요, 민요와 연주를 병행해 지역에서의 작은음악회로 개최해 반응이 매우 좋았음
- 시작멘트, 중간멘트로 우리 정치현실과 여성들의 투표참가를 권유함.
- 2001년 도봉구 여성예산 분석한 신문 '지역살림은 우리손으로' 와 뱃지 배포.
- 사회자로 후보를 정하려 했으나 선거법상 불가능해 이혜정, 서형원이 진행했고 후보는 행사장 입구에서 인사하다 선관위의 제지로 중지함.
-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후보들 와서 인사하고 다니다 선관위의 제지로 중지함.
- 중앙유선방송에 보도됨

내용 - 문화행사(시민후보 로고송 함께 부르기), 경과보고, 축사, 추대발언, 후보들의 정책발표(빔프로젝트 이용), 서약식(후보와 회원들이 깨끗한 선거 다짐), 식사(각자 2천원내고)

- 도봉구의 무소속 시민후보 2명의 발대식을 공동으로 하며 언론의 조명을 받고자 함. 민우회 회원들, 타단체 회원들, 환경통신원들 참여해 시민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집결된 힘을 보여주고 차별성을 부각시킴.

## 2. 조직

### 1) 간담회 : 3월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여성학강좌, 생협, 선거출마 등의 이야기를 모임의 성격에 맞추어 진행함.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변사람 모아 주선.

**총 31회 150여명 만남**

### 2) 면담 : 3월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총 60여명 만남**

3) 상가방문 : 후보와 참모

4) 배드민튼 : //

- 세심천 배드민튼 회원에 가입해 매일 새벽에 운동함. 선거 임박해 출마를 알리고 도움을 많이 받음

3. 정책

1) 공약마련

기간 - 4.22 ~ 선거 전

내용 - 예산 : 과시성예산, 환경파괴 예산, 불필요한 해외연수 막겠다.
도봉구재정계획심의에 시민단체소속 공인회계사 참석시키겠다.
아파트시민학교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요인 찾아내 절약한 비용 주민에게 돌리겠다.

- 환경 : 쌍문근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시키겠다.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천연가스연료 도입을 확대하겠다.
마을환경위원회 만들겠다.
지방의제 21 제대로 추진하겠다.

- 여성보육 : 낭비성예산 줄이고 여성, 보육예산 늘리겠다.
구립 방과후교실, 24시간 어린이집 늘리고 30~40대 여성의 사회참여 위한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초당초교 앞 도로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설치하고 학교급식관리 조례 추진하겠다.

- 마을공동체 : 방학4동 유적지에 대한 문화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프랑스 지방자치 어린이의회를 도입하겠다.
정보화 마을공동체 만들겠다.
청구아파트부녀회의 모범적인 도서실 운영사례를 확산시키겠다.

2) 합동유세문 작성(20분)

3) 개인연설회 유세문 : 합동유세문과 거의 동일.

## 4. 총평

동북여성민우회는 93년부터 지방의회 방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95년에는 밖에서 요구하던 것에서 한단계 나아가 후보를 발굴해 여성, 복지, 환경이슈를 대변할 대리인을 의회에 파견하는 활동도 했다.

2002년 선거를 맞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후보를 발굴하려 노력했지만 정치에 대한 회의와 여성으로서 부여되는 제 역할, 가족의 동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민우회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추경숙씨가 방학4동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여성비율 2.2%, 도봉구의원 중 여성의원 전무라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일해온 추경숙을 민우회와 공동후보로 선정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민우회 본부와도 상의해 공식후보로 정했다.

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고 아이들도 어려 개인적인 지지기반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한살림, 참교육, 도봉시민회)들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도움을 주었다.

선본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강도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매우 즐겁고 흥겹게 운동을 했다. 팀원들간에 융화가 매우 잘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한다. 일이 고되면 서로들 예민해져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번 선본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높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과 조직이 갖고 있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장이라 여겨진다.

집권여당에 대한 환멸로 한나라당에 몰표가 나온 이번 선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시민후보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사온지 3개월밖에 안된 우리 후보는 상대후보들에게 계속적인 공격(떠날사람이다. 지역을 모른다)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민주당에서 여성후보가 나온 것도 여성표를 분산시켜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역에 기반해 10년동안 활동해온 민우회의 인지도와 신뢰가 조직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환경연합의 활동들 역시 시민단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환경연합의 실무진과 민우회원들, 각 단체가 각기 잘해오던 장점들을 발휘해 선거라는 과정에서 하나로 발휘되었기에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밭, 또다른 여성후보 출마라는 악조건을 극복해 당선에 이른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무소속 시민후보 출신으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황 성 욱**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기지부 대표)

제 2 분과

# 고용 · 인력개발

사회 : **고 선 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장)

사례발표 1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사례발표 2 **한 난 영**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팀장)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 인력계발을 위한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 난 영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팀장)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는 2002년 9월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 1기 1,942명(기술교육 911명, 생활문화 1,031명), 2003년 2기 2,058명(기술교육 847명, 생활문화 1,211명)의 수료생 배출하였습니다.

고용 및 인력계발 측면에서 사례를 소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인력을 개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측면에서의 방향과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출발이 늦은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선배 기관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하여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기존 강좌의 심화·고급과정, 센터특화과정, 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 프로그램사례 | | 수료생수(동아리회원수) | 연령 | 학력 | 특징 |
|---|---|---|---|---|---|---|---|
| | | 강좌명 | 동아리명 | | | | |
| 심화학습프로그램 | 정규강좌 | 그래픽스기능사 과정 | | 현수강생 24명 | 20대 73.3% | 대졸 50%<br>초대졸 13.3% | - 1,2기 정보화관련 강좌 운영 평가에 의거 개설<br>- 센터 수료생 20%<br>타기관 이수생 50%<br>기타 30% |
| | 심화학습형동아리 | 글쓰기독서지도사 | 책사모 | 66명<br>(45명) | 30대 76% | 초대졸이상 65% | 활동 중지 |
| | | | 글쓰기독서지도연구회 | | | | - 전문탐구형동아리로 발전 |
| | | 전문출장조리사 | 요리사랑 | 57명<br>11명 | 30대 33.3%<br>40대 40.4%<br>50대 24.6% | 초대졸이상 28%<br>고졸 63% | - 격월 1회 모임<br>- 11명 전체 활동 중<br>- 지도 : 강사(무료봉사) |
| | | 헤어연구 및 심화 | 동부미사모 | 52명<br>10명 | 10대 19.2%<br>20대 23.1%<br>30대 38.5%<br>40대 21%<br>50대 5.8% | 대졸이상 9.6%<br>초대졸 15.3%<br>고졸 59.6%<br>중졸 9.6% | - 심화학습 +자원봉사<br>- 주1회 미용봉사<br>- 주2회<br>- 창업부스(보육센터)검토 중<br>- 지도 : 강사(무료봉사) |
| | | 제과제빵 | 하나회 | 139명<br>14명 | 연령대 다양 | 대졸 37.5%<br>고졸 37.5% | - 심화학습 +자원봉사<br>- 센터 관련강좌 2개 이상 이수생 87.5%<br>- 지도 : 강사(유료봉사) |
| | 전문탐구형동아리 | 글쓰기독서지도사 | 글쓰기독서지도자과정 | 66명<br>17명 | | | - 글쓰기독서지도연구회 +신규회원<br>- 월2회 모임<br>- 7명이 강사로 활동 중<br>- 지도 : 회원간 스터디 필요 시 강사 초빙 |
| 센터특화프로그램 | 정규강좌 | 문화해설사 | | 1기 13명<br>2기 11명<br>3기 15명 | 30대 41%<br>40대 33.4%<br>50대 25.6% | 대졸이상 53.9%<br>초대졸 10.3%<br>고졸 35.9% | |
| | 지역복지 | 문화산책, 미술관산책, 터사랑 | | | | | |
| | 협력사업 | 여성문화아카데미 | 문화기획과정 | 24명 | 20대 45.8%<br>30대 37.5%<br>40대 8.3%<br>50대 8.3% | 대졸이상 79.1%<br>대재 16.7%<br>고졸 4.2% | - 이론, 실습, 취업 |
| | | | 영상제작과정 | 12명 | 20대 75%<br>30대 25% | 대졸이상 66.6%<br>대재 33.4% | - 이론, 실습, 취업 |
| | | 문화자원봉사자교육 | | 24명 | 20대 4.2%<br>30대 16.7%<br>40대 50%<br>50대 25%<br>60대 4.2% | 대졸이상 79.2%<br>초대졸 8.3%<br>고졸 16.7% | |
| | 대관사업 | 가시버시혼인준비교실, 양성평등예절강사양성과정, 주부생활경제아카데미 | | | | | - 청여원 연계, 생활문화 |

(계 속)

| 구분 | | 프로그램사례 | | 수료생수 (동아리회원수) | 연령 | 학력 | 특징 |
|---|---|---|---|---|---|---|---|
| | | 강좌명 | 동아리명 | | | | |
| 시범프로그램 | 취업·창업유망 | 쥬얼리 아카데미 | | 15명 | 20대 46.7%<br>30대 46.7%<br>40대 13.3% | 대졸이상 40%<br>초대졸 26.7%<br>고졸 26.7% | - 감정사, 제작기능사 통합 과정<br>- 프랜차이즈취업 및 창업 유망<br>- 인터넷쇼핑몰 창업 유망<br>- 홈쇼핑 취업 유망<br>- 정규교육기관 진학 가능<br>- 연계 : 한국시스템쥬얼리 연구소장<br>국제보석연구원장<br>백승철쥬얼리아카데미원장 |
| | | 여성점장양성과정 | | 12명 | 20대 33.3%<br>30대 41.7%<br>40대 25% | 대졸 50%<br>초대졸 25%<br>고졸 25% | - 이론 및 실습교육->취업 연결<br>- 연계 : 예라고(서비스컨설턴트 전문회사)<br>비즈니스유엔(창업컨설턴트 전문회사) |
| | 단기창업가능 | 인터넷쇼핑몰창업(E-business) | | 21명 | 20대 19.1%<br>30대 71.4%<br>40대 9.5% | 대졸 47.6%<br>초대졸 28.3%<br>대재 19%<br>고졸 4.8% | - 정보통신부지원사업<br>- 수강생의 54.6%가 본 센터 기존강좌 이수생 |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과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평가와 과제 그리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 평가 및 과제

ㅇ개인의 능력계발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 Up-grade와 Building
- Network의 활용
- 모험적 시도 및 지원 등의 방향 설정 바람직

ㅇ개별 case에 대한 management 필요

ㅇ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ㅇ연령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동아리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

## □ 정책제언

ㅇ운영 기관의 자율성 강화

ㅇ현실적 인력 확보 및 활용

ㅇ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

ㅇ사회적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제 3 분과

# 여성복지서비스

사회 : **박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사례발표 1 **장 혜 순** (서울시 여성정책과 늘푸른여성팀)

사례발표 2 **김 문 숙**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 10대 가출소녀들의 실태 및 대책

장 혜 순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

## Ⅰ. 10대 가출청소녀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2001)에 의하면 첫 가출의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25.2%, 중학교 1학년 때가 20.7%, 중학교 2학년 대가 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어린나이에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가출로 인한 폭력, 절도, 약물중독, 청소년성매매와 같은 각종 비행이나 범죄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가출청소년은 노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아직 성인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가족과 분리되어서 자신의 독립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가족 밖의 생활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서울 여자청소년 가출경험율 : 9.0%(남자 15.6%)
- 서울시 청소년 전체 가출경험율 : 11.7%
- 전체청소년 가출경험율 : 10.4%(1998), 17.3%(2001)

○ 서울 여자청소년 가출충동율 : 79.1%(남자 73.0%)
- 서울시 청소년전체 가출충동율 : 76.4%
- 전체청소년 가출충동율 : 71.1%

○ 서울 여자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 74.6%(남자 68.3%)
- 쉼터입소자들의 가출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 41.2%(남자 32.5%)

○ 가출여자청소년의 가출 후 윤락 및 유해업소 종사경험
- 술집 · 단란주점 :15.2%(남자 3.5%)
- 성매매 : 9.2%(남자 0.0%)

○ 중 · 고등학생 성매매경험자 중 여학생의 비율 : 71.4%(남자 28.6%)
- 중 · 고등학생 성매매경험비율 : 1.8%
※ 서울시 심야거리상담을 통해 나타난 성매매경험비율 : 4.2%
- 중 · 고등학생 성매매경험자 중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 48.6%
- 서울시 심야거리상담을 통해 나타난 성매매충동비율 : 17.5%
※ 가출전후에 따른 여자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율 : 가출전 9.7%, 가출후 12.4%

○ 성매매충동을 느낀 중 · 고등학생 중 여학생 비율 : 71.7%(남자 28.3%)
- 성매매충동을 느낀 중 · 고등학생 비율 : 12.5%
※ 주위에서 성매매에 대한 유혹을 받은 중 · 고등학생비율 : 14.4%
※ 서울시 심야거리상담을 통해 나타난 성매매유혹경험 : 51.0%
- 성매매경로 : 인터넷채팅(69.0%), 전화방(27.4%), 유흥업소를 통해(26.2%)

○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가출여자청소년이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주거서비스(1순위), 정보제공서비스(2순위), 상담서비스(3순위), 교육서비스(4순위) 등
※ 가출여자청소년이 가출시 희망하는 서비스 : 의식주해결(49.7%), 개인상담(24.2%), 직업훈련 · 취업알선(18.3%), 부모가족상담(10.3%)

○ 가출여자청소년이 가출후 청소년관련기관을 알게 된 경위
- 몰랐음(31.4%), 상담소(12.4%), 경찰(12.1%), 친구나 선후배(11.6%)
- 전체가출청소년이 청소년관련기관을 모르고 있는 경우 : 45.7%

※ 여성개발연구원(1997), 서울YMCA청소년쉼터(1996,1998),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경찰청(2002)

## Ⅱ. 가출의 원인

청소년 가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류하면 청소년 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적인 요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한 한 가지 원인으로 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가출은 이해되어져야 한다.

1. 가정환경: 부모의 약물중독, 폭력, 경제파탄등으로 인한 기회의 박탈 및 스트레스적 사건의 연속들이 가출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강압적인 훈육태도나 책망이 청소년 가출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것은 부모 자녀간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의 갈등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2. 환경요인(학교): 외토리, 성적저하, 열등감, 낙인, 입시 중압감, 비행집단과의 관계들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된 요건으로 보고 있다.
3. 사회환경: 유해환경의 노출,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실수나 실패를 한 청소년들을 용납하지 않고 소외시켜며 낙인찍는 사회의 상황들을 들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이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 가정과 학교가 이들 청소년을 몰아내는 힘,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유해한 사회환경 등의 3가지 요인들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Ⅲ. 가출의 유형

1. 시위형 가출: 부모의 갈등 혹은 가족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적 가출이다.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원하며 가정이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제해결방법이 충동적이며 비합리적 이나 또래들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가출기간이 단기적이고 가정복귀 가능성도 높으나, 부모의 미숙한 대처방식으로 인해 반복적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도피형 가출: 부모의 과도한 기대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일시적 피난행위

로서의 가출을 의미한다. 이들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비해 무력한 자신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부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경미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유희형 가출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의 처벌이 두려워 일시적으로 집을 나오는 청소년의 경우도 속하게 된다.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되며 가정복귀후 예상되는 처벌이 두려워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탈출형 가출: 가정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한 가출을 의미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에 대한 적대감정이 많다. 부모의 폭력, 학대 등으로 나오는 경우이며 가정의 자원 자체가 빈약하고 심리적 지지망 자체가 붕괴되었을 경우가 많으므로 전형적인 고위험 저보호 요인에 해당되어 가출이 장기화 되고 비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다.
4. 탐험적 가출: 자기완성을 위한 실존적 가출로서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완성의 욕구가 강한 편이다.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나오는 경우이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다니고,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유희 추구형: 가정내의 갈등보다 유희 추구가 1차적 목적으로써, 개인적으로 가출하기보다 또래들과의 집단적 가출이 많고 단기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기위해 노력한다.
6. 자아 상실형: 삶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한 채 떠도는 가출을 말한다. 지속적이고 장기화된 좌절로 인해 자아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특별한 목적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쉽게 비행집단에 빠지게 된다.
7. 버려진 가출로 부모의 사망,이혼 등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면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나온 아이들이다.

## Ⅳ. 가출 청소년의 문제점

가출 청소년들은 먹을것과 잠잘 곳을 구하기 위해 약물 팔기, 물건 훔치기, 구걸, 성매매 등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으며 불안함과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가출 청소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경제, 직업, 교육, 정서, 대인관계, 건강, 가족, 가치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으로써는 정보제공서비스, 장기/단기 주거 서비스, 상담, 교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재활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등이다.

### ※ 가출 · 성매매 청소녀의 특성

- ㅇ 가출 성매매 청소녀는 대부분 가정폭력, 성폭력, 임신 및 성병, 약물 경험이 있어 의식주, 정서, 신체건강, 교육 등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음.
- ㅇ 또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성적 주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
- ㅇ 성매매 경험 청소녀들의 주된 성매매 이유는 '가출후 생활비 마련(88.2%)'이며, 성매매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비율이 43%('00년 23%)로 매우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왜곡된 근로의식'을 보이고 있음.
- ㅇ 가출 청소녀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의 결여, 각종 폭력과 약물의 경험, 공격적인 성향, 높은 스트레스와 열등감, 우울증과 신경질적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Ⅴ. 10대 가출소녀의 대책

가출청소녀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가출청소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희생양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아이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보니 가출을 개인에게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높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이들의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법적 ·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권익의 보호와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쉼터, 학교등이 정책적으로 일원화 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셋째는 쉼터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각종 대안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교육기회의 확대로 중도탈락한 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연계된 기관을 이용한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국가적인 종합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출예방책의 실시로 이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복지관, 의료기관, 학교, 자원봉사기관, 법률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간의 체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출청소

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으로는 상담실, 사회복지관, 학교, 보건소,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산재한 자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보다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가출청소년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를 위한 보건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과의 협조도 바람직하다.

이렇듯 가출청소녀들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있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가출문제와 대처방안들을 개발해내는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진행해온 사업들을 이 시간에 짧게나마 정리하고 가출청소녀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쉼터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가출청소녀들이 현재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지도 관점인 단기적, 처방적 방법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자율적, 창조적 존재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들이 개발 ·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출청소녀의 문제는 개인, 학교, 사회환경 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고, 가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하는 '가출청소년지원센터'설립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해 주므로써 효율적인 쉼터운영과 민 · 관의 상호 보완된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을 통해 가출청소녀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킴으로 건강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 ◎ 가출청소년를 위한 예방 및 보호 · 재활프로그램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 1. 목적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월 가출 · 성매매 여자청소년 전담기구인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10대 가출청소년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 유해한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 및 상처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출예방, 보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이들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사업내용

#### 1) 가출 · 성매매 예방 정보지원체계 구축

○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상담실 운영** : 위기상황 및 유해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계서비스 제공

- 전화, 인터넷, 내방, 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접근성을 높임 (상담전화 : 02-322-1366, 02-336-1366 http://1318.seoul.go.kr)
- 초기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서비스기관(보호, 심리, 의료, 경찰, 직업 등)에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제공함
-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출 ·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 (성교육,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 **심야거리상담 실시** : 청소년 가출은 초기 정보부족등으로 원조교제 및 비행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직접 쉼터 등 보호서비스와 성 관련 정보 제공

※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직접 공공근로자를 파견하여 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주2회 거리상담을 실시(목요일 : 여의도 고수부지, 금요일 : 동대문 두산타워 앞)

○ **종합정보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 가출청소년에게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하여 보호시설에 대한 초기 접근을 제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출과 유해환경에 대한 계몽 홍보물을 게시하여 성매매 유

입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웹진 및 홈페이지 운영** : 네티즌이라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가출·성매매 10대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및 원조교제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가출·성매매 등 유해환경으로의 유입 방지·예방·선도·홍보를 위해 동영상매거진(웹진) 및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꼴로 청소년 성매매 제의 받아 이 가운데 16%는 실제 성매매에 응했다는 설문 조사결과(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 보호자협의회 조사)

○ **종합정보화 자료실 운영** : 가출·성매매 관련 청소녀 및 보호시설 유관기관등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자료를 총구비한 종합정보자료실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다양한 최신 정보 제공

**2) 가출·성매매 청소녀 보호 및 재활지원**

○ **가출청소녀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출 청소녀의 문제유형별로 개발된 특화프로그램(테마여행)을 보호시설에 보급하여 유해환경 재유입 방지

- 정서적 치료프로그램 : 13분야(가정폭력·성폭력·학교부적응, 학업지원·임신·성매매·약물·검정고시·생활메너교육 등)
- 의료지원 프로그램 : 신체건강·정신건강등

○ **성교육장 운영** :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녀, 실업계 여고생 및 유해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결정의 기준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장 운영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함

○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출·성매매 경험 청소녀들의 귀가 후 재가출비율이 높으므로 보호시설 퇴소 전후에 가족·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가출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

### 3) 가출청소녀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 **네트워크 지원사업** : 가출청소녀를 위한 민·관의 상호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가출청소녀 자활능력 배양 및 종합적 재활 극대화

- 상담, 문화, 직업, 경찰, 의료, 법률, 보호시설등

○ **보호시설 전문교육 및 워크샵** : 가출관련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워크샵)를 통해 관련시설간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

## <서울시 가출·성매매 청소녀 보호시설 현황>

일시/단기시설(선도일시보호시설 - 7)

| 번호 | 단체명 |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FAX | 대상 | 연령 성별 | 정원 | 이용 기간 |
|---|---|---|---|---|---|---|---|---|
| 1 | 나자렛 쉼자리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동작구 노량진동 | T 826-3274 F 824-5796 | 가출 청소녀 | 13~19 (여) | 10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2 | 평화의 샘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동작구 상도2동 | T 825-1274 F 825-1273 전화·팩스 겸용 | 성폭력성매매 우려자 | 10대 (여) | 10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3 | 우리들 쉼자리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성북구 성북1동 | T 765-0635 F 764-4786 | 가출 가출 및 성매매우려 청소녀 | 12~20 (여) | 10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4 |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 T 867-1255 F 867-9682 | 가출 가출 및 성매매우려 청소녀 | 12~19 (여) | 7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5 | 성심의 어머니 집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서울 화곡본동 | T 691-4365 F2601-3292 | 미혼모 | (여) | 10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6 | 씨튼 해바라기집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성북구 성북1동 | T 747-1260 F 747-8488 | 가출 청소녀 | 12~20 (여) | 10 |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
| 7 | 강남구 청소년 쉼터 | 선도일시 보호시설 (윤방법) | 강남구 삼성2동 | T3453-1318 | 가출 청소녀 | 11-18 | 13 | 3개월 |

## 일시/단기시설(쉼터 - 5)

| 번호 | 시설명 |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FAX | 대상 | 연령 성별 | 정원 | 이용기간 |
|---|---|---|---|---|---|---|---|---|
| 1 | 시립 구로 청소년쉼터 | 쉼터 시방침 | 금천구 가산동 | T3281-8205 F3281-8202 | 가출 및 성매매우려청소녀 | 12~20세(여) | 30 | 1~3개월 |
| 2 | 구립 노원 청소년 쉼터 | 쉼터 구방침 | 노원구 중계본동 | T3391-2662 F3391-2662 전화·팩스겸용 | 가출 및 성매매우려청소녀 | 9-24세(여) | 6 | 1-6개월 |
| 3 | 딸부자집 | 쉼터 법무부 산하단체 | 송파구 방이2동 | T3431-8218 F3431-8218 전화·팩스겸용 | 교정대상 | 20세이하(여) | 15 | 1년 |
| 4 | YMCA 청소년쉼터 | 쉼터 인가 | 종로구 창성동 | T 735-1366 | 가출 및 성매매우려청소녀 | 13-18세(여) | 10 | 1개월 (1회연장) |
| 5 | 청소년쉼터 또 하나의 집 | 쉼터 미인가 | 동대문구 제기2동 | T 925-5484 F 928-1765 | 가출 및 성매매우려청소녀 | 10-18세(여) | 8 | 1-6개월 |

## 중기시설(선도보호시설- 3, 아동직업보호시설-1)

| 번호 | 단체명 |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 대상 | 연령 성별 | 정원 | 이용 기간 |
|---|---|---|---|---|---|---|---|---|
| 1 | 한국여성의집 | 선도보호시설(윤방법) | 서울 마포구 창천동 | T 333-7511 F 332-2641 | 윤락행위 우려자 | 10-25세(여) | 30 | 6개월 (1차연장가능) |
| 2 | 은성직업 기술원 | 선도보호시설(윤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 T843-3872 844-0486 F836-7196 | 윤락행위 우려자 | 15-30세(여) | 35 | 6개월 (1차연장가능) |
| 3 | 유프라시아의 집 | 선도일시보호시설 | 구로구 개봉본동 | T684-4438 메일로 보내기 | 미혼모 | 10~25(여) | 12 | 6개월-3년 |
| 4 | 마자렐로 센터 | 아동복지자립훈련시설(아동복지법) | 영등포구 신길5동 | T 832-5796 F 832-5718 | 가출 및 성매매 우려 청소녀 | 10대(여) | 30 | 최대 6개월 |

## 장기시설(그룹홈-15, 미혼모 보호시설-2)

| 번호 | 시설명 | 구분 | 주 소 | 전화번호 FAX | 대 상 | 연령 성별 | 정원 | 이용기간 |
|---|---|---|---|---|---|---|---|---|
| 1 | 쟘마의 집 (초등생중심) | 그룹홈 미인가 | 강서구 화곡본동 | T690-8461 F2604-0634 | 결손 | 5~18 (여) | 20 | 제한없음 |
| 2 | 로뎀나무의 집 | 그룹홈 미인가 | 서대문구 충정로 2가 | T 363-6036 | 아동 | 13세미만 여아동 | 7 | 1년 |
| 3 | 막달레나의집 | 그룹홈 미인가 | 용산구 한강로2가 | T794-8384 798-6386 | 성매매 | 제한없음 (여) | 10 | 자립전까지 |
| 4 | 다비다의 집 | 그룹홈 미인가 | 중랑구 중화3동 | T432-0114 F2207-4312 | 결손, 가출 | 8~자립 시까지 (여) | 20 | 자립전까지 |
| 5 | 행복한우리집 | 그룹홈 미인가 | 관악구 봉천 9동 | T877-7942 F877-7942 겸용!! | 가출 및 성매매우려 청소녀 | 14~19 (여) | 8 | 1년이상~ 가정복귀, 자립전까지 |
| 6 | 착한목자의 집 | 그룹홈 미인가 | 마포구 염리동 | T703-5809 F703-5809 겸용!! | 결손 | 15~19 (여) | 8 | 1년~2년 |
| 7 | 고척동 만남의집 | 그룹홈 미인가 | 구로구 고척 2동 | T 689-9715 F 689-9770 | 결손 | 6세~16 (여) | 10 | 고교졸업 까지 |
| 8 | 방학동 나눔터 | 그룹홈 미인가 | 도봉구 방학 동 | T 956-0014 F6223-0014 | 교정대상 | 13~20 (여) | 6 | 무제한 |
| 9 | 소녀들의 보금자리 나자렛집 | 그룹홈 미인가 | 양천구 신월3동 | T691-5960 F824-5796 | 가출, 결손가정 | 13-20세 (여) | 13 | 1-6개월 |
| 10 | 라우라 자립관 | 장기그룹홈 미인가 | 영등포구 대림동 | T832-5791 F843-5791 | 가출 및 성매매 | 12-20세 (여) | 3(6) | 6개월- 1년 |
| 11 | 애란 세움터 | 장기 그룹홈 | 서대문구 북아현동 | T 363-4750 F 392-9933 | 가출여자 청소녀 | 12-20세 (여) | 6 | 2년 (6개월 여장가능) |
| 12 | 테레사의 집 | 그룹홈 미인가 | 은평구 응암 3동 579-34 | T 303-4301 | 아동 | 3세-13세 여아동 | 15 | 3년이상 |
| 13 | 정릉종합사회 복지관 부설 청소년구룹홈 | 그룹홈 미인가 | 성북구 정릉3동 | T 909-0434 F 909-0437 | 알콜중독 부모로 인한 가출여자 청소녀 | 13-18세 | 6 | |
| 14 | 성모의 집 (하늘이네) | 그룹홈 미인가 | 은평구 신사동 | T 352-4643 F 354-4998 | | | 15 | |
| 15 | 구세군 여자관 | 미혼모 보호시설 | 서대문구 | T 363-5722 | 미혼모 | | 35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 16 | 애란원 | 미혼모 보호시설 | 서대문구 | T 363-4750 F 392-9933 | 미혼모 | | 40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 17 | 하늘이네 | 미인가 | 광진구 구의동 | T 452-9148 | | | 10 | |

자립터-2

| 번호 | 시설명 | 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br>FAX | 대 상 | 연령<br>성별 | 정원 | 이용기간 |
|---|---|---|---|---|---|---|---|---|
| 1 | 청운<br>자립생활관 | 자립시설<br>(아동복지법) | 동작구<br>상도3동<br>290번지 | T823-3365<br>F823-3365 | 육아시설<br>퇴소자 | 18~24<br>(여) | 30 | 3년<br>(연장<br>가능) |
| 2 | 상록여자<br>자립생활관 | 자립시설<br>(아동복지법) | 관악구<br>남현동<br>1083-29 | T588-7097<br>F521-1577 | 육아시설<br>퇴소자 | 24세미만<br>(여) | 30 | 3년<br>(연장<br>가능) |

김 문 숙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제 4 분과

# 가정 · 직장양립지원

사회 : **황 윤 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사례발표 1 **남 미 영** (새터어린이집 원장)

사례발표 2 **정 재 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담당)

남 미 영 (새터어린이집 원장)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정 재 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담당)

## Ⅰ.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각종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애주기(Life-cycle)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인 사회이념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문제도 어려운데 여성장애인 문제는 또 웬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여성문제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여성단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소리 높은 요구가 있었으며 학문적인 연구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관내 여성장애인사업을 실시하는 곳에 프로그램을 선정 · 심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6월에는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책자를 발간 · 관련 기관등에 배포하였다.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조사결과, 정부에 대한 시책 기대욕구로 생계비지원, 취업기회확대, 복지시설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수요 요구율 : 산후조리(85.6%),정기건강(83.6%),임신출산정보 및 교육(82.7%), 성폭력 상담소

* 본 글은 우리 시 2003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지원현황중심으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78.3%)순으로 요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올 2003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도우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Ⅱ. 본문

우리 시 여성장애인의 등록 수는 2003년 1/4분기 현재 전체장애인 219,980명 중 681810명으로 32%며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김경혜외, 2002.6)에서는 서울시 등록장애인, 20대~60대 1872(100%)명중 기혼 혹은 동거가 907(48.5%)로 서비스 대상자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영세한 가정의 장애인 산모는 산후조리기간의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유를 하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중증의 여성지체장애인은 출산이 가까운 시기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및 가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출산 후에도 거동이 힘들며 손 힘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영아의 목욕, 기저귀 갈아주기 등 영아육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가정에서의 거동 및 외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커다란 곤란을 얘기하였다.

이에, 2003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사업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여 장애정도, 배우자 장애여부, 가족지원 체계 등을 고려 대상자를 확보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함

○지원대상 시설유형 :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주요 서비스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의 산후조리지원

- 여성장애인의 육아와 가사지원 파견
-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도우미 양성교육 · 관리
-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부인과 진료와 건강관리)
- 임신, 출산,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부대사업)

○지원대상 시설 선정

· 2001~2002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 재가여성장애인 수가 많이 분포되어 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곳
· 여성장애인전문기관으로 서비스대상자가 여성장애인 중심인 곳

- **대상시설**

| 구 분 | 자치구 | 지 원 대 상 | 비 고 (권역별) |
|---|---|---|---|
| 1권역 | 노원구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
| 2권역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
| 3권역 | 구로구 | <여성장애인전문기관><br>성 · 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 |
| 3권역 | 구로구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
| 4권역 | 강동구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

○총 소요예산 : 100,000천원 (20,000천원×5개소)

## Ⅲ. 결론

여성계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90년대 여성의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오던 모성건강과 사회분담화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 · 마련되어 구체적인 분담방안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더불어 양육의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조차 소외되었던 것이다.

이번,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지원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

공한 것은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서비스로서 어쩌면, 보다 일찍부터 제공되었어야 할 사업임에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도서


- "재가(在家)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김경혜외, 시정개발연구원 2002.6
-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평가논문집, 여성장애인 운동과 발전방향, 이예자, 조옥, 정재우,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2
-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는 왜 사회의 책임인가?", 이미경, 건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도
서관여기여성이기록하고여
성이기억하는여성을기록하
고여성을기억하는바로이곳
성평등도서관여기여성이기
록하고여성이기억하는여성
을기록하고여성을기억하는
바로이곳성평등도서관여기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 서 관 여 기

성평등
도서관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재단법인 서울여성
156-80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TEL : 02-810-5000 FAX : 02-810-5100
www.seoulwomen.or.kr